

**한일학자들이 진단하는  
일본 교과서 한국사 기술**

**일시 | 2022.8.25 (목) 9:30~18:00**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학술대회 일정 및 내용

9:30~9:50	<b>개 회</b>		사회: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개회사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축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9:50~12:30	<b>[ 제1부 ]</b>		사회: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발표자	발표주제	
발표 1	스즈키 토시오 (아이들과 교과서전국네트 21)	고등학교 교과서 등의 검정 결과와 교과서 공격의 새로운 단계	
발표 2	박한민,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2022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석	
발표 3	와타나베 미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	
토론	이신철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12:30~14:00	휴 식		
14:00~16:30	<b>[ 제2부 ]</b>		사회: 이병택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 센터장)
발표 1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2022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사탐구』의 고대 한일관계 서술 분석	
발표 2	조 건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고등학교 '탐구' 교과의 한국근대사 서술 분석	
발표 3	가토 게이키 (히토쓰바시대)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드러난 조선 식민지 지배 기술과 그 특징 —— '역사종합'을 중심으로 ——	
토론	신가영 (연세대),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홍종욱 (서울대)		
16:30~16:40	휴 식		
16:40~18:00	<b>[ 제3부 ] 종합 토론</b>		사회: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토론자: 참석자 전원		



## 목 차

[제1부]	7
[발표 1] <b>고등학교 교과서 등의 검정 결과와 교과서 공격의 새로운 단계</b> .....	9
스즈키 토시오 (아이들과 교과서전국네트 21)	
[발표 2] <b>2022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석</b> .....	65
박한민,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발표 3] <b>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b> .....	89
와타나베 미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토론] 이신철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	117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제2부]	00
[발표 1] <b>2022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사탐구』의 고대 한일관계 서술 분석</b> .....	00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발표 2] <b>일본 고등학교 ‘탐구’ 교과서의 한국근대사 서술 분석</b> .....	00
조 건 (동북아역사재단)	
[발표 3] <b>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드러난 조선 식민지 지배 기술과 그 특징</b> .....	00
—— ‘역사종합’을 중심으로 ——	
가토 게이키 (히토쓰바시대)	
[토론] 신가영 (연세대) .....	00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홍종욱 (서울대)	



## [ 제1부 ]

- 
- [발표 1] **고등학교 교과서 등의 검정 결과와 교과서 공격의 새로운 단계**  
스즈키 토시오 (아이들과 교과서전국네트 21)
- [발표 2] **2022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석**  
박한민,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 [발표 3]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  
와타나베 미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 [토론] 이신철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



[ 발표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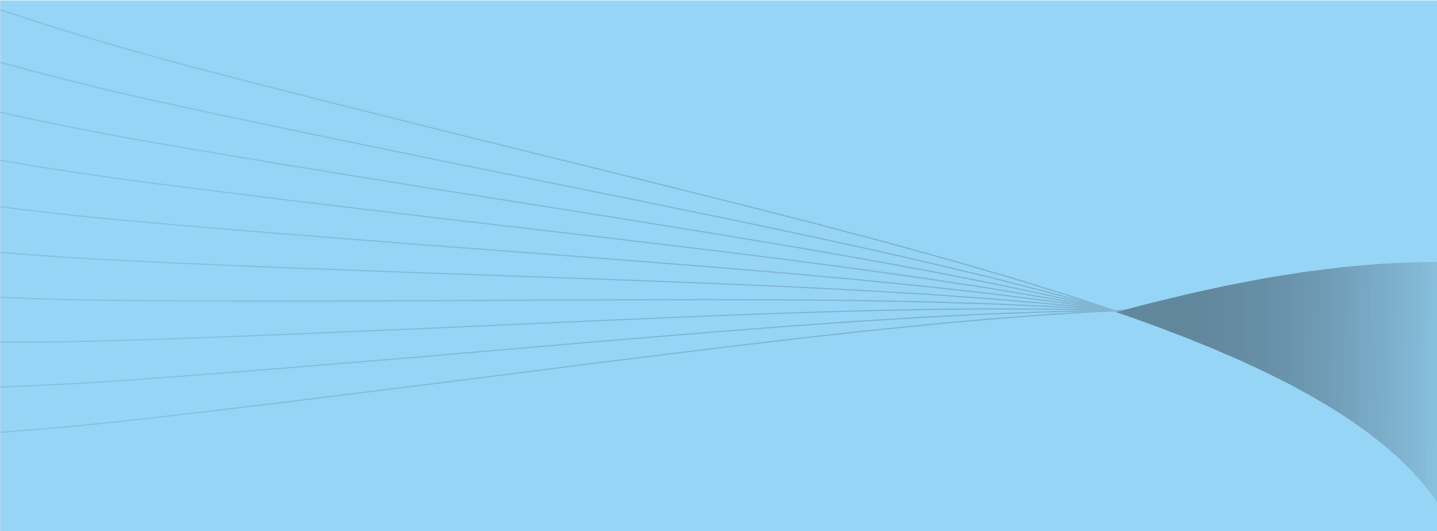
---

# 고등학교 교과서 등의 검정 결과와 교과서 공격의 새로운 단계

---

스즈키 토시오

(아이들과 교과서전국네트 21)





2022년 8월 25일

**고등학교 교과서 등의 검정 결과와 교과서 공격의 새로운 단계**

스즈키 도시오(鈴木敏男)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21 사무국장)

**들어가며**

교과서 공격은 ‘새로운 단계’라고 불러야 할 사태에 이르렀다.

작년에 검정을 막 통과한 교과서가 정부의 견해로 용어 삭제, 기술 정정이 강요되었다. 교과서 회사 자체에 의한 ‘정정 신청’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올해의 검정은 문부과학성이 학술 연구 성과를 짓밟고 정정을 시행하였다. 검정 제도의 유명무실화, 변질과 다름없다.

**I 교과서 공격의 새로운 단계****1. 역사수정주의 공격****(1) 새로운 ‘정부의 통일 견해’**

제작년의 중학교 교과서 채택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이하, 새역모) 계열의 이쿠호사(育鵬社), 자유사(自由社)의 역사·공민 교과서를 25년에 걸친 노력으로 채택 수를 격감시킨 일은 기억에 선명하다.

그러나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책동은 계속되고 있다. ‘새역모’ 등에 더하여 일본유신회(이하, ‘유신회’)가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국회를 무대로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4월, ‘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중의원 의원(당시 간사장, 현 공동대표)은 ‘중군 위안부’의 존재와 한반도에서의 노무자 이입에 대해서 그 강제를 부정하는 ‘질문주의서’를 냈고, 간(菅) 내각은 이에 응하여 ‘정부의 통일 견해’가 되는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4월 27일에 냈다.

① ‘중군’은 군의 관여라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중군 위안부’나 ‘이른바 중군 위안부’가 아닌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을 일본에서 일하게 한 것은 ‘모집’, ‘관 알선’도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연행’, ‘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령에 근거한 ‘징용’ 등으로 써야 한다. 또한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은 전시 노무동원은 국제법 위반인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2) 역사 연구의 성과와 대법원 판례, 지금까지의 정부 답변에도 반하는 ‘답변서’(개요)****1) ‘중군 위안부’에 관해서**

고노(河野) 담화(1993년 8월)는 ‘이른바 중군 위안부’라고 표현하여 일본군의 관여와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비참한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다. ‘위안부’를 하게 된 경위가 ‘강제인가 아닌가’만을 아베(安倍) 전 총리 등은 문제 삼아 왔으나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서의 ‘비참한’ 생활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 ‘의사에 반해서 등’의 강제연행 사실도 다양한 문서, 연구 등으로 밝혀졌다.

**2) 강제연행에 대해서**

① 자민당 고야마 다카오(小山孝雄) 참의원 의원(후에 교과서 채택 권한은 교육위원회에 있고, 현장의 의향은 무시해도 문제없다고 한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문부대신의 답변을 끌어냄)은 ‘중군 위안부’의 존재 부정과 아울러 노동자 모집 단계는 강제연행이 아니라고 집요하게 압박하였다. 그러나 쓰지무라 테쓰오(辻村哲夫, 초등중등교육국장)는 ‘강제연행은 국

가적인 동원 계획 아래에서 사람들의 노무동원이 이루어진 것이며 모집 단계에서도 이는 결코 그야말로 임의 응모가 아니라 국가의 동원 계획 아래에서의 동원으로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확실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997년 3월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라고 답변하고 요시카와코분관(吉川弘文館)의 『국사대사전(国史大事典)』을 근거로 들고 있다.

② 강제노동 조약은 전쟁 또는 지진의 경우이기만 하다면 어떠한 강제적 서비스도 부과할 수 있다는 백지 허가가 아니고, 국제노동기관(ILO) 조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1993년 3월 보고서에서 ‘본 위원회는 이러한 비참한 조건에서의 일본의 민간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노동자 징용은 이 강제노동 조약 위반이었다’라고 인정하였다.

역사연구를 무시한 정부의 답변서 자체가 ‘결함’ 문서이다. 또 ‘징용’은 강제연행과 다름없다는 대법원판결도 있고, 일본군‘위안부’와 함께 국제적으로도 평가가 정해진 문제이며 대체로 일본 정부의 낮은 인권 의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3) 2014년 개정 ‘검정기준’의 새로운 적용**

정부 견해로 교과서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래의 2014년 ‘개정’ 검정기준 등이다.

① 2014년에 개정된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은 초·중 사회과, 고등학교 지리공민과에 대한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함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문부과학대신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대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당시)의 뜻을 받아들여 작성한 것이다. ‘개정’은 아래와 같은 3항목이다.

- (i) ‘특정 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하지 않는다.(밑줄 추가)
- (ii)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것이 시사되어 있다 … 아동 또는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없을 것’(신설)
- (iii) ‘각의결정 기타 방법에 의해 나타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 또는 대법원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기술할 것’(신설, 『정부 견해 조항』

그리고 불합격 요건으로 교과용 도서 검정심사요항(검정심의회 내규)에 ‘교육기준법에 나타난 교육의 목표 및 학교교육법 및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 목표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를 추가하였다. 심사요항 추가는 검정이 개별 기술의 적부 심사가 아니라 사상 심사가 될 위험이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은 ‘목표에 비추어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개별 기술의 적부를 음미할 필요도 없이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설명하였다(『아사히신문』 2013.11.19. 사설).

교과서 출판사에 대한 ‘일발 불합격’이라는 협박이며 교과서 회사에 대한 압박은 한 단계 더 강해졌다.

② 이 이후 ‘개정’ 검정기준의 (i)와 (ii)에서 교과서에 이른바 ‘기술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용되어 관동대지진과 난징(南京) 사건의 희생자, 그 진상을 모호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 왔다.

중학교 2019년 검정  
**난징 사건**은 신규 참여 야마카와(山川)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기존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케이자이신문』(2020년 3월 25일)

**강제연행, 전후보상 문제**

이 문제는 각 출판사의 차이가 크다. **이쿠호사와 교이쿠출판(教育出版)**에는 기술이 없다.

**도쿄서적(東京書籍)**은 강제연행 문제에서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의사에 반하여 일본으로 끌려와서 광산과 공장 등에서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강제당하였다’라고 기술하며 ‘지원병’에 응모한 조선 젊은이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동사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고 적혀 있는데 왜 중학교에서 ‘강제적’ 단어를 삭제하였는지 의문이다.

**니혼분교출판(日本文教出版)**은 조선에서의 동원은 국가 계획에 기초하여 시행되었다는 점, 전쟁 말기에는 형벌도 수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면서 ‘체약국 및 양국 국민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하고 그 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하며 개인보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새 교과서에서도 **칼럼 ‘배상문제와 역사인식’**에서 아시아 사람들로부터 개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개인보상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에 계속 서 있고’ 역대 총리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국가 간 청구권과 개인 청구권은 별도 문제라는 것이 오늘날 세계에서는 거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완료되었고 일본 정부는 사죄도 하고 있다고 일면적으로 기술하여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잘못된 인식으로 유도하는 기술로 되어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데이코쿠서원(帝國書院)**은 ‘배상의 의미를 포함한 ... 경제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이 완료되었고 청구는 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이웃 국가로부터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하여 함축성을 갖게 하고 있다.

교이쿠출판	점령한 수도 난징에서는 포로와 주민이 연루된 다수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쿠호사	일본군에 의해 중국의 군민에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사건의 희생자 수 등의 실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오늘날에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도쿄서적	수도 난징을 점령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 등 일반 사람들과 포로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인을 살해하였습니다.
데이코쿠서원	난징에서는 병사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도 살해되었습니다.
야마카와출판사	일본군은 여성과 아이 등 일반 사람들과 포로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인을 살해하였다.
니혼분교출판	점령한 수도 난징에서는 포로 외에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다수의 주민을 살해하였습니다.
마나비샤(学び舎)	국제법에 반하여 대량의 포로를 살해하고 노인·여성·아이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을 폭행·살해하였습니다.

③ (iii)은 영토 문제에서 ‘기술하게 하는’ 것에 많이 이용되었다.

○ 신 지도요령 하에서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2017년도

2014년의 검정기준 ‘개정’과 동시에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일부 개정(초·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지리역사·공민)이 사실은 시행되었다.

가, 중학교 지리에 대해서 보면 영토 문제에서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

에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도 언급하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취급하고, ... 또 센카쿠(尖閣) 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또 현재 우리나라(일본)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라고 되었다.

아베 전 총리는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해외에서 아이들이 논쟁하였을 때, 확실히 일본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다'(아사히신문 2014년 1월 6일)라고 하며 일본 인으로서의 자각'(일본의 역사, 전통, 문화, 사회 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넓고 깊은 지식[임시교육심의회])에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정부의 알팍한 견해뿐이고 상대의 주장과 그 근거, 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배우지 않고도 국제사회에 나설 수 있을까.

나, 노골적인 정치 주도로 교과서가 아베 정권의 영토 외교 선전 문서가 되어있다. '고유 영토'임이 분명한 북방영토에서의 정부 설명의 후퇴를 보면 정권 편의주의로 영토 문제를 기술하게 하는 것은 교과서로서 적합하지 않다.

다, 위기감을 부추김으로써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어린이 때부터 심어주려는 목적도 있다. 또 중국, 한국에 대한 비난과 증오만이 증폭되어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상대국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가 교과서로부터 생길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

라, 식민지 지배 문제와 마주하여 평화적인 외교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와 얽혀있고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테이블에 한일 쌍방이 앉는 것이 중요하다.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도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치에 맞는 설명을 국제사회에도 시행하여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인 외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 초등학생에게 '영토'와 '고유 영토'의 차이를 가르치는 의미가 있을까. 또 그것이 가능할까.

마, 평화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

교이쿠출판 5학년에서는 본문에서 '일본은 이들 섬이 일본의 영토임을 상대국과 국제사회에 확실히 전하고 과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측면 어린이의 말풍선에 '국가에 있어서 영토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웃 국가와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라고 말하게 하고 있다.

○ 신 지도요령 고등학교 '지리탐구'

정부 견해 그대로 '다케시마(독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 센카쿠 열도는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그 해설에서는 '다케시마(독도)와 '북방영토'는 각각 한국과 러시아 연방에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방영토는 구성되는 4개 섬의 명칭과 귀속한 조약명까지 기술하게 하고 있다. 지리탐구 교과서는 원래부터 일본사탐구 등에서도 꽤 공간을 할애하여 위의 내용을 대부분 기재하고 있는데 한국, 중국,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2022년 판 외교청서에서 '불법 점거'는 2003년 판 이후 '일본 고유의 영토'는 2011년 판 이후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와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7년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이후 이러한 기술이 이미 강제되어 왔다.

이로써 ‘다면적, 다각적 고찰과 깊은 이해’(신 지도요령 ‘지리탐구’ 등)가 가능할 것인가.

**(4) 문부과학성의 ‘임시설명회’**

유신회의 요구에 문부과학대신이 응한 것을 받아들여 문부과학성은 5월 18일에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역사, 공민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15개 사의 편집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임시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신문 보도 등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진행 과정 속기록을 제출하고 ‘주요 스케줄’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여 ‘6월 말까지(필요에 따라) 정정 신청’, ‘8월경, 정정 신청 승인’ 등의 일정도 전해졌다고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정정 권고가 나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부과학성은 “권고 가능성은 있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번 달 내의 신청을 암묵적으로 재촉하는 형태였다’(『아사히신문』 6월 18일). ‘이렇게 하면 정정하지 않는 회사는 없겠다고 느꼈다’(『가나가와신문』 6월 20일).

**(5) ‘정정 신청’과 교과서 회사의 대응**

이후, 교과서 회사는 ‘정정 신청’으로 해당 교과서에서 ‘부적절’하다고 한 용어와 관련된 기술의 삭제·수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검정심의회는 9월 8일, 10월 11일 자로 발표하였다. 공표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교과서 회사의 삭제·수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위안부로서 중군하게 되어’까지가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져’로 수정되는 등 대다수의 용어가 삭제·수정, 관련 기술은 변경되었다. → ‘자료1’ p.16, 17

다만 시미즈서원(清水書院) 『우리들의 역사총합』은 ‘이른바 중군 위안부’ 용어를 남기고 주석에서 ‘기존에는 정부의 담화 등에도 포함되어 이렇게 표현되는 일도 많았으나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용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이이치학습사(第一學習社)도 마찬가지이다. ‘정정 신청’은 아래와 같이 원래 오기·오자류나 학설의 중요한 변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작년의 정정 신청 예 야마카와출판 『중학역사 일본과 세계』(홈페이지 게재, 학교에도 똑같은 것이 송부되었다)

1~3학년	129쪽 그림 5	あのうづ 安濃津 づ	あのうづ 安濃津 つ	잘못 표기
1~3학년	172쪽 그림 4	돗토리현·시마네현의 현 경계를 추가		잘못된 사실 기재
1~3학년	205쪽 그림 2	山畠村	山鼻村	잘못 표기
1~3학년	247 주 ①	전지에 설치된 ‘위안 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이른바 중군 위안부)	전지에 설치된 ‘위안 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	각의결정에 입각한 정정

※전에도 있었는가

2014년의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 검정에서는 이 해의 검정기준 ‘개정’의 선점과 미적용 지도 요령 해설 ‘개정’에 따른 교과서 회사의 자주 규제가 일어났다. 이때 고등학교 공민 교과서에서 검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스켄출판(数研出版)은 ‘중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의 기술을 삭제하는 정정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전례를 이번에 ‘악용’하였다.

## 2. 교과서 공격의 새로운 단계와 목적

### (1) 새로운 공격

#### ◆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제3차 교과서 공격’

① 1997년에 결성된 ‘새역모’와 일본회의 등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역사적 분야)의 ‘중군 위안부’ 등의 기술을 문제 삼아 교과서 회사에 대한 압력과 문부과학대신에 의한 ‘정정 권고’를 지방의회의 결의로 요구하고 있다.

② ‘새역모’가 ‘자학적’이라고 한 교과서 대신에 이것이 올바르다고 한 ‘대안’인 후소사(扶桑社) 교과서는 현장의 교원들에게 지지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채택에 대한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채택 권한은 교육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 ‘통지’를 일본회의, 교과서의련 등의 압력으로 문부성이 내게 하였다. 지금까지 현장의 요망인 학교표 등이 폐지되고 그들은 교육위원회의 채택에 개입해 나갔다. 그 결과, ‘중군 위안부’ 등에 관해서 기술한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기타 교과서 회사의 기술도 변화하였다.

③ ‘새역모’ 후소사판·지유사판 중학 교과서는 부수를 늘리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관계를 끊었던 일본교육재생기구(이사장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레이타쿠(麗澤) 대학 교수, 이하 ‘재생기구’)의 ‘이쿠호사’판 중학 역사, 공민 교과서는 교육위원회에 의한 채택으로 부수를 늘렸다.

그러나 제작년의 중학 역사·공민 교과서 채택에서는 지유사 판과 이쿠호사 판 모두 채택이 격감하였다. ‘제3차 교과서 공격’은 ‘중군 위안부’ 등의 삭제와 다른 개소의 기술에 대한 영향 등 일정의 ‘성과’를 올렸으나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작년의 지유사 판 검정 합격에 따른 중학 역사 교과서의 ‘재채택’에서도 ‘재생기구’의 활동은 희미하였다.

#### ◇ 교과서 공격 새로운 단계의 특징

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역사적 분야)도 대상이 되었으나 중점은 고등학교 지리·공민 교과서가 타깃이며 새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역사총합은 물론이고 구 과정의 일본사A·B, 현대사회, 윤리부터 ‘중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용어 삭제를 강제하였다.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시절은 아이의 역사 인식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교과서가 주로 표적이 되었다.

② 그 수법은 통례의 검정을 기다리지 않고 용어와 관련된 기술 변경을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하여 2014년의 ‘정부 견해 조항’을 근거로 톱다운으로 이루어졌다.

③ 고등학교 교과서는 학교 현장이 선정하고 이를 교육위원회가 ‘추인적’으로 채택한다. 약 500종류나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초·중학교와 같이 교육위원회 채택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 방식을 취한 것이다.

실제로 2012년에 일어나 수년 동안 지속된 짓교출판(実教出版)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채택 방해 사건 당시에는 지도 주사가 현장에서의 선정을 고쳐 쓰거나 교육위원회 사무 당국이 압력을 가하는 등으로 현장의 선정을 바꾸게 하고 배제하였다.

작년의 역사총합에서도 일부 현에서는 교장회의 ‘연락’으로 현장의 선정을 바꾸게 하였다.

④ ‘새역모’ 계열의 선배 격으로 일본회의가 관여한 ‘메이세이사(明成社)’판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는 정상적으로는 채택할 수 없는 대응품으로 ‘중군 위안부’, ‘강제연행’ 기술이 있는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2) 배경에 있었던 정치적 의도와 역사수정주의

### 1) 간 내각의 의도

당시 국민 지지가 위협한 상태였던 간 내각은 개헌에 대한 ‘노력’ 등을 보이며 ‘일본회의’ 등의 우익 개헌 세력에 날개를 펼치게 해주려고 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제연행 문제는 한일 관계의 초점이 되는 문제이며 일본 측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유신회’ 바바 씨는 ‘이번의 의연한 대응은 그야말로 “아베 노선의 계승”’(『WILL』 2021년 7월호)이라며 칭송하고 있다.

### 2) 고노 담화의 철저한 공동(空同)화

‘이른바 중군 위안부’ 용어는 고노 담화에서 사용되었고, 이 용어를 ‘부적절’하다고 부정함으로써 ‘인정하고 있다’(간 총리)라고 하는 담화의 철저한 공동화를 노렸다.

또 역사수정주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고노 담화 폐기’를 요구하며 이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중의원 대표 질문에서 바바 노부유키(‘유신회’ 공동대표) 씨는 ‘고노 담화가 위안부의 강제성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채로 한국 측에 배려한 허구투성이 작문이었다는 점은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틀렸다고 판단되면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역대 정권은 완강히 계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더블 스탠더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과 한국이 외교적 우위에 서야 한다고 하는 **역사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질 뿐입니다.’ ※산케이신문은 『멸시하는 한국 위협하는 중국(貶める韓国 脅す中国)』의 속편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역사전’이라는 시리즈를 간행하였다. ‘산케이신문 등이 전개하는 “역사전”은 앞서 언급한 전쟁 중에 일본 정부가 국책으로 전개한 “사상전”과 “선전전”의 연속이 아닌가’(야마자키 마사히로(山崎雅弘) 『역사전과 사상전 - 역사 문제의 해독 방법(「歴史戦と思想戦」—歴史問題の読み解き方)』 슈에이샤신서(集英社新書) 2019년 9월)

역사 인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전쟁의 도구로 삼아 상대방을 격파하는 전쟁으로 파악하는 일은 근본적인 잘못이다. 역사 인식은 학문적 진실에 기초하여 대화에 의해 해결할 문제이며 인권 문제와도 깊이 얽혀있는 문제이다.

그 ‘공격’ 대상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아니라 일본의 어린이, 국민에 대한 것이다. 사도광산(佐渡金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간섭’ 비판으로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얽힌 강제노동 등과 전쟁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 유네스코 현장 전문은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요소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며 ‘정부의 정치적 및 경제적 결정에만 기반한 평화는 세계 여러 인민의 일치된 그리고 영속하는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 및 정신적 연대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II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주로 2, 3학년용) 검정

지난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새 학습지도요령(이하 ‘지도요령’)에 의한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중학생(주로 2, 3학년용)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 결과에 대해서 문부

과학성이 3월 29일에 공표하였다.

공통과목에서는 검정 신청 점수 241점(권) 중 상업과 관계 2점이 신청을 취소하여 239점이 합격하였다. 작년에 검정이 이루어진 주로 저학년(주로 1, 2학년용)이 대상인 지리총합, 공공에서 1점씩 검정 신청이 있었고 합격하였다. 합격한 239점 중 전문 교과를 제외한 189점의 검정 의견 총수는 6,267점으로 과목 구성은 다르지만 1점당 평균 검정 의견 수는 37.0건으로 구 지도요령에 기초한 2016년도 검정의 26.9건을 웃돌고 있다. 5월 하순부터 교과서 전시가 시작되었는데 전반적인 특징·문제점에 대해서 개괄한다.

### 1. ‘정부 견해’에 의한 문부과학성 검정

#### (1) ‘정부 견해’에 의한 검정

① 이번 검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 수의 많음과 함께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되어있지 않다’(2014년 개정 검정기준, 이하 ‘정부 견해 조항’)라고 하는 검정 의견이 과거 최다인 12점 14개소에 붙어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연행되어**’가 ‘징용·동원’으로 고쳐졌고(데이코쿠서원 『신상 세계사탐구』), ‘일본으로 **연행되어**’가 ‘동원되었다’(시미즈서원 『고등학교 일본사탐구』)가 되었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희생이 된 한국인 여성’이 ‘전 위안부인 한국인 여성’(깃쿄출판 『일본사탐구』)이 되었다.

② 이러한 기술의 삭제·수정은 작년에 일어났다. 이는 교과서 회사의 ‘자주적’인 ‘정정 신청’이었으나 이번에는 문부과학성 스스로 ‘정부 견해 조항’을 발동하여 교과서 기술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학문 연구자도 아닌 정부가 그 견해에 기초하여 이른바 ‘검열’에 의해 검정 완료 교과서의 용어와 관련된 기술 변경을 요구하는 일은 검정 제도의 유명무실화이다. 또 『류큐신보(琉球新報)』 사설은 ‘(오키나와전의) “강제집단사” 당시에는 밀실 안이었으나 현재는 각의 결정이라는 형태로 공공연하게 교과서의 “역사 수정”이 가능해지고 만다. 전쟁 전의 국정 교과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상 정치에 의해 교육과 학문이 일그러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전 문부과학대신은 ‘각의결정에서 제대로 정부로서 인정한 것을 기록하는 이정표를 만들었을 뿐이다’(『아사히신문』 8월 1일)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 (2) 교과서 회사의 저항과 교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과서 회사가 유유낙낙하게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도쿄서적 『정치·경제』에 ‘**고노 담화**(1993년, 발췌)’ 칼럼이 있었다. 이에 ‘정부 견해 조항’의 검정 의견이 붙어 굵은 글자처럼 추가, 수정해서 합격이 되었다.

<p><b>고노 담화</b>(1993년, 발췌) ‘<b>위안부 문제</b>’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p> <p>본 건(위안부 문제)은 당시의 군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입힌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중략, 인용자) …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직시해 나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같은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p> <p>‘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당시의 고노 요헤이 내각 관방장관이 발표</p>
---

한 담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되어있다.

수정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 관여를 인정한 담화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되어있다. 2021년에 ‘중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 의결정이 이루어졌다.

②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일본사탐구』의 ‘다수의 조선인을 강제연행하였다.’의 밑줄 부분에 ‘정부 견해 조항’ 검정 의견이 붙었으나 ‘강제연행’ 용어를 남기고 측주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전시 중에 조선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다양하며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각의결정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라고 하여 검정 합격하였다. 동사의 『고등학교 역사총합』도 작년에 비슷한 대응을 하였다.

③ 이들 용어를 남긴 것에 『산케이신문』은 ‘사학사관적인 표현의 불식은 되지 않았다’라며 비판적이었으나 문부과학성이 일본공산당 하타노 기미에(畑野君枝)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견해를 언급한 후에 그것과는 다른 견해를 기록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중의원 문교과학위원회 2021년 6월 9일)라는 답변이 있다. 실은 2014년의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개정’ 당시 검정심의회 위원으로부터 정권 교체로 정부 견해가 바뀌어 교과서 기술이 영향을 받은 것에 의문이 제시되어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 이에 대한 재확인 있었다.

④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작년의 ‘정정 신청’으로 ‘강제연행’이 일소되고 ‘위안부’ 기술은 7개 사 중 1개 사가 된 것에 비하면 불충분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위안부’ 용어가 남아있다. 측주에서 ‘전지에 설치된 일본군 용 “위안 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어 “위안부”로서 일하게 되었다. 강제당하거나 속아서 연행된 예도 있다’(야마카와출판 『상설 일본사』)라는 기술도 있다. 또 ‘강제연행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제당한 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수업의 단서로 삼는 일이 가능한 면이 있다.

※집필자 등의 생각 → ‘자료2’

## 2. 주목되는 항목

### (1) 오키나와에 관한 기술 문제

‘1951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에서 분리된 “굴욕의 날”로부터 70년’이었으나 이날을 직접 언급한 ‘일본사탐구’는 1개 사뿐인데 오키나와의 미군 통치하의 ‘오키나와의 고뇌’의 설명 부족이라고 『오키나와타임스』는 쓰고 있다. 올해는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과 현재의 오키나와에 놓여 있는 문제는 ‘타이완 문제’를 구실로 삼은 난세이제도(南西諸島)에 대한 자위대 배비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류큐신보』에 의하면 ‘집단 자결’(강제집단사)에 대해서는 ‘일본사탐구’ 7권 모두 기술이 있고 ‘일본군에 의해 … 집단 자결을 강제당하여’(실교출판 『일본사탐구』) 등의 기술은 있으나 군 관여를 언급하지 않은 야마카와출판 교과서 2권도 있다. 또 ‘군령’에 의한 ‘집단 자결’ 강제는 2006년도 검정 이후 오키나와현민을 비롯한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술되지 않은 채이다. 다만 이번 ‘문학 국어’ 다이이치학습사의 2권이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 전 지사의 저작에 대한 해설 ‘칼럼’ 속에서 ‘일본군에 의해 “집단사”도 강제되었다’라고 기술하

여 검정 의견이 붙지 않았던 것을 『오키나와타임스』가 보도하였다. 문부과학성의 지리과에 대한 검정도 개선해야 한다.

### (2) 영토 문제

‘일본사탐구’의 지도요령은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 센카쿠 열도의 편입에 대해서도’ 언급한다고 되어있다. 이 지도요령해설(이하, ‘해설’)에서는 ‘북방영토’는 일관하여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이며 다케시마(독도),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영토에 편입한 경위와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파고들고 있다. **외교청서에서는 ‘불법 점거’, ‘고유 영토’는 쓰지 않기도 하지만 ‘지리탐구’에서는 지도요령에서 다케시마(독도) 등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임과 동시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그 ‘해설’에서는 ‘다케시마(독도)’와 ‘북방영토’는 각각 한국과 러시아 연방에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리하여 일본 정부의 견해에 따라 집요하게 편입 경위와 그 정당성을 포함하여 기술하게 하고 있다.**

이번 검정에서는 ‘북방영토’를 구성하는 4개 섬의 명칭, 지도상의 위치, 귀속한 조약명까지 기술하게 하고 있다. 정치에 농락당하여 한국, 중국,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견해만으로 학생들이 ‘다면적, 다각적인 고찰과 깊은 이해(지도요령)를 할 수 있을까.

### (3) 난징 학살 사건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난징 사건에 대해서 ‘희생자 수는 약 20만 명과 십수만 명, 그 이하 등 여러 설이 있으나 시기·지역의 범위 … 등의 논점이 있다.’(깃요출판 『정선 일본사탐구』)라는 ‘통설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라는 검정 의견이 붙어서 ‘… 여러 설이 있어서 확정하고 있지 않다. 희생자 수를 비롯한 시기·지역의 범위 … 등의 논점이 있다.’라고 추가 수정되었다. 명칭도 난징 학살 사건은 얼마 전의 검정을 반영하여 대체로 난징 사건으로 되어있다. 도쿄서적 『세계사탐구』 일본군의 ‘난징 입성’ 사진의 설명에 ‘난징 점령 당시 일으킨 포로와 시민 살해는 “난징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리어’라고 되어있는 것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작년의 도쿄서적 『상해 역사총합』에서 ‘(주) 포로와 여성을 포함한 일반 주민(비전투원)에 대해서 폭행, 약탈, 집단적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살해한 사람 수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수만~십수만 명 이상 등 여러 설이 있고 중국 정부는 3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에 검정 의견은 붙지 않았다. 세부적인 것까지 집착하는 일의 파탄이다.

## 3. 현대적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에 입각하여 ‘18세 성인’과 ‘코로나 유행’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서로 논의하는 기획도 있다. 다만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 (1) 젠더

일본의 젠더 갭(남녀 격차) 현상 등을 지리역사·공민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내용으로는 젠더 바이어스, 남녀 차별, 남녀 공동 참여와 LGBT 등이다. 도쿄서적의 ‘물리’에서 ‘일본에서는 물리학을 배우는 여학생 비율이 매우 적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렇게 시작해

서) ‘수학과 물리학에서 필요로 하는 계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능력에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다고 지적’(아사히신문) 등은 주목된다.

이 문제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예로서 외국어의 ‘논리·표현Ⅱ’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발명은 사회, 특히 여성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영문에 ‘가사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오해할 우려’라는 검정 의견이 붙어 ‘특히 여성의’ 부분이 삭제되었다(산케이신문).

### (2) 18세 성인

민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성인 연령이 18세로 내려간 것에 입각하여 정치·경제 교과서는 모두 다루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계약·선거에 중점’(마이니치신문)이다. 도쿄서적 『정치·경제』는 ‘18세부터 사회 참여’의 ‘특설 코너’에서 ‘선거권 행사를 위해’, ‘라이프 플랜과 금융’, ‘일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 등 6항목, 9페이지에서 다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 (3) 코로나 문제

코로나19에 관한 기술은 작년의 6교과 29점보다 감염증의 역사 등이 대폭 늘어나 7교과 53점이 되었고 지리역사·공민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는 정부의 대책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역학 추리 모델도 다루고’(아사히신문) 있다.

‘전문가 식견을 정치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스켄출판 『정치·경제』)는 원폭 사고도 포함하여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모습을 논하고 있다. 그중에서 ‘전문가가 직접 국민 자숙 요청 바람직했었다’(아사히신문)라고 하여 전문가에게 세상에 의해 정치가 움직였다고 하는 점이 주목되고 있으나 보다 문제인 것은 아베 총리(당시)에 의한 2020년 3월의 전국 일제 휴교령이 아닌가. 아베 총리의 ‘요청’이 법률을 정하는 곳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정해진 통상의 행정 절차도 밟지 않고 총리의 전적인 독단에 의해 갑자기 시행되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수장에 의한 톱다운 휴교는 큰 화근을 남겼다. 이쪽이 아닐까.

### (4) 우크라이나 문제

작년 5월 중순 경에 검정 신청 ‘백포지본’이 나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언급한 교과서는 없었다(제대로 된 의미의 ‘정정 신청’이 내년 봄까지 나올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크림반도 분쟁(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관해서 지리역사·공민 교과서는 모두 다루고 있다. 그중에는 ‘그 후, EU 가입국은 동유럽으로도 확대되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1999년 이후, 동유럽 여러 국가의 가입에 의한 확대를 시현하였다.’(야마카와출판 『상설 세계사』)라고 이번 러시아의 군사력과 대결해 온 군사동맹 NATO의 동방 확대를 언급하는 것도 있다.

## 4.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 (1) 검정기준의 한층 더 심해진 ‘악용’

지금까지 2014년 개정 검정기준의 ‘정부 견해 조항’은 주로 영토 문제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 자체가 일본 정부 견해의 일방적인 강압이었으나 내용은 외교 문제를 교과서로 가져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문 연구 내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그 성과를 하나의 정부 견해로 매장해버리는 폭거이다.

### (2) 검정 제도의 유명무실화

한 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정부 견해’에 의한 교과서 기술 정정이 보통화되면 정부·정치는 교과서 기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검정 제도의 유명무실화이다. 검정은 문제이나 검정 조사관과 일정의 진행 과정도 있다. 불충분하지만 축적된 규칙도 있다. 작년의 ‘정정 신청’은 문답무용의 개입이고 정정 신청, 검정에 관한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의회’ 등은 공개된 의사록을 보는 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그저 추인하고 있다. 검정기준을 한 층 더 파고들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의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교육과 학문의 자유, 어린이의 학습권과 관계가 있음**

① 역사연구자도 아닌 정부가 용어의 적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정부 견해’는 학문·연구에 대한 난폭한 개입이며 교과서 기술의 개서 강요는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반하고 교육에 대한 부당한 지배이다.

학문의 자유는 메이지(明治) 헌법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에나가(家永) 교과서 재판의 스기모토(杉本) 판결에서는 ‘학문 연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행위이며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컸지만, 그만큼 당시의 위정자에 의한 박해를 강하게 받아온 것을 감안하여 특히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의 무게를 다시 한번 곱씹고 싶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전쟁 전의 역사를 방불하게 한다. 2020년에는 학술회의 회원 6인의 임명을 문답무용으로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번 교과서 기술에 대한 직접 개입이다. 이들은 국민 전체의 언론 표현의 자유, 사상 신조의 자유를 흔드는 위헌·위법의 폭거이며 전쟁 전 회귀로 가는 흐름이다.

올봄의 검정을 받고 『류큐신보』 사설은 ‘(오키나와전의) “강제집단사” 당시에는 밀실 안이었으나 현재는 각의결정이라는 형태로 공공연하게 교과서의 “역사수정”이 가능해지고 만다. 전쟁 전의 국정 교과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상 정치에 의해 교육과 학문이 일그러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② 이번 개입, 지금까지의 ‘영토 문제’, ‘난징 학살 사건’과 ‘관동대지진’ 기술의 제약은 문부과학대신에 의한 고시에 지나지 않는 ‘검정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검정기준’에서 교과서 기술을 속박하는 일에 대해서 2014년의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당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교과서 검정기준 및 교과용 도서 검정심사요항 개정 및 교과서 채택에 대한 의견서’(2014년 12월 19일)를 내고 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있다.

① ‘국가가 정부 견해와 대법원 판례의 교과서에 대한 기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 견해와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 유일하게 “올바른” 결론이라는 인상을 교과서 기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주기 쉽고 어린이가 다양한 견해와 다각적인 시점에서 본 사실을 학습하고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력을 기를 기회를 빼앗기 쉬워진다’.

②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의 ‘특정 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란 어떠한 경우인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란 어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그때의 정부에 의해 통설적인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학설이 통설적 견해인지 아닌지가 표현됨에 따라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우려가 있다. ‘각의결정 기타 방법’에 의해 나타난 정부의 통일적 견해’라는 기준도 그 범위가 불명료하다. ‘각의결정 기타 방법’이란 국회 심의에서 내각의 답변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떠한 기

준으로 ‘정부의 통일 견해’라고 평가되는 것인지 판연하지 않다.

③ 위촉 효과 또는 모호한 검정기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면 교과서 출판사가 어떠한 기술이 해당 기준에 맞아떨어지는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교과서 출판사가 위촉되어 보다 정부의 입장에 맞는 기술을 하려는 행위로 이어져 위촉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④ 교과서 출판사의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 국가가 교과서에 특정 사항을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교과서 출판사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커진다. 예를 들면 영토 문제와 총리의 야스쿠니(靖国) 신사 참배에 대해서 … 주변 여러 국가와 의견 대립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과 헌법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본 건 각 개정 후의 교과서 검정기준에 의해 정부 견해와 대법원 판례를 기재하는 것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⑤ 어린이가 정보를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성장·발달 과정인 어린이에게는 자신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일 자유가 있다(어린이의 권리 조약 13조 1항, 동 17조). 그러나 국가가 정부 견해·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기술을 교과서에 의무화한 경우, 어린이가 그 이외의 사고방식을 수령할 기회가 적어지고 만다. 2010년의 유엔 어린이 권리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조약 44조에 기초한 정부 보고서 심사 최종 소견에서는 ‘본 위원회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일본 정부에 의한 해석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어린이들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염려한다.’(74단락)

‘본 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가 검정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을 계약국 정부에 권고한다.’(75단락)라고 지적하고 있다.

⑥ 유엔총회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자 지적 2013년 제68회 유엔총회에서 역사 교과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제출된 보고(A/68/296)가 이루어졌다. 이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결론과 권고’ 부분에서 역사 교육은 애국심을 강화하거나 민족적인 동일성을 강화하거나 공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젊은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나아가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거나 정치적인 필요성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권고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 교과서의 선택은 역사가의 손에 남겨져야 하며 특히 정치가 등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88단락). 이상의 관점으로 보면 개정된 검정기준, 특히 ‘다 각의결정 기타 방법에 의해 나타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 또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기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은 명백히 이 특별 보고서의 지적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다.

‘국가에 의한 과도한 교육 개입으로 헌법 26조에 위반하여 어린이의 학습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라고 되어 있다.

일반론은 이번에도 다음과 같은 회장 성명을 내고 있다.

‘각의결정과 이에 이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에 따라 실현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은 당 연합회가 전기 의견서에서 지적한 위구가 현실화된 것과 다름없다. 당시의 정권이 새로운 견해를 나타냄으로써 교과서 기술이 변경되는 사태는 국가(정부)에 의한 교과서 내용 통제라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앞서 언급한 헌법 취지로 보아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당 연합회는 위의 각의결정에서 교과서 내용 변경에 이르는 일련의 경위에 깊은 우

려를 표명하고 그 근거가 된 개정 교과서 검정기준의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2022년 2월 17일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아라 다다시(荒中)).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일본의 ‘만주사변’과 유사하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와 전쟁의 비참함, 식민지가 된 지역 사람들의 생각 등을 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권의 보장이다. 정부의 생각, 정치적 의도로 교과서를 바꾸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2014년 개정 ‘검정기준’과 ‘검정심의회’를 포함하여 교과서 검정제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 (4)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움직임을 저지한다

교과서 문제로서의 중요성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로 폭넓은 사람들과 과제를 공유하고 여론을 환기해 나갈 것을 추구해 왔다.

지난봄에는 학술회의 회원 추천 거부 문제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 해결 ALL 연대 여러 분과 이번 책동의 무대가 된 국회에서 원내 집회를 시행하고 일정의 성공을 거두었다. 계속해서 연속 학습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의 ‘요구서’(‘중군 위안부’ 등 역사 용어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저항하고 정부 견해와 이에 기초한 정정 신청 승인 철회, 2014년 개정 검정기준 폐지를 요구한다)는 예상 이상의 다양한 단체로부터 다수의 찬동이 모여 220개 단체를 넘었다.

올해는 중국, 한국으로도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국제 공약인 ‘고노 담화’, ‘근린제국조항’을 유명무실화하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한국의 시민단체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와 공동으로 ‘**교과서 기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치 개입을 우려한다(성명)**’(‘자료3’)에 대한 찬동을 한중일 3국의 단체, 개인에게 호소하는 운동을 개시하였다. 일본에서 180개 단체, 334분이 찬동. 한국에서는 유력 8개 단체와 213분의 찬동을 얻었다. 역사학연구회, 일본사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를 비롯한 역사·교육연구회, 출판노련, 전일본교직원조합, 일본민간교육연구단체연합회, 민주법률협회, 자유법조단, 용서하지마! 헌법개약시민연락회, 개인으로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씨, 나카지마 미치오(中島三千男) 씨, 혼다 유키(本田由紀) 씨 등으로부터 받았다.

기자회견은 7월 12일에 시행하였다. 가나가와신문, 한국의 연합뉴스 등이 보도하였다. 앞으로도 그 실태와 그 위험한 내용을 널리 알려서 교육과 학문이 일그러지는 일은 머지않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발전할 우려를 지적하고 이를 저지해 나가고 싶다.

### III 지도요령을 둘러싼 문제

#### 1. 국어를 ‘논리’와 ‘문학’으로 나눈 ‘신 학습지도요령’의 파탄

마이니치신문 ‘논리·문학 나눠 “곤란”’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지도요령에서는 논리적 문장(평론)과 실용적 문장(설명문, 법령) 등을 배우게 하는 것을 중시하고 필수로 ‘현대 국어’, 선택으로 ‘논리 국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소설, 시가, 문학, 평론은 필수 ‘언어문화’, 선택 ‘문학국어’로 나누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렇게 나누면 ‘수업 편성’을 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분명히 게재할 수 없는 소설을 실은 다이이치학습사 『현대 국어』가 결과적으로 채택 수에서 최고가 되었다.

이번에 원칙적으로 문학작품을 다루지 않기로 한 ‘논리 국어’에서 전 13점의 교과서 중 2

점에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마음(こころ)’ 등의 소설을 ‘관련 자료’로서 합격시킨 검정 결과가 되었다. 한편 ‘문학국어’는 합격한 11점 모두가 평론문을 포함시켜 문학과 관련된 교재로서 검정을 통과하고 있다. 이 사실을 소개하며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국어의 과목 재편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논리’와 ‘국어’를 분리하는 일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문학작품을 접하는 일이 논리적 사고 육성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8년 실시한 PISA(국제 학습 도달도 조사)에서 일본 15세(고교 1학년)의 독해력이 2015년 조사의 8위에서 15위로 저하되었고 PISA의 출제 내용에 관해서 ‘몇 개의 자료를 비교해서 정보의 질을 판단한다’, ‘텍스트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문제’ 등의 특징이 낮았다는 점에서 계약서 등을 읽게 하는 ‘실용문’ 중시의 ‘국어 개혁’이 단락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른 신 지도요령의 신 과목구성을 시행한바, 이러한 파탄을 보이는 결과가 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복수의 회사에서 신청이 있었던 선택과목 ‘국어표현’의 발행이 1개 사에 그쳤다는 점에도 나타난다. 현장의 의향, 문학 관계 학회의 성명과 학술회의의 제언에 귀를 기울여서 신 지도요령의 재검토와 당분간의 ‘유연한’ 운용이 요구된다.

## 2. ‘탐구’와 ‘탐구과목’은 학생의 배움을 깊게 만들 수 있는가

(1) 전사(前史):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 ‘주체적·대화적으로 깊은 배움’이 강조되어 수업 방법으로 액티브 러닝(AL)이 강요되었고 내용의 증대와 함께 다루기가 어려워졌다.

### ○ 초등학교

#### 1)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를 전면에

학교교육법 개정으로 정한 ‘학력 3요소(‘기초적인 지식 및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에서 나아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육성을 목표로 한 자질·능력)로 버전업.

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살면서 일하는 ‘지식·기능’의 습득)’, 나 ‘이해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미지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육성)’, 다 ‘어떻게 사회·세계와 관련되어 보다 좋은 삶을 보낼 것인가(배움을 삶과 사회에 활용하려고 하는 ‘배움을 대하는 힘·인간성 등’의 함양)’의 세 가지 축으로 정리. ‘정의 면과 태도 면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힘’ 등 도덕적인 내용으로 자질·능력을 어느 방향에서 살릴지가 의문시된다(국가, 사회의 형성자).

#### 2) AL의 다용

배움의 질 향상을 위해 ‘주체적·대화적으로 깊은 배움(‘주체적인 배움’, ‘대화적인 배움’, ‘깊은 배움’)의 실현을 위한 수업 개선(액티브 러닝의 시점에 선 수업 개선)을 추진한다’라는 것.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에서도 ‘전 교과에서 AL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가 되어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 AL은 164점의 교과서 중, 지도 2점을 제외한 162점에 도입되어 있다.

→페이지 수를 늘려 조사 활동과 의견 발표, 어린이끼리의 회화와 토론, 정리 등을 다용해서 수업의 질도 바꾸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사회과에서 도쿄서적은 ‘학습 추진 방법’에서 ‘파악한다’ → ‘조사한다’ → ‘정리한다’ → ‘활용한다’라고 되어있다. 6학년 역사에서는 ‘전국 세상에서 천하통일로’의 ‘정리한다’에서

좌우 2쪽을 사용하여 현행 교과서에서는 없었던 ‘천하통일을 향한 공적이 컸던 건 노부나가(信長)인가 히데요시(秀吉)인가’를 테마로 ‘자기 생각을 노트에 적고’ 다음으로 ‘미니 패널 디스커션을 합시다’가 있다. 그리고 나온 의견을 참고로 ‘학습 정리’를 쓰게 되어있다. 다만 ‘자신의 정리(생각)’와 ‘학습 정리’의 예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

도쿄서적 4학년 후타 야스노스케(布田保之助)가 ‘쓰준교(通潤橋)’를 만든 이야기는 ‘조사할 것’, ‘조사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그러나 마지막 ‘정리 방법’은 어린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창장을 만들자’라고 정해져 있다. 미쓰무라(光村) 도덕 교과서 5학년에도 ‘감사’에서 후타 야스노스케를 다루고 있다. 특정 개인을 크게 다루어 위인전으로 꾸미는 도덕과 비슷하다.

② ‘특별 교과 도덕’에서는 미쓰무라도서의 경우 2학년 이후의 교과서에 ‘읽고’, ‘논의하고’, ‘쓰고’, ‘연기하고’, ‘생각하자’가 현행 판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2학년에 ‘비교하면서 논의할 때’도 들어와서 보다 복잡해졌다.

미쓰무라 4학년 제재 중에서 현행판도 ‘연기하며 논의한다’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연기하는 장면이 반쪽을 사용해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연기한다’가 다른 교과서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AL 강조의 영향이 아닐까.

### 3) 교과서 만들기가 유도형이 되어있다.

AL 방식에 그치지 않고 판서 예와 수업 진행 방식 등의 가이드라인을 게재하는 교과서가 눈에 띈다. 질문 아래 힌트가 있거나 다음 페이지에 답이 실려있다. 혹은 생각하는 시점 등을 정해진 형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선생님에게 친절 설계’(아사히신문 3월 27일)인 것인지 과연 진정한 의미로의 ‘다면적·다각적으로 생각’하는 배움이 될 것인가, “‘주입 교육’으로 되돌아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마이니치신문 3월 27일)와 동 신문 미미즈카 히로야키(耳塚寛明) ‘수업이 틀에 박힐 우려도 있다’, ‘틀에 박힌 대로의 수업이 되지 않나’(아사히신문 ‘시점’ 3월 27일)의 위험도 있다. 이 이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일 없이 문부과학성이 바라는 내용으로 유도되어 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로써 ‘주체적·대화적으로 깊은 배움’이 될 수 있는가. 어린이에게는 ‘어려워서 따라갈 수 없다’, ‘재미없다’가 될 것인가. 어느 쪽이든 교원의 수업 준비, 시간 배분도 포함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뻔히 보인다.

### ○ 중학교…문제가 많은 ‘주체적·대화적인 깊은 배움’

각 교과서 모두 AL과 얽힌 ‘테마 학습’이 늘어났다. 신문에서 다룬 몇 가지를 살펴보자.

· **도쿄서적** · 역사: 고대 일본의 ‘중요 인물’에 대해서 먼저 각 개인이 그 결론을 ‘해파리’의 머리에 쓰고 다리에 그 근거를 써서 나타내는 ‘해파리 차트’를 작성하고 그룹에서 한 가지로 범위를 좁혀 반에서 발표한다. 이를 기초로 고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정리한다. 예시된 결론은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와 구가이(空海)이다. 쇼토쿠 태자의 근거로 17조 헌법뿐만 아니라 관위 십이계(冠位十二階) 제정, 견수사 파견까지 ‘시행하였다’라고 되어있다(근본은 지도요령에 있기 때문이지만 이는 역사 연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에서 ‘고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을까.

이러한 ‘사고 도구’(이미지맵, X차트 등)와 브레인스토밍, 가와키타 지로(川喜多次郎)의 문제해결 발상 기법 등은 기업 연수 등에서 사용이 다용되고 있는데 중학생과 교원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말이다.

· **데이코쿠서원** · 역사의 ‘다각적·다면적으로 생각해보자’, ‘아코(赤穂) 사건을 고찰한다’에 도시대의 아코 사건(‘주신구라(忠臣蔵)’에 대해서 막부에 의한 아코 낭인의 처벌 시비 등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되어있다. 중학생이 주신구라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 관심이 있을까. 그것보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성 보호 논쟁”을 고찰한다-여성의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3명이 격론!을 다루는 편이 좋다.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히라쓰카 라이테우(平塚らいてう),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枝) 삼자삼양의 여성의 자립, 모성 보호의 모습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요즘의 유행이고 ‘경중을 고려한’ 한 부분이다.

공민에도 ‘적자 버스 노선에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가?’(데이코쿠서원), ‘마을 만들기 아이디어를 제창해보자’(교이쿠출판), ‘우리 마을의 대표를 뽑자’(니혼분쿄출판), ‘S시의 시장이 되어 조례를 만들자’, ‘편의점 경영자가 되어보자’(도쿄서적) 등이 있다.

· 도덕에서도 **가쿠슈켄큐사(学習硏究社)**는 교과서 모두(冒頭)에 생각을 깊이는 네 가지 포인트(1. 교재와 만난다 → 2. 교재를 바탕으로 생각한다 ⇄ 3. 논의하고 서로 갈고뎅는다 → 4.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깊게 만든다)를 한층 AL풍으로 하여 생각을 깊게 하는 네 가지 단계(1. 발견하자 → 2. 생각하자 ⇄ 3. 논의하자 → 4. 삶의 방식으로 연결해보자)로 대부분의 교재에 도입하였다.

유행처럼 곳곳에 이러한 학습을 도입하고 있으며 백화요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중에는 매우 흥미로운 제재도 있다. 그러나 ‘시장과 경영자’가 되는 것이 중학생의 일상에 흔히 있는 일인지 중학생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설정 등을 재검토하여 조금 더 고안과 정선(精選)이 필요하다. 또 깊은 배움에는 기초적인 지식과 사회 경험도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2) 일본사탐구**

**1) 지금까지의 일본사B와 비교해서**

신 학습지도요령(이하, 지도요령)에서는 ‘자질·능력’의 획득을 중시하고 상세하게 학습 내용을 규정하고 특히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중시하며 이를 위해 “주체적·대화적으로 깊은 배움(액티브 러닝)”의 시점에서의 학습 방법·과정의 개선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구체화로서 ‘탐구학습’이 도입되어 지리과, 공민과에서는 과목 재편이 이루어져 ‘탐구’ 관계의 ‘지리탐구’, ‘세계사탐구’, ‘일본사탐구’가 마련되었다.

일본사B	일본사탐구
(1) 원시·고대의 일본과 동아시아 가 역사와 자료 나 일본 문화의 여명과 고 대국가의 형성 다 고대국가의 추이와 사회의 변화	A 원시·고대의 일본과 동아시아 (1) 여명기의 일본 열도와 역사적 환경 (2) 역사자료와 원시·고대의 전망 (3) 고대의 국가·사회의 전개와 획기(역사 의 해석, 설명, 논술)
(2) 중세 일본과 동아시아 가 역사의 해석 나 중세 국가의 형성 다 중세 사회의 전개	B 중세 일본과 세계 (1) 중세로의 전환과 역사적 환경 (2) 역사자료와 중세의 전망
(3) 근세 일본과 세계 가 역사의 설명 나 근세 국가의 형성 다 산업 경제의 발전과 막번 체제의 변용	(3) 중세 국가·사회의 전개와 획기(역사의 해석, 설명, 논술)
(4) 근대 일본의 형성과 세계 가 메이지(明治) 유신과 입헌체제의 성립 나 국제 관계의 추이와 입헌국가의 전개	C 근세 일본과 세계 (1) 근세로의 전환과 역사적 환경 (2) 역사자료와 근세의 전망

<p>다 근대 산업의 발전과 근대문화 (5) 양 세계대전기의 일본과 세계 가 정당 정치의 발전과 대중사회의 형성 나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경제, 사회 다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 (6) 현대 일본과 세계 가 현대 일본의 정치와 국제사회 나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변화 다 역사의 논술</p>	<p>(3) 근세 국가·사회의 전개와 획기(역사의 해석, 설명, 논술) D 근현대의 지역·일본과 세계 (1) 근대로의 전환과 역사적 환경 (2) 역사자료와 근대의 전망 (3) 근현대의 지역·일본과 세계의 획기와 구조 (4) 현대 일본의 과제 탐구</p>
---	---

‘일본사탐구’는 근대 이후를 다룬 ‘역사총합’을 배운 후의 선택과목이고 구 과정의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배우는 일본사B에 상당하며 본문과 큰 전개 방법은 기존의 일본사B와 같은 통사적 배열로 되어있으나 대항목(하나의 시대)을 ‘전환’과 ‘획기’로 묶은 것이 기존과 다른 점이다. D에서는 ‘(3) 근현대의 지역·일본과 세계의 획기와 구조’, ‘(4) 현대 일본의 과제 탐구’가 되어 과목 ‘정리’의 의미를 가지게 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도요령(이하, 지도요령)에서는 ‘탐구학습’은 주체적으로 질문을 만들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강조되어 ‘다양한 사상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힘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금까지의 ‘일본사B’와 비교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일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주체적인 배움이 증시된다. 물론 중학교까지의 학습과 ‘역사총합’ 학습과의 연속성에 입각한다. 그 점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일본사B에서는 ‘대항목’((1)~(6))의 반이 근대 이후인 것에 비해 ‘일본사탐구’는 근대 이후의 항목 D ‘근현대의 지역·일본과 세계’는 4개의 대항목 중 1항목으로 전체의 1/4이 되었다. 근현대의 사상에 대해서는 ‘역사총합’에서 학습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인가.

후술하는 것과 같은 ‘탐구’적인 과제가 있어서 교과서 페이지 수는 평균 6.6% 정도 늘었다. 그런데도 표준단위 수는 4에서 3단위로 단위가 감소되어 있다. 또 모든 교과서에 ‘자료·웹사이트 등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2차원 코드’가 게재되어 있다.

## 2) 일본사탐구는 학생의 배움을 깊게 할 수 있는가

### ○ 일본사탐구의 구조

① 역사총합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학생이 학습 내용에 대한 의문을 ‘질문’으로 표현하는 학습, 학생에게 ‘생각하게 하는’ 일이 중시되어 있었으나 일본사탐구에서는 ‘다양한 사상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힘’을 목표로 하여 보다 주체적으로 학생 스스로 자료 등을 읽고 ‘가설’을 세우는 등 한층 고도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② 지도요령에 의한 ‘대항목’(A ‘원시·고대 일본과 동아시아’ 등)의 중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항목 (1)에서는 **시대의 전환과 관련된 사상을 기초로 ... 시대의 전환에 대해 이해한다.** 이에 입각하여 중항목 (2) 및 (3)의 학습을 전망한 **시대를 통관하는 질문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중항목 (2)에서는 각 시대의 특색에 대해서 **가설을 표현**한다. 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중항목 (3)에서는 ‘시대를 통관하는 질문’과 ‘가설’에 입각하여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사상의 의미와 의의, 관계성 등을 고찰하고 ‘역사와 관련된 여러 사상의 해석과 역사의 획기를 표현한다’ 등의 학습을 통해 각 시대의 역사 전개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르는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다. 물론 각 항목의 학습이 전제되어 있다.

③ 문부과학성의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관한 Q&A <지리역사에 관한 것>’(이하, ‘Q&A’)에 의하면

‘시대를 통관하는 질문’이란 ‘역사총합’과 ‘세계사탐구’의 ‘질문’과는 달리 ‘시대 전환의 이해에 입각하여 그 후 시대의 특색과 역사 전개와의 관계 고찰을 하기 위한 학습 전망을 나타낸 질문’이라고 되어있다.

‘가설을 표현한다’는 ‘제시된 복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이 되는 시대의 특색에 대해서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3)의 학습을 위해 그 시대를 전망하는 학습활동으로’ ‘시대의 전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와 같은 사회(시대의 특색과 관련된 상황)가 실현된 것은 ○○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와 같은 사회는 ○○와 같은 방법으로 실현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상황이 된 것은 ○○가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는 ○○이 계기가 되어 변화를 낳은 것이 아닐까’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주제를 설정’은 사상의 의미와 의의, 관계성 등을 고찰하여 ‘역사와 관련된 여러 사상의 해석과 역사의 획기를 표현한다’ 등의 학습을 통해 각 시대의 역사 전개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이 하는 활동이나 ‘가설을 표현한다’ 등에서 ‘그때 교사는 예를 들면 자료와 시대의 특색 관계를 이어주는 다양한 질문을 시행하는 등으로 학생이 자료에서 시대의 특색을 발견하기 위한 시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해 집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모든 단계에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학생도 힘들지만 담당하는 ‘교원의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아사히신문 사설)가 필요하다.

### ○ 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가.

지도요령 ‘내용 취급’에서의 ‘우리나라(일본) 역사를 대관하여 이해하고 고찰,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지도의 중점을 두고 개별 사상만의 이해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또 각 시대의 특색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학습 및 전후 시대를 비교하여 그 변천을 고찰하는 학습의 충실을 꾀할 것.’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시대의 전환에 착목하여’, ‘획기 등을 근거를 나타내어 표현’이 다용되어 있다. 과연 통할 것인가.

즉, 지금까지의 시계열에 따른 통사가 아니라 각각의 대항목을 통관하여 과제 해결을 찾아내는 일의 집합으로 특히 대항목 D는 그 경향이 강하고 테마 학습의 양상이다. 이러한 것이 자료 등을 읽고 가설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 주체성을 포함한 자질 능력의 육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관통하는 ‘법칙성’과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 3) 각 교과서의 상황

지도요령이 위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 실제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 탐구 순서 등 실제

① 도교서적은 탐구 방법을 좌우 페이지로 ‘1 주제 설정 → 2 자료·정보 수집 → 3 고찰

(가설 음미와 타당성 고찰) → 4 표현'으로 설명하고 중세, 근세, 근현대 시대로 묶어 당시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사진, 서책과 인구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등 관련된 다양한 역사 자료를 실은 페이지를 마련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시대의 특색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자'라고 하고 있다.

② 다이이치학습사에서는 '테마·과제 설정 → '질문' 설정 → '가설' 세우기 → 정보와 자료의 수집·조사 → 정리·분석 → 정리·표현'이라고 권두 페이지에서 탐구 순서를 도시하고 있다.

구체적 전개에서는 다른 교과서와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는 가설'과 '가설란'까지 만들고 있다. 여기에 집요하게 검정 의견('①에서 표현한 시대를 통관하는 질문에 입각하여 ...')이 붙어 있다.

③ 짓쿄출판 『일본사탐구』는 '역사 교과서를 잘 읽는 방법 - '외우기'에서 '찾기'로' 등 2페이지를 사용해서 탐구학습에 대한 '가설' 등 실례 등을 들면서 접근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다.

④ 짓쿄출판 『정선 일본사탐구 현재로 이어지는 미래를 그린다』는 교과서의 사용 방법으로 '주제 질문'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어디에서 '통관하는 질문', '가설을 세울 것인가'를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다. 토픽적인 '일하다, 놀다, 싸우다, 이어지다'와 '지역 포커스', '역사 속 동물' 등 다채롭고 알기 쉬우며 흥미로운 것이 많다. 탐구 학습에 대응한 특집 페이지에서는 젠더 갭의 현상이라고 제목을 짓고 역사박물관의 기획전 "성 차이 일본사"의 전시 도록을 보면서 시대의 특징과 알게 된 점을 리포트하고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남녀 격차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예로 들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조사해보자고 말하고 있다.

⑤ 시미즈서원(清水書院)은 지도요령 'B 중세 일본과 세계'가 '편(編)'이 되어 그 아래 장이 예를 들면 '중세의 전환과 역사적 환경'이고 절의 항목이 '중세 사회는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등 지도요령 그 자체이고 시대를 통관하는 질문과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탐구해보자' 항목이 가설의 해명으로 이어지도록 되어있다.

⑥ 야마카와출판의 1점은 일본사B와 같은 서명 『상설 일본사』를 사용하여 곳곳에 '질문'을 넣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바뀌지 않은 기술로 되어있다. '지도요령에 나타난 내용에 비추어 취급이 부적절하다'라고 하여 D의 '(4) 현대 일본의 과제 탐구'에 대해서 큰 폭의 개서로 '질문·가설을 세워보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 되었다.

‘자료1’ 정정 신청 결과(문부과학성, 9월 8일 승인), (문부과학성, 10월 11일 승인), 그 후에도(도요서적)

1. 중군 위안부 등

	원문	9월 8일	10월 11일
① 야마카와출판 ‘중학 역사 일본과 세계’ p.247	측주① 전지에 마련된 ‘위안 시설’에는 <u>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이른바 중군 위안부).</u>	전지에 마련된 ‘위안 시설’에는 <u>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u> 일본을 추가, ‘ <u>이른바 중군 위안부</u> ’를 삭제	
② 야마카와 ‘역사총합 근대부터 현대’ p.149	측주⑦ 각지의 전장에서는 위안소가 마련되어 일본과 조선, 타이완, 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 모집되었다.	각지의 전장에서는 일본군을 위한 ‘위안 시설’이 마련되어 일본과 조선, 타이완, 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 모집되었다.	
③ 짓교출판 ‘상술 역사총합’ p.185	일본인으로서 전쟁을 담당하게 된 조선반도·타이완 출신자에 대한 보장과 미지급 임금 청구, 이른바 ‘ <u>중군 위안부</u> ’ 등 정부는 해결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문제는 많다.	밑줄 부분을 ‘ <u>위안부</u> ’로 정정	
④ 시미즈서원 ‘우리들의 역사총합’ p.110	《자료: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 대해서》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른바 <u>중군 위안부</u> 문제에 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 정부의 결정에 기초하여...’	<u>이른바 중군 위안부 문제</u> ※ (추가) ※기존에는 정부의 담화 등도 포함하여 이렇게 표현되는 일도 많았으나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용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⑤ 시미즈서원 ‘우리들의 역사총합’ p.111	《자료: 정부 간 이외의 주요 전후보상》 ‘1992년 부산 중군 위안부·여자 정신대 공식 사	본문 ‘1992년 부산 중군 위안부·여자 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사건’으로 ‘등’을 추가하여	

	죄 청구사건’	(추가) ‘※소송·사건의 명칭은 당시의 호칭과 통술에 따름.’	
⑥ 도교서적 ‘신선 역사총합’ p.121	‘각지에 위안소가 놓여 일본인과 식민지 및 점령하의 사람들이 위안부로서 <u>종군하게 되어</u> 많은 여성의 인권이 깃밟혔다’	신청 안 함	신청 안 함 그 후 정정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져’
⑦ 도교서적 ‘상해 역사총합’ p.132	측주㉓ ‘일본인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 일본의 점령하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로서 <u>종군하게 되었다</u> ’	신청 안 함	신청 안 함 그 후 정정(위와 같음)

2. 강제연행 등

	원문	9월 8일	10월 11일
⑧ 중학교·마나비샤(学び舎) ‘함께 배우는 인간의 역사’ p.243	한편, 일본에 있던 조선인은 ... <u>몰려들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일본으로 건너 온 사람들과 탄광 등에 강제연행된 사람들입니다.</u>		‘한편, 일본에 있던 조선인은 ... 식민지 지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일본으로 건너 온 사람들과 탄광 등으로 보내져 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강제연행’ 삭제 등
⑨ 짓교출판 ‘역사총합’ ⑩ ‘상술 역사총합’도 거의 같음	조선(1943년)·타이완(1944년)에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또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약 80만 명의 조선인을 군수공장과 탄광 등에 <u>강제적으로 연행하여 노동에 종사시켰다. 중국인도 마찬가지로 강제연행되었다.</u>	조선(1943년) ... 에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또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u>징용령 등에 의해 약 80만 명의 조선인을 군수공장과 탄광 등에 동원하여 일하게 하였다.</u> 중국인도 강제연행되었다.	‘동원’으로
⑪ 시미즈서원 ‘우리들의 역사총합’ p.111	《자료: 정부 간 이외의 주요 전후보상》 2003년 대 후지코시(不二越) 강제연행 노동자에	《자료의 앞에 주석을 추가》 ※소송·사건의 명칭은 당시의 호칭과 통칭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2차 소송	따름.	
⑫ 도교서적 '신선 역사총합' p.127	우측 상단 주변 또, <u>약 70만 명이 일본 본토로 연행되어 노동력이 된 것 외에 전쟁 말기에는 징병제도 실시되었다.</u>	'연행' →	<u>강제적인 동원을 포함하여 약 70만 명이 일본 본토로 끌려와 노동력이 된 것 외에 ... 되었다.</u>
⑬ 도교서적 '상해 역사총합' p.141	또, <u>약 70만 명이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관과 경찰의 압박 등에 의해 일본 본토로 강제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의 노동을 강제당하였다.</u>	'강제연행' →	또,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관과 경찰의 압박 등에 의해 <u>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가혹한 환경에서의 노동을 강제당한 사람을 포함하여 약 70만 명이 일본 본토로 끌려왔다.</u>  (본문은 그대로이고) <u>강제연행</u> ① <u>측주①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전시 중에 조선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다양하며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각의결정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u>
⑭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역사총합' p.152	또,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탄광·광산과 군수공장으로 <u>강제연행되거나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장에 보내졌다.</u>		

**‘자료2’ 집필자의 생각(한국 통신사 인터뷰에서, 개요)**

- 집필 시 중시한 점은.

▲ 역사학의 기본에 충실할 것. 최신 연구성과에 입각할 것. 세계 속의 일본이라는 시점을 잊지 않도록 할 것. 일본의 식민지에 관한 것도 제대로 쓸 것.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 복수의 출판사 중에서 ○○의 역사총합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가장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와 징용 등에서 특별히 주목하거나 유의한 점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 애초에 ‘일본인’은 ‘일본인’끼리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세계 사람들과 여러모로 연관되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다. 근대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에 대해서 이 과정의 역사 인식이 없다면 이웃 국가 사람들과 근현대의 역사에 대해서 대화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 일본의 전쟁에 관한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 가해자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다는 당연한 인과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기 때문에 가해자이고 원폭 투하와 같은 가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이 두 가지는 원인과 결과로서 이어져 있다는 취지인가.

▲ 조금 더 넓은 의미다. 메이지기를 포함하여 충분한 도리도 세우지 않고 힘없는 주변 지역으로 진출. 침략하였고 그 결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대중 21개 조 요구 등) 나아가 모략에 의한 전쟁(만주사변)을 일으키는 등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로 동원·공습·원폭 기타 비참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모호하게 쓴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 사람의 역사학자로서 그러한 교과서를 채택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싶다.

- ‘중군 위안부’ 혹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본 정부의 답변서 결정은 계기로 교과서 출판사가 잇달아 관련 설명을 수정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교과서 저작자 혹은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 교과서도 어떠한 수정을 피하지 못하였지만, 기술을 고안하거나 교사용 지도서에서 학계의 통설을 소개하는 등 영향이 최소한으로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러 논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률적으로 변경하게 하는 것은 역사의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데 큰 문제이고 찬성할 수 없다.

**교과서 회사 당사자의 생각**

X 씨는 이번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역사에는 빛과 함께 어둠도 있다. 자국의 “어둠의 역사”를 덮어서 숨기는 교육은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다. 무지가 타국과의 오해와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정치의 힘으로 왜곡하면 안 된다.’(‘교과서 역사 기술에 대한 정부 개입 - 사실 왜곡의 위험’ 월간 『사회민주』 1월호)

## ‘자료3’

## 교과서 기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치 개입을 우려한다(성명)

일본 정부는 2021년 고등학교 지리역사과·공민과 필수 과목에 이어 2022년에는 동 선택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의 개요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들 교과서는 2022년부터 고등학교에 새롭게 적용되는 학습지도요령에 준거한 것입니다.

이들 교과서의 이곳저곳에서 더욱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집필자와 편집자가 쏟은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몇 개의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교과서에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을 도처에서 볼 수 있으며 집필자와 편집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시행한 2014년 1월의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과 같은 해 4월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요령 개정이 있습니다. 이 2번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 정부의 견해를 교과서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일본 정부는 2021년에 각 의결정을 통해 ‘중군 위안부’, ‘강제연행’, ‘연행’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정부는 이들 조항을 근거로 교과서에서 해당 내용의 수정을 교과서 발행자에게 사실상 강요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 발행자가 정부의 견해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3년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조사 과정에 기초하여 고노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군과 관헌이 일본군‘위안부’의 동원과 위안소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일본의 역대 총리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일본군‘위안부’의 동원에 군과 관헌이 직접 관여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말하여 문제의 본질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간 정권은 교과서에서 ‘중군 위안부’, ‘강제연행’, ‘연행’ 등의 용어를 삭제하게 하고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종전의 정부 견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일본과 세계의 학계에 의한 연구성과와도 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연행’, ‘연행’을 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식민지 상태 자체가 강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제국주의적인 입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1982년에 일본 정부 스스로가 교과서 기술에서 ‘근린 제국’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표명한 국제적인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 나아가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담겨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바라는 우리 한중일 3개국 시민은 교과서 기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권력적인 개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개입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담아 일본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교과서에 대한 정치 개입을 즉시 중지하라
2. ‘중군 위안부’, ‘강제연행’, ‘연행’ 등의 용어 사용 금지를 철회하라
3. 피해자의 인권을 소중히 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을 지원하라
4. 정부 간의 역사 대화를 재개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역사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2022년 월 일.

아시아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을 바라는 한중일 시민 일동

호소 단체 일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21

한국: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찬동(개인, 단체)

2022年8月25日

## 高校教科書などの検定結果と教科書攻撃の新たな段階

鈴木敏夫（子どもと教科書全国ネット21事務局長）

はじめに

教科書攻撃は、「新たな段階」とよぶべき事態になっている。

昨年、検定を通ったばかりの教科書が、政府の見解で用語の削除、記述の訂正が強要された。教科書会社自身による「訂正申請」で行われた。しかし、今年の検定は、文科省自らが、学術研究の成果を踏みにじり、訂正を行わせた。検定制度の形骸化、変質に他ならない。

### I 教科書攻撃の新たな段階

#### 1. 歴史修正主義の攻撃

##### (1) 新たな「政府の統一見解」

一昨年の中学校教科書採択で、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以下、「つくる会」）系の育鵬社、自由社の歴史・公民教科書は、四半世紀にわたる取り組みで、採択数を激減させたことは記憶に新しいことである。

しかし、歴史修正主義勢力の策動は続いている。「つくる会」等に加え、日本維新の会（以下、「維新の会」）が本格的に参入し、国会を舞台に策動を強めている。昨年4月、「維新の会」馬場伸幸衆議院議員（当時幹事長、現共同代表）は「従軍慰安婦」の存在や朝鮮半島からの労働者移入について、その強制を否定する「質問主意書」を出し、菅内閣はこれに応え、「政府の統一見解」となる以下のような答弁書を4月27日に出した。

- ① 「従軍」は軍の関与の誤解を与えるので、「従軍慰安婦」や「いわゆる従軍慰安婦」ではなく、「慰安婦」という用語を用いるのが「適切」である。
- ② 朝鮮半島からの人々を日本で働かせたことでは、「募集」、「官斡旋」もあり、それを一律に「強制連行」「連行」とするのは「適切」でない。法令に基づく「徴用」などとするべき。なお「『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は、戦時労働動員は国際法違反の『強制労働』に含まれないと明記している。」

##### (2) 歴史研究の成果や最高裁の判例、これまでの政府答弁にも反する「答弁書」（概要）

###### 1) 「従軍慰安婦」に関して

河野談話（1993年8月）は、「いわゆる従軍慰安婦」と表現し、日本軍の関与と「慰安所における生活は、強制的な状況の下での痛ましいものであった」としている。「慰安婦」にさせられる経緯が「強制か否か」だけを安倍元首相などは問題にしてきたが、逃れられない状況下での「痛ましい」生活であることが重大である。また「意に反してなど」の強制連行の事実も、様々な文書、研究などで明らかになっている。

###### 2) 強制連行について

① 自民党小山孝雄参議院議員（後に、教科書採択の権限は、教育委員会あり、現場の意向は無視しても問題ないとした大島理森文部大臣答弁を引き出す）は、「従軍慰安婦」の存在否定と合わせ、労働者の募集段階は、強制連行ではないと執拗に迫った。しかし、辻村哲夫（初等中等教育局長）は「強制連行は国家的な動員計画のもとで人々の労働動員が行われたわけでございまして、募集という段階におきましても、これは決してまさに任意の応募ということではなく、国家の動員計画のもとにおいての動員ということで自由意思ではなかったという評価が学説等におきましては一般的に行われ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1997年3月12日参議院予算委員会）と答弁し、吉川弘文堂の『国史大事典』を根拠として挙げていた。

② 強制労働条約は、戦争、又は地震の場合 でありさえすれば、いかなる強制的サービスをも課すことができる

という白紙許可ではないのであって、国際労働機関（ILO）条約勧告適用専門家委員会は、1999年3月の報告書で「本委員会はこのような悲惨な条件での、日本の民間企業のための大規模な労働者徴用は、この強制労働条約違反であった」と認定したのである。

歴史研究を無視した政府の答弁書自体が「欠陥」文書である。また、「徴用」は強制連行に他ならないとの、最高裁の判決も有り、日本軍「慰安婦」ともども国際的にも評価が定まっている問題であり、総じて日本政府の人権意識の低さにあきれるばかりである。

### （3）2014年改訂「検定基準」の新たな適用

政府見解で教科書記述を規制するのが、以下の2024年の「改訂」検定基準などである。

① 2014年改定された教科用図書検定基準は、小中の社会科、高校の地歴公民科についての学習指導要領解説とともに、萩生田光一前文科大臣や下村博文元文科大臣が、安倍晋三首相（当時）の意を受けて、作成したものである。「改定」は、以下のような3項目である。

- （i）「特定の事柄を強調し過ぎていたり」しない。（下線部を追加）」
- （ii）「通説的な見解がないことが明示されている…児童又は生徒が誤解するおそれのある表現がないこと」（新設）
- （iii）「閣議決定その他の方法により示された政府の統一的な見解又は最高裁判所の判例が存在する場合には、それらに基づいた記述がされていること」（新設、『政府見解条項』）

さらに、不合格要件として、教科用図書検定審査要項（検定審議会内規）に「教育基本法に示す教育の目標並びに学校教育法及び学習指導要領に示す目標等に照らして判断する」を追加した。審査要項の追加は、検定が個々の記述の適否の審査ではなく、思想審査になる危険がある。下村博文文科大臣は「目標に照らして重大な欠陥があれば、個々の記述の適否を吟味するまでもなく不合格とする」と説明した（「朝日新聞」13.11.19付社説）。

教科書出版社への“一発不合格”の脅しであり、教科書会社への圧力は一段と強まった。

② これ以後、「改訂」検定基準の（i）と（ii）で、教科書に言わば「書かせない」ことに使われ関東震災や南京事件の犠牲者、その実相を曖昧にすることに使われてきた。

中学校の2019年検定

南京事件は、新規参入の山川を含めすべての教科書で取り上げているが、内容は、従来と変わりが無い。

しかし、右のような違いがある。「産経新聞」(2020年3月25日)

**強制連行、戦後補償問題**

この問題は、各社のばらつきが大きい。育鵬社や教出には、は記述ない。

東書は、強制連行の問題では、「多数の朝鮮人や中国人が、意思に反して日本に連れてこられ、鉱山や工場などで劣悪な条件下で労働を強いられました」と書き、「志願兵」に応募した、朝鮮の若者の写真を掲載している。同社の小学校教科書では「強制的につれてこられて」と書かれているが、なぜ中学校で「強制的」の語を削除したのか疑問である。

日文は、朝鮮からの動員は国の計画にもとづいて行われたこと、戦争末期には刑罰もともなうものだったことを具体的に述べている。また、これまでも日韓請求権協定を取り上げ、「締約国および両国民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しました」「しかし、戦争被害者個人に対する補償は別であるとして、その後、日本だけでなく、アメリカでも、補償を求める訴訟がたびたびおこなわれています」と記述し、個人保障の問題があることに触れていた。新教科書でもコラム「賠償問題と歴史認識」で、アジアの人びとから個人への謝罪と補償を求める声も上がっていると、個人保障の問題が残っていることに言及している。ただ「日本政府としては、個人の請求権問題は解決済みという立場に立ちつつ」、歴代首相が反省とお詫びの気持を表明していると述べている。結局、国家間の請求権と個人の請求権は別の問題ということが今日の世界ではほぼ国際的合意とな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ことを明確にせず、個人請求権問題は解決済みで日本政府はお詫びもしていると、一面的に記述し、問題はすべて解決済みという今日の世界では通用しない誤った認識に誘導する記述となっているのは残念である。

帝國は、「賠償の意味を含めた…経済協力が行われきました。…個人に対する補償は解決済みとし、請求は退けています」としつつ、「戦争に対する認識をめぐっては、近隣諸国から意見も出されていますが、より友好な関係を築くことが望まれています」と、含みを持たしている。

③ (iii) は、領土問題で「書かせる」ことにさんざん使われてきた。

○ 新指導要領の下での小学校教科書検定 2017年度

2014年の検定基準「改訂」と同時に「学習指導要領解説」の一部改定(小中学校社会と高校地歴・公民)が実はおこなわれていた。

ア、中学地理についてみると領土問題で、改訂前では「我が国と韓国の間には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ことなどにも触れ、」となっていたが、改訂後「(竹島は)韓国によって不法に占拠され…、竹島については韓国に対して累次にわたり抗議を行っていることなどについての的確に扱い、…なお、尖閣諸島については、我が国の固有の領土であり、また現に我が国がこれを有効に支配しており、解決すべき領有権の問題は存在していないことを…」となった。

安倍元首相は「竹島と尖閣諸島を『歴史的にも国際法的にもわが国固有の領土だ』と明確に書くことで、海外で子どもたちが論争した時、しっかりと日本の考えを述べるができる」(朝日新聞2014年1月6日)とし、日本人としての自覚(日本の歴史、伝統、文化、社会等について説得力ある自己主張のできる広く、深い知識[臨教審])に通底していることを述べている。しかし、自国政府の薄っぺらい見解のみで、相手の主張やその根拠、なぜ対立が起きているかを学ばないで、国際社会にデビューできるのか、

教出	占領した首都の南京では、捕虜や住民を巻き込んで多数の死傷者を出しました。
育鵬社	日本軍によって中国の軍民に多数の死傷者が出た。この事件の犠牲者数などの実態については、さまざまな見解があり、今日でも論争が続いている。
東書	首都の南京を占領し、その過程で女性や子どもなど一般の人々や捕虜をふくむ多数の中国人を殺害しました。
帝國	南京では、兵士だけでなく、多くの民間人は殺害されました。
山川	日本軍は女性や子どもなどの一般の人々や捕虜をふくむ多数の中国人を殺害した。
日文	占領した首都南京では、捕虜のほか、女性や子どもを含む多数の住民を殺害しました。
学舎	国際法に反して大量の捕虜を殺害し、老人・女性・子どもを含む多数の市民を暴行・殺害しました。

イ、露骨な政治主導で教科書が安倍政権の領土外交の宣伝文書になっている。「固有の領土」であるはずの北方領土での政府説明の後退をみると、政権のご都合主義で領土問題を書かせるのは、教科書としてふさわしくない。

ウ、危機感を煽ることで、防衛力増強の必要を子どものころから植え付ける狙いもある。また、中国、韓国に対する非難や憎しみだけが増幅され、問題を深く理解し、相手国との対話を通じて問題を解決する考えが、教科書からはほとんど生まれる余地がなくなる。

エ、植民地支配の問題に向き合い平和的な外交解決をめざすべき

竹島の問題は、日本の植民地支配の問題が絡んでおり、日本政府が植民地支配についての誤りをキチンと認め、その上で話し合いのテーブルに日韓双方が着くことが大事である。尖閣諸島の問題でも「領土問題は存在しません」ではなく道理ある説明を国際社会にも行い、軍事的対決ではなく、平和的な外交努力が求められている。

また、小学生に「領土」と「固有の領土」の違いを教える意味があるのだろうか、またできるのだろうか。オ、平和解決へ向けた努力が必要

教出5年では、本文で「日本は、これらの島々が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相手国や国際社会にしっかり伝え、課題の平和的解決に向けて、粘り強く努力を続け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と記述し、側面の子どもの吹き出しに「国にとって領土はとても大事だけれど、となりの国々とはなかよくしていきたいね」と語らせている。

#### ○新指導要領高校「地理探究」

政府見解そのまま「竹島や北方領土が我が国の固有の領土」、尖閣諸島は「固有の領土」であり、「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言いきり、その解説では「竹島」や「北方領土」は、それぞれ韓国とロシア連邦に「不法占拠」されている、としている。北方領土は、構成する4島の名称と帰属した条約名まで書かせている。地理探究の教科書はもとより、日本史探究などでもかなりスペースを割いて、先の内容をほとんど記載しているが、韓国、中国、ロシアの主張について、解説しているものは、見当たらない。

2022年版外交青書では、「不法占拠」は2003年版以来、「日本固有の領土」は2011年版以来の表現だそうだが、教科書では、今に始まったことではない。2017年の小学校学習指導要領以来、そのような記述が既に強められてきた。

これで、「多面的、多角的考察や深い理解」（新指導要領「地理探究」など）ができるのだろうか。

#### （4）文科省の「臨時説明会」

維新の会の要求に文科大臣が応じたことを受けて文科省は5月18日に、中学社会、高校の地理歴史、公民科の教科書を発行する15社の編集担当役員を対象に異例の「臨時説明会」をオンラインで行った。新聞報道などによれば、国会でのやりとりの速記録を出し、「主なスケジュール」との資料を示し、「6月末まで（必要に応じ）訂正申請」「8月頃、訂正申請承認」などの日程も伝えたとのことである。「申請をしなければ訂正勧告をだすのか」との質問に、文科省は「『勧告の可能性はある』と答えたという」「今月中に申請を、と暗に促された形だ」（「朝日新聞」6月18日）。「これで訂正しない会社はないと感じた」（「神奈川新聞」6月20日）。

#### （5）「訂正申請」と教科書会社の対応

この後、教科書会社は「訂正申請」で、当該教科書の「不適切」とされた用語と、関連する記述の削除・修正を行った。その結果を検定審議会は9月8日、10月11日付けで、発表した。公表されなかったが、これ以降も教科書会社の削除・修正が行われた。

その結果は、「慰安婦として従軍させられ」までが「慰安婦として戦地に送られ」に修正されるなど、多くの用

語が削除・修正、関連記述は変更された。⇒「資料1」p16. 17

ただ、清水書院『私たちの歴史総合』は、「いわゆる従軍慰安婦」の用語を残し、注で「従来は、政府の談話なども含めてこのように表現されることも多かったが、実態を反映していない用語であるとの意見もある。現在、日本政府は慰安婦という語を用いることが適切であるとしている」と記述している。第一学習社と同じである。

「訂正申請」は下記のように本来、誤記・誤植の類や学説の重要な変更で行われるものである。

◇昨年の訂正申請例 山川出版『中学歴史 日本と世界』（HP掲載、学校にも同じようなものが送付されている）

1～3学年	129頁 図5	<sup>あのうづ</sup> 安濃津 づ	<sup>あのうづ</sup> 安濃津 つ	誤記
1～3学年	172頁 図4	鳥取県・島根県の県境を追加		謝った事実の記載
1～3学年	205頁 図2	山鼻村	山鼻村	誤記
1～3学年	247 注①	戦地に設けられた「慰安施設」には、朝鮮・中国・フィリピンなどから女性が集められた（いわゆる従軍慰安婦）	戦地に設けられた「慰安施設」には、朝鮮・中国・フィリピンなどから女性が集められた	閣議決定を踏まえた訂正

※前にもあったか

2014年の小学校教科書社会検定では、その年の検定基準「改訂」の先取りや未適用の指導要領編制「改訂」に沿った教科書会社の自主規制が起きた。この時、高校公民教科書で、検定前にもかかわらず、数研出版は「従軍慰安婦」と「強制連行」の記述を削除する訂正申請を出すに至った。この前例を今回「悪用」した。

2. 教科書攻撃の新段階とねらい

(1) 新しい攻撃

◆1990年代に始まるとされる、「第三次教科書攻撃」

- ① 97年に結成された「つくる会」や日本会議などは、中学校社会科教科書（歴史的分野）の「従軍慰安婦述」などの記述を問題にし、教科書会社への圧力や文科大臣による「訂正勧告」を地方議会の決議で求めていた。
- ② 「つくる会」が「自虐的」とした教科書に代わり、これが正しいとした“対案”である扶桑社教科書は、現場の教員から支持されなかった。そこで、学校現場の採択への関与を排除するため、「採択権限は教育委員会にある」とする「通知」を日本会議、教科書議連等の圧力で、文部省に出させた。これまでの現場からの要望である学校票などが廃止され、彼らは教育委員会の採択に介入して行った。結果、「従軍慰安婦」などについて書き込んだ教科書が採択されなくなる状況が生まれ、その他の教科書会社の記述も変わっていった。
- ③ 「つくる会」扶桑社版・自由社版中学教科書は、部数を増やせなかった。他方で、袂を分かった日本教育再生機構（理事長 八木秀次麗澤大学教授、以下「再生機構」）の「育鵬社」版中学歴史、公民の教科書は、教育委員会による採択で、部数を増やして行った。

しかし、一昨年の中学歴史・公民教科書採択では、自由社版や育鵬社版とも採択が激減した。「第三次教科書攻撃」は「従軍慰安婦」などの削除や他の箇所への影響など一定の「成果」をあげたが、行き詰まって行った。昨年の自由社版の検定合格ともなう中学歴史教科書の「再採択」でも、「再生機構」の活動はにぶかった。

◇教科書攻撃の新段階の特徴

- ① 中学校の社会科教科書（歴史的分野）も対象になったが、主要には高校の地歴・公民の教科書がターゲットで、新教育課程の高校歴史総合はもとより、旧課程の日本史AB、世界史AB、現代社会、倫理から、「従軍慰安婦」

「強制連行」などの用語の削除を強制した。中学高校、とりわけ高校時代は、子どもの歴史認識の形成に重要な時期であり、その時期の教科書が狙われた。

② その手法は、通例の検定を待たず、用語と関わる記述の変更を、「政府の統一的な見解」に基づき、2014年の「政府見解条項」を根拠に、トップダウンで行った。

③ 高校教科書は、学校現場が選定し、それを教育委員会が「追認的」に採択する。約500種類もある高校教科書を小中のように教育委員会採択で規制するのは、難しいので、このやり方をとったものである。

現に2012年におこり数年続いた実教出版高校日本史教科書の採択妨害事件の時は、指導主事が現場からの選定を書き換えたり、教育委員会事務局が圧力をかけたりして、現場の選定を変えさせて、排除した。

昨年の歴史総合でも、一部の県では校長会の「連絡」で、現場の選定を変えさせている。

④ 「つくる会」系の先輩格で、日本会議が関わる「明成社」版高校日本史教科書は、まともには採択できない代物で、「従軍慰安婦」「強制連行」の記述のある教科書にとって代われる物ではない。

## (2) 背景にあった政治的思惑と歴史修正主義

### 1) 菅内閣の思惑

当時、国民支持が危うくなっていった菅内閣は、改憲への「努力」などをみせ、「日本会議」などの右翼改憲勢力へウイングを広げようとしていた。

日本軍「慰安婦」問題、強制連行問題は、日韓関係の焦点となっている問題であり、日本側は、一步も引かないとのメッセージでもある。「維新の会」馬場氏は「今回の毅然とした対応は、まさしく“安倍路線の継承”」（「WILL」2021年7月号）と讃えている

### 2) 河野談話の徹底した空洞化

「いわゆる従軍慰安婦」の用語は河野談話で使われており、この用語を「不適切」と否定することで、「認めている」（菅首相）とする談話を徹底的に空文化することをねらった。

また、歴史修正主義勢力は根本的に、「河野談話の廃棄」を要求し、それは韓国との関係での政治的思惑を秘めている。昨年12月9日、衆議院での代表質問で、馬場伸幸（「維新の会」共同代表）氏は、「河野談話が、慰安婦の強制性等を裏づける証拠がないまま韓国側に配慮した、**虚構まみれの作文**だったことは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誤っていたと判断すれば修正してしかるべきだと考えますが、**歴代政権は頑として継承し続けています**。このダブルスタンダードは理解できません。このままでは、中国や韓国が外交的優位に立つべくしかけてくる**歴史戦**※で、ノーガードのまま負けるだけです。」 ※産経新聞は、『貶める韓国 脅す中国』の続編として2014年4月1日より「歴史戦」というシリーズを刊行した。「産経新聞などが展開している『歴史戦』は、先の戦争中に日本政府が国策とした展開した『思想戦』や『宣伝戦』の継続ではないか」（山崎雅弘『「歴史戦と思想戦」—歴史問題の読み解き方』英社新書2019年9月）

歴史認識の違いでの問題を戦争の道具として、相手を打ち破る戦争ととらえることは、根本的な誤りである。歴史認識は、学問的眞実に基づく対話により解決する問題であり、人権問題とも深く絡む問題である。

その「攻撃」対象は、韓国や国際社会では無く、日本の子ども、国民に対するものである。佐渡金山のユネスコの世界遺産登録問題にたいする韓国の「横やり」批判で、ナショナリズムをあおり、日本の植民地支配にからむ強制労働などや戦争責任を曖昧にするところにねらいがある。

なお、ユネスコ憲章前文は、「戦争は人の心の中で生まれるものであるから、人の心の中に平和のとりでを築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政府の政治的及び経済的取り決めのみに基づく平和は、世界の諸人民の、一致した、しかも永続する誠実な支持を確保できる平和ではない。よって、平和が失われないためには、人類の知的及び精神的連帯の上に築か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

## II 今回の高校教科書（主に2、3年生用）検定

今春から高等学校でも新学習指導要領（以下、「指導要領」）による教育課程が始まっている。その中学年（主として2.3年生用）が来年度から使用する教科書の検定結果について、文部科学省が3月29日に公表した。

共通科目においては、検定申請点数241点（冊）のうち、商業科関係の2点が申請を取り下げ、239点が合格した。昨年に検定が行われた、主として低学年（主として1.2年生用）が対象の地理総合、公共で1点ずつの検定申請があり合格した。合格した239点のうち専門教科を除く189点の検定意見の総数は6,267点で、科目構成が異なるが、1点あたりの平均検定意見数は37.0件で、旧指導要領に基づく16年度検定の26.9件を上回っている。5月下旬から教科書展示が始まっているが、全般的な特徴・問題点について概括する。

### 1 「政府見解」による文科省検定

#### (1) 「政府見解」による検定

① 今回の検定で目立つのは、その数の多さとともに、「政府の統一的な見解に基づいた記述がされていない」（2014年改定検定基準、以下「政府見解条項」）との検定意見が過去最多の12点14カ所についていることである。その結果、「朝鮮や中国から労働者が**強制的に連行され**」が「徴用・動員」に書き改められ（帝国書院『新詳世界史探究』）、「日本に**連行され**」が「**動員された**」（清水書院『高等学校 日本史探究』）となり、「日本軍慰安婦制度の犠牲となった韓国女性」が「元慰安婦の韓国女性」（実教出版『日本史探究』）となった。

② このような記述の削除・修正は昨年起こった。それは教科書会社の“自主的”な「訂正申請」であったが、今回は文科省自ら、「政府見解条項」を発動し、教科書記述を歪めたことに他ならない。

学問研究者でもない政府がその見解に基づき、いわば「検閲」により検定済みの教科書の用語と関連する記述の変更を求めるのは、検定制度の形骸化である。また、「**琉球新報**」社説は「（沖縄戦の）『強制集団死』の時は密室の中だったが、現在は閣議決定という形で公然と、教科書の『歴史修正』ができてしまう。戦前の国定教科書の復活と言わざるを得ない。これ以上、政治によって教育と学問がゆがめられてはならない。」と述べている。

萩生田光一元文科大臣は、「閣議決定できちんと政府として認めたものを記すという道しるべを作ったままです」（「朝日新聞」8月1日）とうそぶいている。

#### (2) 教科書会社の抵抗と工夫

このような中でも、教科書会社は、唯々諾々と従っているわけでもない。

① 東京書籍『政治・経済』に「河野談話（1993年、抜粋）」のコラムがあった。これに「政府見解条項」の検定意見が付き、太字のように追加、修正して合格となった。

河野談話（1993年、抜粋）「慰安婦問題」に関する調査結果を受け、当時の河野洋平官房長官が発表した談話。

本件（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る。政府は、この機会に、（中略、引用者）…われわれはこのような歴史の真実を回避することなく、むしろこれを歴史の教訓として直視していきたい。われわれは、歴史研究、歴史教育を通じて、このような問題を永く記憶にとどめ、同じ過ち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という固い決意を改めて表明する。

「慰安婦問題」に関する調査結果を受け、当時の河野洋平内閣官房長官が発表した談話。「慰安婦問題」への日本軍関与を認め、現在に至るまで日本政府の公式見解となっている。

修正文「慰安婦問題」への日本軍関与を認めた談話で、日本政府の公式見解となっている。2021年に「従軍慰安婦」ではなく「慰安婦」の用語を用いることが適切との閣議決定が行われた。

② 第一学習社『高等学校日本史探究』の「多数の朝鮮人を強制連行した。」の下線部に「政府見解条項」の検定意見が付いたが、「強制連行」の用語を残し、側注で「**2021年4月、日本政府は、戦時中に朝鮮半島から労働者がきた経緯はさまざまであり『強制連行』とするのは不適切とする閣議決定をしたが、実質的に強制連行にあたる事例も多かったとする研究もある。**」とし、検定合格した。同社の『高等学校 歴史総合』も昨年同様な対応をしていた。

③ これらの用語が残ったことに「産経新聞」は「自虐史観的な表現の払拭にならなかった」と批判的であるが、文科省が、共産党畑野君枝議員の質問に「**政府の見解に触れた上で、それとは異なる見解を記すことまで否定してい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衆議院文教科学委員会 2021年6月9日）の答弁がある。実は2014年の「教科用図書検定基準改定」の際、検定審議会委員から、政権交代で政府見解が変わり、教科書記述が影響を受けることに疑問が呈され、上記のように答えていた。その再確認があった。

④ 中学校社会科教科書から、昨年の「訂正申請」で「強制連行」が一扫され、「慰安婦」記述は7社中1社になったのに比べれば、不十分ではあるが、高校教科書には「慰安婦」用語が残っている。側注で「**戦地に設置された日本軍向け『慰安施設』には、日本・朝鮮・中国などから女性が集められ、『慰安婦』として働かされた。強制されたり、だまされて連行されたりした例もある**」（山川出版『詳説 日本史』）との記述もある。また、「強制連行労働者」を「強制的に動員され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た者」とするものもあり、授業の手がかりすることが可能な面がある。

※執筆者などの思い→「資料2」

## 2. 注目される項目

### (1) 沖縄に関する記述の問題

「1951年4月28日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発効で沖縄が日本本土から切り離された『屈辱の日』から70年」だったが、この日に直接触れた「日本史探究」は1社のみで、沖縄の米軍統治下の「沖縄の苦悩」の説明不足と「沖縄タイムス」は、書いている。今年は、沖縄の本土復帰50年を迎える。この間と現在の沖縄の置かれている問題は、「台湾問題」を口実とした、南西諸島への自衛隊の配備ととともに考えるべき問題である。

「琉球新報」によれば、「集団自決（強制集団死）」については、「日本史探究」の7冊すべて記述があり、「日本軍により…集団自決を強いられ」（実教出版『日本史探究』）などの記述はあるが、軍関与に触れない山川出版の2冊の教科書もあるとのことである。また「軍命」による「集団自決」の強制は、2006年度検定以後、沖縄県民をはじめとする強い抗議にもかかわらず記述できないままである。ただ今回、「文学国語」の第一学習社の2冊が大田昌秀元知事の著作についての解説「コラム」の中で「日本軍よって『集団死』も強制された」と記述し検定意見が付されなかったことを「沖縄タイムス」が報道した。文科省の地歴科への検定も改めるべきである。

### (2) 領土問題

「日本史探究」の指導要領は「北方領土」や「竹島、尖閣諸島の編入についても 触れる」とある。その指導要領解説（以下、「解説」）では「北方領土」は一貫して我が国の領土であり、竹島、尖閣諸島については、領土に編入した経緯とそれが、「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正当であることを理解できるようにする」と踏み込んでいる。外交青書では「不法占拠」「固有の領土」は書かないこともあるが、「地理探究」では、指導要領で、竹島などは「我が国の固有の領土」とともに「尖閣諸島」については、「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言いきり、その「解説」では「竹島」や「北方領土」は、それぞれ韓国とロシア連邦に「不法占拠」されているとまで書いている。こうして、日本政府の見解に沿って執拗まで、編入の経緯やその正当性を含め書かせている。

今回の検定では「北方領土」の構成する4島の名称、地図上の位置、帰属した条約名まで書かせている。政治に翻弄され、韓国、中国、ロシアの主張について触れず、日本政府の見解だけで、生徒が「多面的、多角的考察や深い理解」(指導要領)ができるのだろうか。

### (3) 南京虐殺事件

今回の高校教科書検定でも、**南京事件**について「犠牲者数は約20万や10数万、それ以下など諸説あるが、時期・地域の範囲…などの論点がある。」(実教出版『精選 日本史探究』)は、「通説的な見解がないことが明示されていない」との検定意見がついて「…諸説あって確定していない。犠牲者数はじめ、時期・地域の範囲…などの論点がある。」と追加修正された。名称も南京虐殺事件は、この間の検定を反映して、総じて南京事件となっている。東京書籍『世界史探究』の日本軍の「南京入城」写真の説明に「南京占領の際におこした捕虜や市民の殺害は、『南京虐殺事件』ともよばれ」とあるのが目立つ程度である。

昨年の東京書籍『詳解 歴史総合』で「(注)捕虜や、女性をふくむ一般住民(非戦闘員)に対して、暴行、略奪、集団的な虐殺が行われた。殺害の人数について、日本では数万～十数万以上など諸説があり、中国政府は30万人以上を主張している。この事件は、当時、日本国民には知らされなかった。」に検定意見はついていなかった。細部までにこだわることの破綻である。

## 3. 現代的課題について

新たな状況を踏まえて「18歳成人」や「コロナ禍」について、考えさせ、話し合いをさせる企画もある。ただ、そうした時間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

### (1) ジェンダー

日本のジェンダーギャップ(男女格差)の現状などを地歴・公民を中心に取り上げられている。内容的には、ジェンダーバイアス、男女差別、男女共同参画やLGBTなどである。東京書籍の「物理」で「日本では物理学を学ぶ女子生徒の割合がとて少なく、それはなぜなのか」(ではじまり)「数学や物理学で必要とされる計算能力や論理的思考力に、性別による差はないと指摘」(朝日新聞)などは、注目される。

この問題が十分理解されていない例としては、外国語の「論理・表現Ⅱ」で「冷蔵庫と洗濯機の発明は社会、特に女性にとって最大のインパクトを与えたと思います」という英文に「家事は女性の役割と誤解する恐れ」との検定意見が付き「特に女性の」部分が削除されている(産経新聞)

### (2) 18歳成人

民法改正により、この4月から成人年齢が18歳に引き下げになったことを踏まえ、政治・経済の教科書はすべて取りあげているが、注目点は「契約・選挙に力点」(毎日新聞)である。東京書籍『政治・経済』は「18歳からの社会参加」の「特設コーナー」で「選挙権の行使にむけて」「ライフプランと金融」「働き方について考える」など6項目、9ページで多面的に取りあげている。

### (3) コロナ問題

新型コロナに関する記述は、昨年の6教科29点より感染症の歴史などが大幅に増えて7教科53点となり、地歴・公民だけでなく、「数学では、政府の対策でも使われている疫学の数理モデルも取り上げ」(朝日新聞)ている。

「専門家の知見を政治にどう生かすべきか」(数研出版『政治・経済』)は、原発事故も含めて、新型コロナ対策でのあり方を論じている。その中で「専門家が直接国民自衛要請望ましかったか」(朝日新聞)として、専門家に世によって政治が動かされたことに注目しているが、より問題なのは、安倍首相(当時)により、2020年3月に全国一斉休校の方ではないか、安倍首相の「要請」が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基づかず、定められている通常の行政手続きも踏まずに、首相のまったくの独断によって突然行われた。そして、各自治体でも教育委員会ではなく、首長によるトップダウンの休校は、大きな禍根を残した。ことの方ではないか。

#### (4) 우크라이나 문제

昨年 5 月の中頃に検定申請の「白表紙本」が出されており、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に触れた教科書はない(まともな意味での「訂正申請」が来春にまでに出される公算が大きい)。しかし、この間のクリミア紛争(ロシアのクリミア併合)に関して、地歴・公民の教科書はすべて、取りあげている。中には、「その後、EU加盟国は東欧にも拡大した。なお、北大西洋条約機構(NATO)も1999年以降、東欧諸国の加盟による拡大を示現した。」(山川出版『詳説 世界史』)と、今回のロシアの軍勢力と対決してきた軍事同盟NATOの東方拡大に触れているものもある。

### 4. この問題をどう捉え、どう打ち破るか

#### (1) 検定基準の一層の「悪用」

これまで2014年改訂検定基準の「政府見解条項」は、主に領土問題で使われてきた。これ自体日本政府の見解の一方的押しつけだったが、内容は外交問題の教科書への持ち込みであった。しかし、今回は学問研究の内容に関わる問題であり、その成果を一遍の政府見解で葬り去る暴挙である。

#### (2) 検定制度の形骸化

一度検定を通った教科書に対する「新たな政府見解」による教科書記述の訂正が常態化すれば、政府・政治は教科書記述がいつでも変えられる。検定制度の形骸化である。検定は問題であるが、検定調査官との一定のやりとりもある。不十分ながら、蓄積されたルールもある。昨年の「訂正申請」は、問答無用の介入であり、訂正申請、検定に関わる文科省の「検定審議会」などは、公開されている議事録に見る限り、何らの議論もなくただただ追認している。検定基準の一層の踏み込みに誰ひとり、疑問を呈していない。

#### (3) 教育と学問の自由、子どもの学習権にかかわる

① 歴史研究者でもない政府が用語の適否を判断する「新たな政府見解」は、学問・研究に対する乱暴な介入であり、教科書記述の書き換え強要は、学問の自由や言論、出版の自由に反し、教育に対する不当な支配である。

学問の自由は、明治憲法にはなかったもので、家永教科書裁判の杉本判决では「学問の研究は常に新しいものを生み出そうとするいとなみであって、歴史の発展に寄与するところが大きかった反面、それだけにときの為政者による迫害を強く受けてきたことにかんがみ、とくにこれを制度的に保障し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と述べていることの重みを今一度かみしめたい。

最近の政府の動きは、戦前の歴史を彷彿とさせる。2020年には学会協議会6人の任命を問答無用で拒否した。そして今回の教科書記述への直接介入である。これらは、国民全体の言論表現の自由、思想信条の自由を揺るがす違憲・違法の暴挙であり、戦前回帰へのながれである。

今春の検定を受けて、「琉球新報」社説は「(沖繩戦の)『強制集団死』の時は密室の中だったが、現在は閣議決定という形で公然と、教科書の『歴史修正』ができてしまう。戦前の国定教科書の復活と言わざるを得ない。これ以上、政治によって教育と学問がゆがめられてはならない。」と述べている。

② 今回の介入、これまでの「領土問題」「南京虐殺事件」や「関東大震災」の記述の制約は、文科大臣による告示に過ぎない「検定基準」が使われている。

「検定基準」で、教科書記述を縛ることについて、2014年の教科書検定基準の改定に際して、日本弁護士連合会は「教科書検定基準及び教科用図書検定審査要項の改定並びに教科書採択に対する意見書」(2014年12月19日)を出している。要約すると以下のようになり、ここで指摘されていることが現実となってきている。

①「国が、政府見解や最高裁判例の教科書への記載を積極的に求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れば、社会的に議論がある事柄について、政府見解や最高裁判例の結論が唯一の『正しい』結論であるとの印象を教科書の記載を通じて子どもたちに与えかねず、子どもが多様な見解や多角的な視点から見た事実を学習し、自らの自律的な判断力を育む機会を奪うことになりかねない」

② 改定された教科書検定基準の「特定の事柄を強調し過ぎている」とはいかなる場合か一義的に判断できない。さらに、「通説的な見解がない」とはいかなる場合を指すのかも不明確である。時の政府によって、通説的な見解があるか否か、ある学説が通説的な見解なのか否かが表明されることになり、学問の自由に対する過度の介入となるおそれがある。「閣議決定その他の方法により示された政府の統一見解」との基準もその範囲が不明瞭である。「閣議決定その他の方法」とは、国会審議における内閣の答弁も含まれるのか、含まれるとするといかなる基準で「政府の統一見解」と評価されるのか判然としない。

③ 萎縮効果 また、あいまいな検定基準により審査が行われると、教科書出版社がいかなる記述が当該基準に当てはまるのか一義的に判断できないため、教科書出版社が萎縮し、より政府に都合のよい記述を行おうとすることにつながり、萎縮効果が生じるおそれがある。

④ 教科書出版社の表現の自由・学問の自由の侵害のおそれがある 国が教科書に特定の事項を記述するように求めることは、教科書出版社の表現の自由や学問の自由等を侵害するおそれが高まる。例えば、領土問題や首相の靖国神社参拝について、…周辺諸国と意見の対立があることのみを指摘や憲法上の問題が指摘されている旨だけの記載をした場合でも、本件各改定後の教科書検定基準によって政府見解や最高裁判例を記載することが要求される可能性がある。

⑤ 子どもの情報を受け取る自由を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 成長・発達過程にある子どもには、自己を成長させるために、様々な情報を受け取る自由がある（子どもの権利条約13条1項、同17条）。ところが、国が政府見解・最高裁判例に基づく記述を教科書に義務付けた場合、子どもがそれ以外の考え方を受領する機会を狭めてしまう。2010年の国連子どもの権利委員会の日本に対する条約44条に基づく政府報告書審査最終所見では、「本委員会は、日本の歴史教科書が、歴史的事実に関して日本政府による解釈のみを反映しているため、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国々の子どもの相互理解を促進していないとの情報を懸念する。」（74パラグラフ）、

「本委員会は、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歴史的事実についてのバランスの取れた見方が検定教科書に反映されることを、締約国政府に勧告する」（75パラグラフ）と指摘されている。

⑥ 国連総会における、文化的権利に関する特別報告者の指摘 2013年第68回国連総会において、歴史教科書に特に焦点を定めて出された報告（A/68/296）がなされた。この文化的権利に関する特別報告者は、その「結論と勧告」部分において、歴史教育は、愛国心を強めたり、民族的な同一性を強化したり、公的なイデオロギーに従う若者を育成することを目的とすべきでないと明確に述べている。さらに、幅広い教科書が採択されて教師が教科書を選択できることを可能にすること、教科書の選択は、特定のイデオロギーに基づいたり、政治的な必要性に基づくべきではないことも勧告されている。

そして何より、歴史教科書の選択は歴史家の手に残されるべきであり、特に政治家などの他の者の意思決定は避けるべきとした（88パラグラフ）。以上の観点からすれば、改定された検定基準の特に「ウ 閣議決定その他の方法により示された政府の統一見解又は最高裁判所の判例が存在する場合には、それらに基づいた記述がされていること」という内容は明らかにこの特別報告者の指摘に反する不当なものである。

「国による過度の教育介入として憲法26条に違反し子どもの学習権等を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いわざるを

得ず」としていた。

日弁連は、今回も以下のような会長声明を出している。

「閣議決定とこれに続く一連の動きによって実現された教科書内容の変更は、当連合会が前記意見書で指摘した危惧が現実化したものにほかならない。時々の政権が新たな見解を示すことで教科書の記述が変更させられるという事態は、国家（政府）による教科書内容統制と評価されるべきものであって、前述の憲法の趣旨から到底許されるものではない。…当連合会は、上記の閣議決定から教科書内容の変更に至る一連の経緯に深い憂慮を表明し、その根拠となっている改定教科書検定基準の撤回を、改めて求める（2022年2月17日 日本弁護士連合会 会長 荒中）。

今日のウクライナへのロシアの侵略戦争は、日本の「満州事変」と類似していると指摘される。そうした過去の歴史と戦争の悲惨さ、植民地とされた人々の思いなどを伝え、考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学習権の保障である。政府の思惑、政治的意図で教科書を変えることは許されない。

2014年改訂「検定基準」や「検定審議会」を含め、教科書検定制度全体を見直すべき時にきている。

#### （4）戦争する国への動きを阻止する

教科書の問題としての重要性和、東アジアの平和と日本の将来に関わる問題として、幅広い人々と課題を共有し、世論を喚起していくことを追求してきた。

今春には、学術会議会員推薦拒否問題とあわせ、「慰安婦」問題解決オール連帯の皆さんと今回の策動の舞台となった国会で院内集会をおこない、一定の成功を収めた。引き続き連続学習会などを計画している。

昨年の「要求書」（「従軍慰安婦」など歴史用語の教科書記述に対する政府の介入に抗議し、政府見解とそれに基づく訂正申請承認の撤回、2014年改定検定基準の廃止を求める）は、予想以上に多様な団体から、多数の賛同が集まり220団体を越えた。

今年は、中国、韓国にも運動を広げている。今回の問題は、国際公約の「河野談話」「近隣諸国条項」を有名無実化し、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への道を妨害するものとして、韓国の市民団体「アジアの平和と歴史教育連帯」と共同で「教科書記述に対する日本政府の政治介入を憂慮する（声明）」（「資料3」）への賛同を日中韓3国の団体、個人に訴える運動を開始した。日本で180団体、334名の皆さんの賛同。韓国では有力8団体と213人の賛同になった。歴史学研究会、日本史研究会、歴史教育者協議会ははじめとする歴史・教育研究会、出版労連、全日本教職員組合、日本民間教育研究団体連合会、民主法律協会、自由法曹団、許すな！憲法改悪市民連絡会、個人では吉見義明さん、中島三千男さん、本田由紀さんなどからいただいた。

記者会見を7月12日におこなった。神奈川新聞、韓国の聯合通信などが報じた。今後もその実態とその危険な内容を広く知らせていき、教育と学問がゆがめられることは、やがて戦争する国へと進む恐れを指摘し、それを阻止していきたい。

### Ⅲ 指導要領をめぐる問題

#### 1. 国語を「論理」と「文学」に分けた「新学習指導要領」の破綻

毎日新聞「論理・文学 切り分け『困難』」の見出しが目立っている。指導要領では、論理的文章（評論）と実用的文章（説明文、法令）などを学ばせることを重視し、必修で「現代の国語」、選択で「論理国語」を設けた。そして、小説、詩歌、文学、評論は、必修「言語文化」、選択「文学国語」に切り分けた。

しかし、現場からは、こうした切り分けは「授業編成」がやりにくいとの声が上がリ、掲載できないはずの小説を載せた第一学習社『現代の国語』が結果的に採択数でトップとなった。

今回、原則として文学作品を扱わないとされた「論理国語」で、全13点の教科書のうち2点で夏目漱石の「こ

ころ」等の小説を「関連資料」として合格させる検定結果となった。一方、「文学国語」は、合格した11点すべてが評論文を盛り込んで、文学に関連する教材として、検定を通過している。このことを紹介して、読売新聞は社説で「国語の科目再編は無理がある」と指摘し、「論理」と「国語」を分離することの無理をのべ、文学作品に触れることが論理的思考の育成にも重要だと指摘している。

2018年実施のPISA（国際学習到達度調査）で、日本の15歳（高校1年生）の読解力が2015年調査の8位から15位に低下し、PISAの出題内容に関して「いくつかの資料を見比べて情報の質を判断する」「テキストから情報を採り出す問題」などの得点が低かったところから、契約書などを読ませる「実用文」重視の「国語改革」が短絡的に提起された。それに沿った新指導要領の新科目構成を行ったところ、このような破綻を見せる結果となったのである。それはこれまで複数社から申請のあった選択科目「国語表現」の発行が1社に留まったことにも現れている。現場の意向、文学関係学会の声明や学術会議の提言に耳を傾けて、新指導要領の見直しと当面の「柔軟な」運用が求められる。

## 2. 「探究」や「探究科目」は、生徒の学びを深めることになるのか

**(1) 前史：小学校教科書、中学校教科書…「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が強調され、授業方法で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AL）が押しつけられ、内容の増大とともに、扱いが難しくなっている**

### ○小学校

#### 1) 「何ができるようになるか」を前面に

学校教育法の改正で定めた「学力の3要素（「基礎的な知識及び技能」、「思考力、判断力、表現力」、「主体的に学習に取り組む態度」）をさらに「何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か」（育成を目指す資質・能力）にバージョンアップ。ア「何を理解しているか、何ができるか（生きて働く「知識・技能」の習得）」、イ「理解していること、できることをどう使うか（未知の状況にも対応できる「思考力・判断力・表現力等」の育成）」、ウ「どのように社会・世界と関わり、よりよい人生を送るか（学びを人生や社会に生かそうとする「学びに向かう力・人間性等」の涵養）」の三つの柱に整理。「情意面や態度面についてについて、自己の感情や行動を統制する力」など道徳的な内容で、資質・能力をどの方向で生かすかが問われる（国家、社会の形成者）

#### 2) ALの多用

学びの質向上の為「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主体的な学び」「対話的な学び」「深い学び」）の実現に向けた授業改善（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視点に立った授業改善）を推進すること。教科用図書検定基準でも「全教科でALの実現に資するよう適切な配慮がされていること」が盛り込まれている。ALは164点の教科書中、地図2点を除く162点で取り入れられている。

→ページ数を増やし、調べ活動や意見発表、子ども同士の会話や討論、まとめなどを多用して、授業の質も変えようとしている。

例えば、

①社会科で、東京書籍（東書）は「学習の進め方」で「つかむ」→「調べる」→「まとめる」→「生かす」となっている。6年の歴史では「戦国の世から天下統一へ」の「まとめる」で、見開き2頁を使い、現行教科書ではなかった「天下統一に向けての働きがより大きかったのは信長か秀吉か」をテーマに、「自分の考えをノートに書き、次に「ミニ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をしましょう」がある。そして、出された意見を参考に「学習のまとめ」を書くことになっている。ただ、「自分のまとめ（考え）」や「学習のまとめ」の例が教科書に載っている。

東書の4年の布田保之助の「通潤橋」を作った話は、「調べること」「調べ方」が詳しく書かれている。しかし、最後の「まとめ方」は子どもが考えるのではなく「表彰状をつくる」と決めてある。光村道徳教科書5年にも「感謝」で布田保之助を取り上げている。特定個人を大きく取り上げ、偉人伝に仕立てる道徳に似てきている。

②「特別の教科 道徳」では、光村図書（光村）の場合2年生以降の教科書に「読んで」「話し合って」「書いて」「えんじて」「考えよう」が現行版でもあった。しかし、今回は2年生で「くらべながら話し合うとき」も入って

きて、より複雑になっている。

光村4年の題材のなかで、現行版も「えんじて話し合う」があったが、今回は具体的に演じる場が半ページを使って描かれている。このような「演じる」は他の教科書でも目立つのは、AL強調の影響ではないか。

### 3) 教科書の作りが、誘導型になっている

ALのやり方にとどまらず、板書例や授業の進め方などのガイドラインを掲載する教科書が目立っている。発問の下にヒントがあったり、つぎのページに答えが載っている、あるいは考える視点などを決まった形で誘導している。これは「先生に親切設計」(朝日新聞 3月27日)なのか、果たして本当の意味での「多面的・多角的に考え」る学びとなるのだろうか、「『詰め込み』へ逆戻りする危険性もはらんでいる」(毎日新聞 3月27日)や同紙耳塚寛明「授業が型にはまってしまう恐れもある」。「型どおりの授業にならないか」(朝日新聞「視点」3月27日)の危惧もある。それ以上に、教師の専門性を発揮させることなく、文科省が望む内容に誘導されていく危険性をはらんでいるのではないか。

結局、これで「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となるのか、子どもには「難しくついていけない」「面白くない」となるのか。いずれにせよ、教員の授業準備、時間配分も含めて、かなりの負担になることは目に見えている。

### ○中学校…問題の多い「主体的・対話的な深い学び」

各教書ともALがらみの「テーマ学習」が増えている。新聞で取り上げられたいくつかを見てみる。

・東書・歴史：古代日本の「キーパーソン」について、まず、各個人がその結論を「くらげ」の頭に書き、足にその根拠を書いて示す「くらげチャート」作成し、グループで一つに絞り、クラスで発表する。それを基に、古代がどのような時代であったかをまとめる。例示された結論は、聖徳太子や空海である。聖徳太子の根拠に、十七条の憲法だけでなく、冠位十二階制定、遣隋使の派遣まで「行ったこと」となっている(根本は指導要領にあるからであるが、これは歴史研究を無視している)。このような学習で、「古代がどのような時代であったか」がわかるのだろうか。

このような「思考ツール」(イメージマップ、Xチャートなど)やブレインストーミング、KJ法など企業研修などで使うものが多用されているが、中学生や教員が使いこなせるのだろうか。単なる「やっている感」で終わらなければ良いが。

・帝国・歴史の「多角的・多面的に考えてみよう」「赤穂事件を考察する」江戸時代の赤穂事件(「忠臣蔵」)について、幕府による赤穂浪士の処罰の是非などについて話し合うとなっている。中学生が忠臣蔵についてどれだけ、興味関心があるのだろうか。それよりも、同じく『母性保護論争』を考察する一女性のこれからの生き方を三人が激論!」の方を取り上げた方が良い。与謝野晶子、平塚らいてう、山川菊枝の三者三様の女性の自立、母性保護のあり方について、議論するのが、今風であるし、「軽重を工夫する」一端である。

公民にも、「赤字バス路線に税金を使うべきか?」(帝国)、「町づくりのアイデアを提言しよう」(教出)、「自分たちのまちの首長を選ぼう」(日文)、「S市の市長になって条例を作ろう」「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の経営者になってみよう」(東書)などがある。

・道徳でも学習研究社[学研]は、教科書の冒頭に、考えを深める四つのポイント(1. 教材と出会う→2. 教材をもとに考える ⇨ 3. 話し合い、磨き合う→4. 生き方について考えを深める)を一層AL風にして、考えを深める四つのステップ(1. 見つけよう→2. 考えよう ⇨ 3. 話し合おう→4. 生き方につなげよう)としてほとんどの教材に導入した。

流行のごとく随所にこのような学習を取り入れており、百花繚乱のようにも見え、中には興味深い題材もある。しかし、「市長や経営者」になることが、中学生に身近なのか、中学生の目線のみでも大事である。こうした設定などを見直し、もう少し工夫や精選がいる。また深い学びには、基礎的な知識や社会経験も必要であり、時

間の余裕があるのか。

## (2) 日本史探究

### 1) これまでの日本史Bと比べて

新学習指導要領（以下、指導要領）では、「資質・能力」の獲得を重視し、事細かに学習内容を規定し、特に何ができるようになるかを重視し、その為に『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視点からの学習方法・過程の改善まで求めている。その具体化として「探究学習」が導入され、地歴科、公民科では科目再編が行われ「探究」関係の「地理探究」「世界史探究」「日本史探究」がおかれた。

日本史 B	日本史探究
(1) 原始・古代の日本と東アジア ア 歴史と資料   イ 日本文化の黎明と古代国家の形成 ウ 古代国家の推移と社会の変化 (2) 中世の日本と東アジア ア 歴史の解釈   イ 中世国家の形成   ウ 中世社会の展開 (3) 近世の日本と世界 ア 歴史の説明   イ 近世国家の形成   ウ 産業経済の発展と幕藩体制の変容 (4) 近代日本の形成と世界 ア 明治維新と立憲体制の成立 イ 国際関係の推移と立憲国家の展開 ウ 近代産業の発展と近代文化 (5) 両世界大戦期の日本と世界 ア 政党政治の発展と大衆社会の形成 イ 第一次世界大戦と日本の経済・社会 ウ 第二次世界大戦と日本 (6) 現代の日本と世界 ア 現代日本の政治と国際社会 イ 経済の発展と国民生活の変化 ウ 歴史の論述	A 原始・古代の日本と東アジア (1) 黎明期の日本列島と歴史的環境 (2) 歴史資料と原始・古代の展望 (3) 古代の国家・社会の展開と画期（歴史の解釈, 説明, 論述） B 中世の日本と世界 (1) 中世への転換と歴史的環境 (2) 歴史資料と中世の展望 (3) 中世の国家・社会の展開と画期（歴史の解釈, 説明, 論述） C 近世の日本と世界 (1) 近世への転換と歴史的環境 (2) 歴史資料と近世の展望 (3) 近世の国家・社会の展開と画期（歴史の解釈, 説明, 論述） D 近現代の地域・日本と世界 (1) 近代への転換と歴史的環境 (2) 歴史資料と近代の展望 (3) 近現代の地域・日本と世界の画期と構造 (4) 現代の日本の課題の探究

「日本史探究」は、近代以降を扱った「歴史総合」を学んだ後の選択科目であり、旧課程の古代から現代までの学ぶ日本史Bに相当し、本文や大きな展開の仕方は従来の日本史Bと同様な通史的配列になっているが、大項目（一つの時代）を、「転換」と「画期」でくくっているのが、従来と違うところである。Dでは「(3) 近現代の地域・日本と世界の画期と構造」「(4) 現代の日本の課題の探究」となり、科目の「まとめ」の意味を持たせて

いる。

なお、学習指導要領（以下、指導要領）では、「探究学習」は主体的に問いを立て、解決策を探ることがうたわれ、「様々な事象を多面的・多角的に考察し、現代の諸課題について探究する力の育成をめざす」とされており、これまでの「日本史B」に比べ、自ら問いを立てることや多様な資料を活用して学習する、主体的な学びが重視される。勿論、中学校までの学習や「歴史総合」の学習との連続性を踏まえる。その点では、上記表のように、日本史Bでは「大項目」(1)~(6)の半分が近代以降であるのに対して、「日本史探究」は近代以降の項目D「近現代の地域・日本と世界」は4つの大項目のうちの1項目で、全体の1/4となった。近現代の事象については「歴史総合」で学習済みと言うことか。

後述するような「探究」的な課題があり、教科書のページ数は平均で6.6%ほど増え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標準単位数は4から3単位に減単位されている。なお、全ての教科書に「資料・ウェブサイトなどデジタルコンテンツに関する二次元コードが掲載されている。

## 2) 日本史探究は生徒の学びを深めるか

### ○日本史探究の構造

① 歴史総合では、様々な資料を基に、生徒が学習内容についての疑問を「問い」として表現する学習、生徒に「考えさせる」ことが重視されていたが、日本史探究では、「様々な事象を多面的・多角的に考察し、現代の諸課題について探究する力」をめざし、より主体的に生徒自ら資料などを読みこなし「仮説」を立てるなど一層高度な内容になっている。

② 指導要領による「大項目」(A「原始・古代の日本と東アジア」など)の中項目はどうなっているか。

中項目(1)では**時代の転換に関わる事象を基に…時代の転換について理解する**。ことを踏まえて、中項目(2)及び(3)の学習を見通した**時代を通観する問いを表現**できるようにする。

中項目(2)では各時代の特色について**仮説を表現する**。

**強調**は引用者 以下同じ

中項目(3)では、「時代を通観する問い」や「仮説」を踏まえて、資料を活用して「**主題を設定**」し、事象の意味や意義、関係性などを考察し、「**歴史に関わる諸事象の解釈や歴史の画期を表現する**」などの学習を通じて、各時代の歴史の展開についての深い理解に至る学習の過程が示されている。勿論それぞれの項目の学習が前提である。

③文科省の「平成30年改訂の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に関するQ&A <地理歴史に関すること>」(以下「Q&A」)によれば、

**「時代を通観する問い」**とは「歴史総合」や「世界史探究」の「問い」とは違い、「時代の転換の理解を踏まえて、その後の時代の特色と歴史の展開との関係の考察に向かうための学習の見通しを表した問い」としている。

**「仮説を表現する」**は、「提示された複数の資料を活用して、対象となる時代の特色について多面的・多角的に考察し、(3)の学習に向けてその時代を展望する学習活動で、「時代の展開について、例えば、「○○のような社会(時代の特色に関わる状況)が実現したのは、○○の影響があ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のような社会は○○のような方法で実現され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状況になったのは○○が関係して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は○○が契機となり変化を生み出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などのを例としてあげている。

**「主題を設定」**は、事象の意味や意義、関係性などを考察し、「**歴史に関わる諸事象の解釈や歴史の画期を表現する**」などの学習を通じて、各時代の歴史の展開についての深い理解に至るものとしている。

※これらは、生徒がおこなう活動だが、「仮説を表現する」などで、「その際、教師は、例えば、資料と時代の特色の関係を結びつけるような様々な 問いかけを行うなどして、生徒が、資料から時代の特色を見いだすための視点を 形成するように指導を工夫することが大切となります。」とあるが、これは、すべての段階で教師の指導が必要である。

生徒も大変だが、担当する「教員の時間的、精神的な余裕」(朝日新聞社説)が必要である。

○なぜこのようになっているのか。

指導要領の「内容の取り扱い」での、「我が国の歴史を大観して理解し、考察、表現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に指導の重点を置き、個別の事象のみの理解にとどまることのないよう留意すること。また、各時代の特色を総合的に考察する学習及び前後の時代を比較してその移り変わりを考察する学習の充実を図ること。」が強調されている。これは「時代の転換に着目して」「画期などを根拠を示して表現」が多用されている。ことに通ずるか。

つまり、これまでの時系列に沿った通史ではなく、それぞれの大項目を通観し課題の解決を見いだすことの集合で、特に大項目Dはその傾向が強く、テーマ学習の様相である。こうしたことが、資料などを読み解き、仮説に対する自分なりの解答を見つけることが、主体性を含めた資質能力の育成につながると考えているように見える。古代から近現代に至る歴史を貫く「法則性」や「発展」には、関心がないのか。

### 3) 各教科書の状況

指導要領が上記のようなものとして、実際の授業に使う教科書はどうなっているか。

○探究の手順など実際

①東京書籍は、探究の方法を見開きで「1 主題の設定→2 資料・情報の収集→3 考察(仮説の吟味や妥当性の考察)→4 表現」と説明し、中世、近世、近現代の時代のくくりで、当時の様子を描いた絵や写真、書物や人口の変化を示すグラフなど関連するさまざまな歴史資料載せるページを設けて、それらを活用し、「時代の特色についての仮説を立ててみようとしている。

②第一学習社では、「テーマ・課題の設定→「問い」の設定→「仮説」立てる→情報や資料の収集・調査→整理・分析→まとめ・表現」と巻頭ページで探究の手順を図示している。

具体的展開では他の教科書と比べ「考えられる仮説」と「仮説欄」までつくっている。それに執拗に検定意見(「(1)で表現した時代を通観する問いを踏まえ、…」)がついている。

③実教出版『日本史探究』は、「歴史教科書の上手な読み方ー「覚える」から「さがす」へ」など2ページを使い、探究学習への「仮説」など実例などあげながら、アプローチを上手く説明している。

④実教出版『精選日本史探究 今につなぐ 未来をえがく』は、教科書の使い方で「主題の問い」などを分けるようにし、どこで「通観する問い」「仮説をたてるか」を本文で示している。トピック的な「はたらく、あそぶ、たたかう、つながる」や「地域フォーカス」「歴史の中の動物」等多彩で分かり易く、興味深いものが多い。探究学習に対応した特集ページでは、ジェンダーギャップの現状と題して、歴博の企画展『性差の日本史』の展示図録をみながら、時代の特徴や気づいたことをレポートし、論議をしている。そして、現在もある男女格差にどんなものがあるかあげ、歴史的背景について調べてみようと呼びかけている。

⑤清水書院は、指導要領「B 中世の日本と世界」が「編」となり、その下の章が例えば「中世の転換と歴史的環境」で、節の項目が「中世社会はどのようにして成立したか」など指導要領そのまま、時代を通観する問いや仮説を立てるようになっている。さらに「探究しよう」の項目が仮説の解明につながるようになっている。

⑥山川出版の一点は、日本史Bとおなじ書名『詳説日本史』を使い、所々に「問い」をちりばめているが、内容的にもそう変わらない記述になっている。「指導要領に示す内容に照らして、扱いが不適切である」として、Dの「(4) 現代の日本の課題の探究」について、大幅な書き換えで「問い・仮説をたててみよう」「仮説を検証するために…」となった。

「資料1」訂正申請の結果(文科省、9月8日承認)、(文科省、10月11日承認)、その後も(東書)

1. 従軍慰安婦など

	原文	9月8日	10月11日
① 山川出版 「中学歴史 日本と世界」 p247	側注① 戦地に設けられた「慰安施設」には、 <u>朝鮮・中国・フィリピン</u> などから女性が集められた(いわゆる従軍慰安婦)	戦地に設けられた「慰安施設」には <u>日本・朝鮮・中国・フィリピン</u> などから女性が集められた <b>日本</b> を追加、「 <u>いわゆる従軍慰安婦</u> 」を削除	
② 山川「歴史	側注⑦ 各地の戦場では、慰安所が設けら	各地の戦場では、 <b>日本軍向け</b> 「慰安施設」が設けら	

総合 近代から現代 p149	れ、日本や朝鮮、台湾、占領地の女性が慰安婦として集められた。	れ、日本や朝鮮、台湾、占領地の女性が慰安婦として集められた。	
③ 実教出版「詳述歴史総合」 p185	日本人として戦争を担った朝鮮半島・台湾出身者への保障や未払い賃金の請求、いわゆる「従軍慰安婦」など、政府は解決済みとしているが、問題は多い。	下線部を「慰安婦」に訂正	
④ 清水書院「私たちの歴史総合」 p110	《資料：アジア女性基金の事業について》 「アジア女性基金は、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関して、道義的な責任を痛感した政府の決定に基づき…」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 (追加) ※従来は、政府の談話なども含めてこのように表現されることも多かったが、実態を反映していない用語であるとの意見もある。現在、日本政府は慰安婦という語を用いることが適切であるとしている	
⑤ 清水書院「私たちの歴史総合」 p111	《資料：政府間以外のおもな戦後補償》 「1992年 釜山従軍慰安婦・女子挺身隊公式謝罪請求事件」	本文「1992年 釜山従軍慰安婦・女子挺身隊公式謝罪等請求事件」と、「等」を加えて(追加)「※訴訟・事件の名称は当時の呼称や通称にもとづく。」	
⑥ 東京書籍「新選歴史総合」 p121	「各地に慰安所が置かれ、日本人や植民地および占領下の人々が慰安婦として従軍させられ、多くの女性の人権が踏みこじられた」	申請せず	申請せず その後訂正「慰安婦として戦地に送られ」
⑦ 東京書籍「詳解歴史総合」 p132	側注⑧「日本人や日本の植民地支配下、日本の占領下に置かれた多くの人々が慰安婦として従軍させられた」	申請せず	申請せず その後訂正(同上)

## 2. 強制連行など

	原文	9月8日	10月11日
⑧ 中学校・学び舎「ともに学ぶ人間の歴史」 p243	一方、日本にいた朝鮮人は、…つめかけました。植民地支配のため生活が苦しくなり、日本に渡ってきた人たちや、炭鉱などに強制連行されてきた人たちです。		「一方、日本にいた朝鮮人は、…。植民地支配のため生活が苦しくなり、日本に渡った人たちや、炭鉱などに送り込まれて働かされた人たちです。」 「強制連行」削除など
⑨ 実教出版「歴史総合」 p132	朝鮮(1943年)・台湾(1944年)に	朝鮮(1943年)…に徴兵制が施	

<p>史総合」 ⑩「詳述 歴史総合」もほぼ同じ</p>	<p>徴兵制が施行された。また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約 80 万人の朝鮮人を軍需工場や炭鉱などに強制的に連行して労働に従事させた。中国人も同様に強制連行された。</p>	<p>行された。また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徴用令などによって約 80 万人の朝鮮人を軍需工場や炭鉱などに動員してはたらかせた。中国人も強制連行された。</p>	<p>「動員」に</p>
<p>⑪ 清水書院「私たちの歴史総合」p 111</p>	<p>《資料：政府間以外のおもな戦後補償》 2003 年対不越強制連行労働者に対する未払賃金等請求二次訴訟</p>	<p>《資料の表に注釈を追加》 ※訴訟・事件の名称は当時の呼称や通称にもとづく。</p>	
<p>⑫ 東京書籍「新選 歴史総合」p 127</p>	<p>右上囲み また、約 70 万人が日本本土に連行され、労働力とされたほか、戦争末期には徴兵制も実施された。</p>	<p>「連行」→</p>	<p>強制的な動員をふくめて約 70 万人が日本本土に連れてこられ、労働力とされたほか、…された。</p>
<p>⑬ 東京書籍「詳解 歴史総合」p 141</p>	<p>また、約 70 万人が朝鮮総督府の行政機関や警察の圧迫などによって日本本土に強制連行され、過酷な環境での労働を強制された。</p>	<p>「強制連行」→</p>	<p>また、朝鮮総督府の行政機関や警察の圧迫などによって強制的に動員され、過酷な環境での労働を強制された人を含む約 70 万人が、日本本土に連れてこられた。</p>
<p>⑭ 第一学習社「高等学校 歴史総合」p 152</p>	<p>また、朝鮮から多くの人々が日本の炭鉱・鉱山や軍需工場に強制連行されたり、多くの女性が慰安婦として戦場に送られたりした。</p>		<p>(本文はそのまま) 強制連行① 側注① 2021 年 4 月、日本政府は、戦時中に朝鮮半島から労働者がきた経緯はさまざまであり「強制連行」とするのは不適切とする閣議決定をしたが、実質的に強制連行にあたる事例も多かったとする研究もある。</p>

「資料 2」 執筆者の思い (韓国の通信社のインタビューから、概要)

--執筆時に重視した点は。

▲歴史学の基本に忠実であること。最新の研究成果を踏まえること。世界の中の日本という視点を忘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日本の植民地に関することもきちんと書くこと。歴史を覚えるのではなく考える力をつけるようにすることなどだ。

--複数の出版社の中で〇〇の歴史総合が日本軍「慰安婦」問題などに関して、最も明確に記述していると評価されている。日本軍「慰安婦」や徴用などで、特に注目したり留意したりした点があれば紹介してほしい。

▲そもそも「日本人」は「日本人」だけで生きていけるわけではない。日本で生まれ育った人も世界の人々という

関わってきたから生きてこられたし、これからもそうだ。近代日本の戦争や植民地について、この程度の歴史認識がなければ、近隣隣国の人々と近現代の歴史について会話することは難しいだろう。

--日本の戦争に関する教育で重要な点は何か。

▲加害者だったから被害者になったという当然の因果関係をしっかり認識させることだ。

--戦争を起こした国家だから加害者であり、原爆投下のような残酷な経験をしたから被害者であり、この二つは原因と結果として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趣旨か。

▲もう少し広い意味だ。明治期を含め、十分に義も立たず力もないのに周辺地域に進出。侵略し、その結果周辺地域との関係をこじらせ（対中 21 カ条要求など）、さらには謀略による戦争（満州事変）を起こすなどやりたい放題やった結果として、動員・空襲・原爆その他悲惨な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日本軍「慰安婦」問題などに関して曖昧に書いた教科書について、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か。

▲歴史学者の端くれとして、そういう教科書を採択したい人がいなくなるよう努力したい。

--「従軍慰安婦」あるいは「強制連行」など表現が適切でないという日本政府の答弁書の決定をきっかけに、教科書出版社が次々と関連説明を修正する事態が起こった。教科書著作者、あるいは歴史学者としてどう思うか。

▲〇〇教科書も何らかの修正を免れなかったが、記述を工夫したり、教師用指導書で学界の通説を紹介したりするなど、影響が最小限にとどめるよう努めた。いろいろな議論があることを紹介するというならやむを得ないが、一律に変更させることは、歴史の実態をしっかりと認識させる上で大変問題であり、賛成できない。

#### 教科書会社の当事者の思い

Xさんは、今回の政府の介入について、次のように語った。

「歴史には、光の面と共に、陰の面もある。自国の『陰の歴史』を覆い隠す教育は、生徒の学習にとって、大きなマイナスだ。無知が、他国との誤解や対立を招きかねない。歴史の事実を、政治の力でねじ曲げるべきではない」（『教科書歴史記述への政府介入——史実わい曲の危うさ』月刊『社会民主』1月号）

#### 「資料3」

##### 教科書記述に対する日本政府の政治介入を憂慮する（声明）

日本政府は、2021年の高校地理歴史科・公民科の必修科目に続き、2022年には同選択科目の教科書検定結果の概要を公表しました。これらの教科書は、2022年から高校に新たに適用される学習指導要領に準拠したものです。

これらの教科書のあちこちから、よりよい教科書をつくるために執筆者や編集者が注いだ努力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ます。とりわけいくつかの教科書では、日本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について批判的に記述し、過去を反省する姿も示されています。このような努力は、平和と人権を重視する教科書をつくろうとするすべての人々にとって、よい参考になるでしょう。しかし一方で、これらの教科書には日本政府が積極的に介入した痕跡が随所に見られてもおり、執筆者や編集者の努力に水を差しています。

この背景には、日本政府が行った2014年1月の教科用図書検定基準と同年4月の教科用図書検定審査要項の改定があります。この2回の改定で最も重要な点は、日本政府の見解を教科書に反映させることでした。これに加えて、日本政府は2021年に閣議決定を通じて「従軍慰安婦」「強制連行」「連行」などの用語を使用できないようにしました。今回の教科書検定の過程で、政府はこれらの条項を根拠に、教科書の該当内容の修正を教科書発行

者に事実上強要しました。その結果、ほとんどの教科書発行者が政府の見解に従って内容を修正せざるをえませんでした。

1993年、日本政府は自らの調査結果に基づいて河野談話を発表し、日本軍と官憲が日本軍「慰安婦」の動員や慰安所の管理に関与したという事実を認めています。それ以降、日本の歴代首相は河野談話を継承すると述べてきました。

ところが安倍政権は、河野談話を継承るとしながらも、日本軍「慰安婦」の動員に軍と官憲が直接関与した強制連行はなかったと述べ、問題の本質を避けました。さらに昨年菅政権は、教科書から「従軍慰安婦」「強制連行」「連行」などの用語を削除させ、日本軍の関与を否定するに至っています。これは従前の政府見解を自ら否定するものにほかならず、日本や世界の学界による研究成果とも合致しないものです。朝鮮人労働者の「強制連行」「連行」を否定することも同様です。日本政府の主張は、植民地の状態そのものが強制的な状況であることを考慮しない帝国主義的な立場をいまだに放棄していないことを示すものです。このような介入は、1982年に日本政府自らが、教科書記述において「近隣諸国」の立場を考慮すると表明した国際的な約束を破棄するものでもあります。

日本の教科書における歴史記述、ひいては世界各国の教科書に、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が込められ、人権の大切さに気づかせる内容が盛り込まれることを願う私たち日中韓3国の市民は、教科書記述に対する日本政府の権力的な介入に深い憂慮を表明せざるをえません。また、そのような介入が、東アジアの平和と世界平和に深刻な脅威になっていると考えます。私たちはこのような憂慮を込めて、日本政府に対し、以下のとおり要求します。

1. 教科書に対する政治介入を直ちに中止せよ
2. 「従軍慰安婦」「強制連行」「連行」などの用語使用禁止を撤回せよ
3. 被害者の人権を大切に、アジアと世界の平和に向けた歴史教育を支援せよ
4. 政府間の歴史対話を再開するとともに、市民社会の歴史対話を積極的に支援せよ

2022年月日.

アジアの平和に向けた歴史教育を望む日中韓市民一同

呼びかけ団体 日本：子どもと教科書全国ネット21

韓国：アジアの平和と歴史教育連帯

賛同（個人、団体）

「日本史探究をめぐって」、その組み立て

第1学習社

本書の構成と利用方法

各章の構成と問い

**第1章 第4章**

■ 各章で扱う範囲を概観できます。

■ **本文ページ第1節** 各章の学習がはじまります。

■ **歴史的環境とその転換** おもに各章の第1節で学習する時期の歴史的環境を広い視点でとらえ、思いついた問いをメモしておきましょう。

■ **仮説を立てる** さまざまな資料に問いかけながら、各章で学習する時期の特徴は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自分なりの仮説を立ててみましょう。

■ **本文ページ第2節～第1節**、「歴史的環境とその転換」、「仮説を立てる」をふまえた自分の問い・仮説や、教科書の問いも意識しながら学習しましょう。

■ **学習のまとめと探究** 各章の学習をもとに、自分の考えを表現する「表現」「まとめ」、地域の資料を知り探究活動につなげる「探究」にチャレンジしてみましょう。

■ **第5章** 「日本史探究」の最後には、これまでに学習した歴史や、学習の方法をふまえて、現代の私たちにわかる課題について探究してみましょう。

本文ページの構成と問い

**節の問い**  
節全体を通して考えたい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

**冒頭の問い**  
テーマの学習にあたって注意したいことが冒頭に示されています。考える際に「歴史的な見方・考え方」も意識できるよう、マークをつけましょう。(→p.9)。

**資料の問い**  
資料を読み取って考えるきっかけやヒントになる問いが資料の近くに示されています。

**深める**  
さらに考えるきっかけになる問いの例が示されています。

**まとめの問い**  
テーマの学習後に整理して考えたい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

【凡例】

- 年代は西暦を主とし、日本の年号を( )内に入れた。ただし、同一ページにすでに出ている場合、日本には直接関係のない外国の事件の場合は、年号を省略した。また、改元のあった年は、その年のはじめから新しい年号とした。なお、明治5年以前は、西暦と年号の間には1ヵ月前後の差があるが、その対応は日本の年号にしたがった。
- 文字史料は学習上必要な部分を引用し、その前後の省略はとくに示さない形とした。また、読みやすく書き改めたところもある。
- 人物には適宜生没年を記した。天皇には在位期間を記した。

教科書紙面にアイコンをつけて、学習内容に関連する情報をウェブページ上に用意しました。

史料   動画   ウェブサイト

**二次元コード掲載**  
二次元コードをスマートフォンやタブレットのバーコードリーダーで読み取るか、以下のURLにアクセスして、内容を選択してください。

**URL掲載**

※インターネットの使用については先生の指示に従ってください。利用の際の通信料は、一般に利用者の負担となります。

節の問い

節全体を通して考えたい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

律令国家はどのように形成されていったのだろうか。

冒頭の問い

テーマの学習にあたって注意したいことが冒頭に示されています。考える際に「歴史的な見方・考え方」も意識できるよう、マークをつけました(→p.9)。

? 日本列島にどのように小国が出現し、まとまっていったのだろうか。 **④ 推移**

資料の問い

資料を読み取って考えるきっかけやヒントになる問いが資料の近くに示されています。

- ◆ ④ 当時の倭人は楽浪郡に何を求めたのだろうか。
- ◆ ⑤ なぜ奴隷を贈り物としたのだろうか。

まとめの問い

- ① 小国が出現した背景を考えてみよう。
- ② 列島の国々をおさめる王にとってもっとも重要なことは何だったのだろうか。

深める

中国は当時の倭をどのようにみていたのだろうか。

深める

さらに考えるきっかけになる問いの例が示されています。

まとめの問い


テーマの学習後に整理して考えたい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

歴史的な見方・考え方

- ① **時系列** 一つの歴史事象に対して、どの時期にどのような経緯でおきたのか、時間軸のなかでとらえてみる必要がある。年表を作成して、「時系列」を理解してみよう。
- ② **推移** 一つの歴史事象に対し、時代による変化=「推移」に注目する。前の時代とどのように変わったのか、あるいは変わらずに継続したのかなどに着目しよう。
- ③ **比較** 一つの歴史事象について考察する場合、他の事象と「比較」して、類似点・相違点をみつけることで、その歴史上の事象の特色を明確にすることができる。
- ④ **つながり** 歴史上の事象は互いに関連しあっている。その相互の関連・「つながり」に着目することで、その事象の背景や原因、結果や影響などを考えていくことが可能となる。
- ⑤ **現在** 過去の歴史事象のなかには、現在おきている事象や自分の生活と関連したりするものがある。「**現在とのつながり**」について考えてみることで、現在、そして未来の社会への理解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


### 探究の手順

あるテーマや課題について、さまざまな資料を使ってアプローチし、課題を解決していくのが歴史の探究である。



<b>1</b>	<b>テーマ・課題の設定</b>	テーマや課題は、自分の身近なところにあることが多い。毎日の学習や報道などから、「なぜ」「どうして」と思ったことをテーマにしよう。また、何かを調べていくなかで新たなテーマが見つかることもある。
<b>2</b>	<b>「問い」の設定</b>	<b>1</b> で設定したテーマを「問い」の形にしてみよう。その際、そのテーマを探究することが、自分自身や社会にとって、どのような意義をもつのかもあわせて考えることが重要である。
<b>3</b>	<b>「仮説」を立てる</b>	<b>2</b> で設定した「問い」について、どのような結論が導き出せそうか予想してみる。これが仮説である。仮説を立てると、テーマについてどのような観点から調査するかが明確となり、探究の方向性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b>4</b>	<b>情報や資料の収集・調査</b>	設定したテーマに関する情報や資料を集めてみる。その際、 <small>信頼性の高い情報</small> 確実な、 <small>信頼性の高い情報</small> 信憑性の高い情報を集めることに留意する。身近な学校や地域の図書館・博物館、インターネットなどを利用しよう。また、自身でテーマの関連地域を訪れたり、詳しく知っている方に聞き取り調査をしたりすることも大切である。
<b>5</b>	<b>整理・分析</b>	集めた情報や資料は、カードなどにまとめて整理し、分析してみる。同じ項目ごとにまとめたり、並べ替えたりしてどのようなことが読み取れるのか、考えを深めよう。その後、分析した結果をどのような形で表現すればわかりやすいか考えよう。 ▶年代順に整理する場合は年表形式。数値を表す場合はグラフで示すと視覚的にわかりやすい。内容や目的にあわせ、適切なグラフを使う。
<b>6</b>	<b>まとめ・表現</b>	<b>5</b> の成果やそこから生まれた自分の意見について表現・発表してみよう。自分たちの成果を説明し、聞き手に理解してもらうことをプレゼンテーションという。誰かに聞いてもらい、意見交換することで、改めて自身の考えを深めることもできる。そして発表後は、探究活動をふりかえってみよう。自分の立てた「仮説」は実際とあっていたのか検証し、そこから出た課題をふまえて、新たな探究テーマをみつけていこう。

! 探究を深めると、考えや疑問、課題が新たに更新されて、また探究がくりかえされていく。  
! 歴史資料の読みこみ方は、教科書にある問いや各章の「仮説を立てる」などで取り組んでみよう。



「時代を通観する問い」をめぐる

指摘事由

学習指導要領に示す内容の取扱いに照らして、扱いが不適切である。

(内容の取扱い(2) イ「アの理解に加え、……時代の特徴を考察するための時代を通観する問いが表現できるよう指導を工夫すること。)(86%に縮小) (修正文は 11 枚目に示す)




## 歴史的環境とその転換

人類が世界の各地へ拡散し、日本列島にたどりついた人々はどのような社会をつくり、周辺地域とどのようにかかわったのだろうか。







## 歴史的環境とその転換

人類が世界の各地へ拡散し、日本列島にたどりついた人々はどのような社会をつくり、周辺地域とどのようにかかわったのだろうか。歴史的環境に着目して、この時期のさまざまな変化をみてみよ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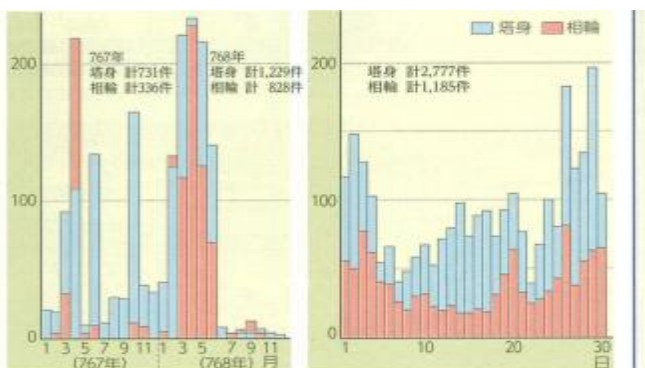
## 仮説をめぐって

### 指摘事由

学習指導要領に示す内容に照らして、扱いが不適切である。  
 (内容 A(2) 「(1)で表現した時代を通観する問いを踏まえ、……」)  
 (86%に縮小) (修正文は 13 枚目に示す)



▲【資料1】百万塔と陀羅尼 百万塔(下)は、764(天平宝字8)年、称徳天皇の命により、約5年間で100万基つくられた木製の三重小塔。塔内に世界最古の印刷物とされる陀羅尼(上)をおさめた。法隆寺には塔身部が4万5,755基、相輪部が2万6,054基残され、多くに製作者名や製作年月日などが墨書されている。  
 出典: Colbase



調べる 陀羅尼とはなんだろう？

**Step 1 読み取れること**

- ほぼ同じ大きさや形で100万基もつくられているとわかる。
- 【資料2】をみると、月ごとの生産は5月と7～9月が落ちこんでいる。
- 【資料3】をみると、月末頃に生産のピークがあり、さらに生産がゼロになる日はない。

**Step 2 考えられる仮説**

- 「一大事業として、百万塔の生産がすすめられたのではないか」
- 5月頃に田植え、夏は草取りなど農繁期と重なることから、「百万塔を製作する人々の多くが、農作業をするために休みを取ったのではないか」
- 「月あたりのノルマが課せられていて、締め切りが月末だったのではないか」
- 「百万塔を製作する工房は年中無休だったのではないか」

**着眼点** なぜこの8世紀の時期に百万塔が多くつくられたのだろうか？百万塔のもつ意味はどういうものなのだろうか？

**仮説** このページの資料を参考になると、原始・古代の特色についてどのようなことが言えるだろうか。これから原始・古代の学習をはじめ前に、キーワードごとに自分なりの仮説をまとめてみよう。

【生産】 \_\_\_\_\_  
\_\_\_\_\_  
\_\_\_\_\_

【対外】 \_\_\_\_\_  
\_\_\_\_\_  
\_\_\_\_\_

【社会】 \_\_\_\_\_  
\_\_\_\_\_  
\_\_\_\_\_

【くらし】 \_\_\_\_\_  
\_\_\_\_\_  
\_\_\_\_\_

修正後⇒

**仮説** このページの資料を参考になると、原始・古代の特色についてどのようなことが言えるだろうか。第2節以降の学習をはじめ前に、キーワードごとに自分なりの仮説をまとめてみよう。

【生産】 \_\_\_\_\_  
\_\_\_\_\_  
\_\_\_\_\_

【対外】 \_\_\_\_\_  
\_\_\_\_\_  
\_\_\_\_\_

【社会】 \_\_\_\_\_  
\_\_\_\_\_  
\_\_\_\_\_

【くらし】 \_\_\_\_\_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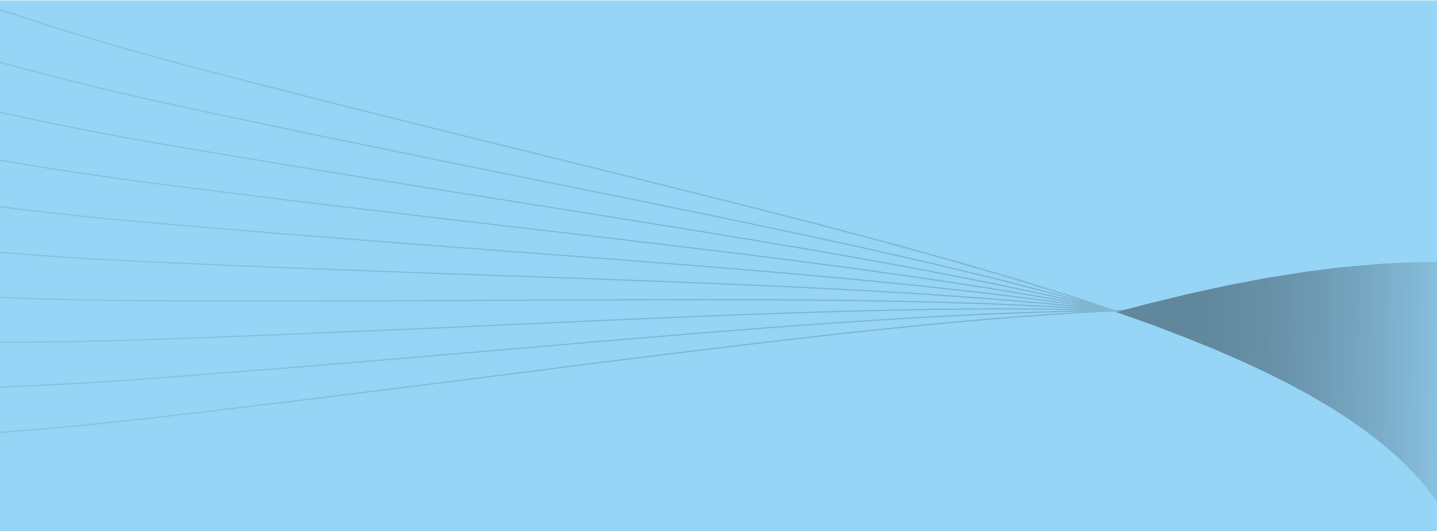
[ 발표 2 ]

---

# 2022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석

---

박한민,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 2022년 검정 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석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박한민 / 석주희

## 201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교과서	영토문제 관련 기준
지리총합 / 지리탐구	- 해양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이 하는 역할 - <b>竹島와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b> 라는 사실 -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를 것
역사총합 / 일본사탐구	- 국민국가 형성 학습에서 영토 확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 <b>북방영토와 동시에 竹島, 尖閣 열도 편입도</b> 언급할 것
정치·경제 / 공공	- 국가주권, 영토 관련 국제법의 의의, 국제기구의 역할 - <b>일본 고유 영토인 竹島와 북방영토</b> 에 남겨진 문제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노력 - 尖閣 열도에 대해 해결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역사총합 / 일본사탐구	- 메이지유신과 국민국가 형성 등의 학습에서 영토 확정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 이 때 북방영토를 언급함과 동시에 <b>竹島, 尖閣 열도 편입에 대해서도</b> 언급할 것
세계사탐구	(관련 내용 없음)

## 2022년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내 독도 기술

• 검정 통과한 20종 교과서 전부에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 기술

- ☞ 일본의 고유 영토
- ☞ 1905년 시마네 현 편입
- ☞ 한국의 불법 점거

• <학습지도요령> 미반영 서술은 문구 수정

< 지리총합·지리탐구 >

< 정치·경제 >

<공공>

## 지리총합·지리탐구 교과서의 독도 기술

- 전반적으로 독도 관련 서술의 증가 경향
- 한국 측의 '불법 점거' 강조
- 帝国書院(地理総合) : 검정 후 서술 수정

수정 전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 현에 편입하고, 자국 영토로 한다는 생각을 공식으로 드러냈다

수정 후 시마네 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1905년 메이지 정부가 竹島の 귀속을 내외에 선언하였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 현에 편입하였다

- 二宮書店(地理探究) : 독도 관련 서술과 사진, 연표의 가시적 배치

## 『高校生の地理総合』(帝国書院)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일본해에 있는 竹島는 1905년에 메이지 정부가 일본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竹島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양경비대를 둔다거나, 등대와 부두 등을 건설한다거나 하면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의 공동제소를 세 번이나 제안하였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일본해에 있는 竹島는 시마네현 오키의 시마초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1905년 메이지 정부가 竹島の 귀속을 내외에 선언하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 현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일방적으로 공해상으로 경계선을 긋고, 竹島를 불법으로 점거하였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의 공동제소를 때때로 제안해 왔지만, 한국은 해양경찰대를 주류시키는 등,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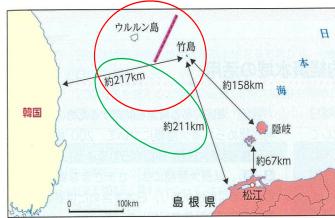
## 교과서별 독도 사진 삽입과 지도 표기

① 1951年に第二次世界大戦の連合国側と日本が結んだ条約のこと。この条約によって日本の主権の回復が認められ、竹島や尖閣諸島を含む日本の領土が定められた。



↑竹島(島根県、隠岐の島町) 本州から約211kmの距離にある。島の周辺は水産資源が豊富である。

『高校生の地理総合』(帝国書院)



↑竹島の位置 1905年1月28日、日本政府が竹島を日本領に編入する閣議決定を行った。これに基づいて、島根県知事が2月22日に竹島の帰属を告示した。帰属して100年後の2005年、島根県が条例で2月22日を「竹島の日」と制定した。

『詳説地理探究』(帝国書院)



↑竹島(左:男島, 右:女島)(島根県隠岐の島町, 2012年8月撮影) 隠岐諸島沖にある男島(西島)と女島(東島)の2島と周辺の島々の総称で、総面積約0.20km<sup>2</sup>。

『地理探究』(二宮書店)

## 『地理探究』(東京書籍)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일본은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그림1의 북방 영토 문제, 한국과의 사이에서 竹島를 둘러싼 문제가 있음과 더불어,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근린제국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p>	<p>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구나시리 섬, 에토로프 섬으로 된 북방영토는 홋카이도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점령하였고, 소련이 해체된 후에도 러시아가 오늘날까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해상의 竹島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기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p>

## 『地理探究』(二宮書店)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竹島는 오키 제도 서쪽에 있는 군도로, 우인도이지만 시마네현에 귀속된 일본의 영토이다. 그러나 1954년에는 한국이 잠거하여 독도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 후 1965년에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竹島の 영유권 문제는 보류하는 형태로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도 한국은 계속 점거하고 있으나,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 정부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p>	<p>竹島는 오키제도의 서쪽에 있으며, 시마네현에 소속된 무인 군도(無人群島)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사진 7). 17세기 초에 이미 일본인이 이용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영유권이 확립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도 약부의 해금정책에 따라 17세기말에 현재 한국이 영유하고 있는 울릉도로의 도항이 금지되었으나, 竹島로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1905년 시마네현 소관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과정 과정에서 竹島가 일본령임이 확인되었는데, 1954년까지 한국이 점거하였다(표 9). 그 후 1965년에는 竹島の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는 형태로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도 한국의 불법 점거는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정부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竹島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위임을 1954년 이래 세 차례 제안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이것을 거부하였다.</p>

연도	주요 동향
1905	메이지 정부가 시마네 현 편입을 각의 결정
1910	한일병합
195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1952	한국 측 '이승만 라인' 일방적 설정
1954	한국의 해양경찰대 상주 竹島 영유권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탁 제안(한국 거부)
1962	ICJ 위탁 제안(한국 거부)
1965	한일기본조약·한일어업협정(竹島 문제는 보류)
2005	시마네 현, '竹島の 날' 제정
2012	한국 이명박 대통령 상륙 ICJ 위탁 제안(한국 거부)

## 『詳説地理探究』(帝国書院)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竹島는 1905년에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하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그림 5).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표되기 직전인 1952년 1월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竹島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해양경찰대를 설치하거나, 등대와 부두 등을 건설하거나 하여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의 공동제소를 세 번이나 제안하였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p> <p>확인: 북방영토 문제와 竹島 그리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근린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자.</p>

## 정치·경제 교과서의 독도 기술

- 전반적으로 독도 관련 서술 증가
- 한국의 ‘불법 점거’ ↔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
- 배타적 경제수역(EEZ) 지도 안에 竹島 표시

출판사	서술 내용
東京書籍	‘이승만 라인’(1950년대), UN해양법(1996), 한일어업협정(1998)
実教出版	“도항과 어업·해양자원 개발 제한, 선박 나포 선원 억류” 17세기 중반 이후 영유권 확립 주장 추가
第一学習社	‘竹島 문제’ 항목 설정 ‘주류 점령’ → ‘불법 점거’

## 『政治・經濟』(東京書籍)

2016년 개정본	2022년 개정본
일본 교과의 영토에 대해서는 (중략) 1952년부터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竹島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항의를 계속함과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교과의 영토에 대해서는 (중략) 1952년 이후에 북방영토, 한국과의 사이에서 竹島를 둘러싼 문제가 있어(→현재) (중략) 竹島를 불법 점거한 한국은 영토문제에 큰 지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계속 항의하고 있다. 또한 영토의 영유권 지도의 영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쪽)
광의: 일본의 영토와 영토문제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
광의: 일본의 영토와 영토문제	竹島 문제
(사건) 竹島(동도) (입교 서도)	竹島는 1952년 뚝이치 정부가 일본영토로 선언한 지역영토를 사용, 시리아 한 교사에 대한 시리아 항의로 논의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한국이 영유를 주장하였고, 50년째는 ‘이승만 라인’을 살용하여 竹島(한국영 독도)를 주권의 영토 내로 포함시켰다. 그 후 계속 불법점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계속 항의하고 있다.
(지도) 일본의 영토와 영토문제 (109쪽)	1952년 뚝이치정부의 제정에 따라 ‘이승만 라인’은 소멸하는데, 竹島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중략) 1998년에는 UN 해양법 조약 비준에 따라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竹島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국이 강력하게 항의하였는데, 1998년 말 한일어업협정으로 영토에 대한 거쟁점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2005년 시리아 한 외교가 竹島의 ‘남’ 조의를 요청하자, 한국에서의 항의가 제기되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 (201쪽)

# 『詳述政治・経済』 / 『最新政治・経済』 (実教出版)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일본의 영토문제                      미묘한 분쟁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영토, 한국과 독도에 대한 영토문제를 안고 있다. (중략) 영토문제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나라 교과의 영토주의는, 신적의 불법징계에 대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한국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p> <p>&lt;지도&gt;일본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                      일본은 한국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한 후, 1905년 파리강화조약 시대에 한해 인정했다. (109쪽)</p>	<p>일본의 영토문제                      (중략) 이러한 조약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영토, 한국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나라 교과의 영토주의는, 신적의 불법징계에 대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한국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p> <p>&lt;지도&gt;일본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                      일본은 한국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한 후, 1905년 파리강화조약 시대에 한해 인정했다. (109쪽)</p>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일본의 국민총생산은 57.6만달러, 세계 제1위이지만, 2005년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를 합산 면적은 447만제곱미터이다. 이 넓은 영토는 세계 제6위 넓이(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약 2배)를 차지하고 있다. (70쪽)</p> <p>&lt;지도&gt;일본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 (70쪽)</p>	<p>일본의 국민총생산은 57.6만달러, 세계 제1위이지만, 2005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를 합산 면적은 447만제곱미터이다. 이 넓은 영토는 세계 제6위 넓이(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약 2배)를 차지하고 있다. (70쪽)</p> <p>&lt;지도&gt;일본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 (70쪽)</p>

# 『高等学校 政治・経済』(清水書院)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현재, 일본외교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竹島,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략) 또 시마네 현에 속하는 竹島(한국명으로 독도)는,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p> <p>&lt;지도&gt;일본의 200해리선 (77쪽)</p>	<p>지도3.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p> <p>시마네 현에 속하는 竹島는 <b>일본 고유의 영토로 메이치기에 국경을 획정하였는데, 1950년대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영토문제가 되었다.</b>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위임을 제안하여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b>한국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b> (203쪽)</p>

## 『政治・經濟』(数研出版)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그 외에도 한국이 竹島(시마네 현)의 영유를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 영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일본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 대만 당국이 센카쿠 제도(오키나와 현)의 영유를 주장하는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101쪽)</p> <p>보충: 일본 고유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                  竹島는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하는 고시를 시행하였는데, 한국은 1952년 竹島를 포함한 해역에 어업 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오늘날까지 竹島 점거를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문제 위탁도 거부하고 있다.</p> <p>&lt;지도&gt; 일본 고유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 (102쪽)</p>	<p>지도: 일본의 영해(해상보안청 자료 등에 의함)</p> <p>(전략) 이외에도 한국이 竹島(시마네 현)의 영유를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 영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평화적인 해결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와 타이완 당국이 센카쿠 제도(오키나와 현)의 영유를 주장한다는 문제도 일고되고 있다.</p> <p>일본 고유의 영토를 둘러싼 <b>정세</b>                  (전략) 竹島는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현으로 편입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한국은 1952년에 竹島를 포함한 해역에 어업 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오늘날까지 竹島를 계속 점거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제 위탁도 거부하고 있다. (후략) (226쪽)</p>

## 『高等学校 政治・經濟』(第一學習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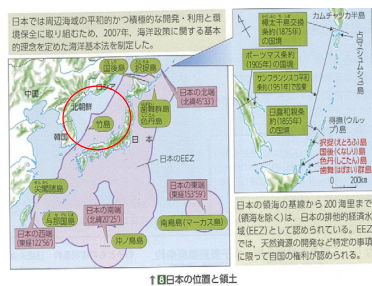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p> <p>또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竹島の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 근대 이전부터 일본만이 어로 목적으로 도항해 왔던 竹島는 일본 정부가 1905년에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상으로 일본령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한국이 竹島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점령하고 있다. 竹島の 영유권 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한국이 수차례 제안하였지만 한국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110~111쪽)</p>	<p>지도8. 일본의 위치와 영토</p> <p>일본 고유의 영토에 대해서는 긴시야와와 사이에 북방영토 문제, 한국과의 사이에 竹島 문제가 있다. 또한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의심을 받지 않는다.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영토의 보전과 다른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립을 바라며서 외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60쪽)</p> <p>일본의 영토와 영유를 둘러싼 <b>정세</b>                  ① 竹島 문제                  근대 이전부터 일본만이 어로 목적으로 도항해 온 竹島는 일본정부가 1905년에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상으로 일본령임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한국이 竹島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竹島の 영유권 해결을 위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할 것을 한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하였다.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외교에 한해 일관대담정인(1998년 회의)에서는 竹島 주변 등의 수역을 공동수역으로 삼아 일한 양국이 공동으로 자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181쪽)</p>



『政治・経済』(東京書籍)

『高等学校 政治・経済』(清水書院)

『政治・経済』(数研出版)



『詳述政治・経済』・『最新政治・経済』(実教出版)

『高等学校 政治・経済』(第一学習社)

## 『新版 公共』의 독도 기술

- 17세기 중반부터 영유권 확립 주장
- 1904~1905년 오키 도민의 청원 → 각의 결정으로 시마네 현 편입
- ‘고유 영토’ 토론거리 : 국가별 영토분쟁 사례, 해결 방안 제시

## 『新版 公共』(数研出版)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竹島는 시마네 현 오키 제도의 북서 157km 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섬과 수십 개의 암초로 되어 있고, 총면적은 0.23㎢이다. 일본 정부는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竹島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p> <p>1904년 竹島 주변에서 감치잡이를 하고 있던 오키 도인이 일본정부에 竹島의 영토권 입과 암차 청원을 하였다. 그 다음 과정에서 정부는 이듬해인 1905년에 이 섬을 '오키도사(隱岐島)의 소관'(현재의 시마네 현)으로 하고, 또한 '竹島'라고 명명하는 각의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일본의 竹島 영유권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竹島에 관하여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해결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186쪽)</p>

## 『新版 公共』(数研出版)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Thinking Time 18</p> <p>북방영토와 竹島는 현재 러시아와 한국이 첨가하고 있는데, 일본은 각각을 '고유영토'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p> <p>일본이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서 러시아와 한국은 북방영토와 竹島를 계속 첨가하고 있습니까?</p> <p>그렇다면 일본이 북방영토와 竹島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조사해 봅시다.</p> <p>(중략)</p> <p>竹島 문제의 경우, 1998년 체결된 <u>신일관 어업협정</u>에서는 <u>竹島의 영유권을 보장하며</u> <u>배타적 경제수역 외에 공동으로 관리, 이용</u>하는 장정수역을 설정했습니다.</p> <p>그러나 竹島 문제는 특히 한국으로서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내셔널리즘 해결의 어려움이 한 방편에 있습니다.</p>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p>사례1. 북방영토(일본 주장)</p> <p>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영토부터 북방 네 개 섬의 존재를 알고, 1855년 일러 워싱턴조약에서는 헤트루프 섬과 우르프 섬 사이의 국경을 확인했다. 그 이후로도 북방 네 개 섬은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p> <p>사례2. 竹島(일본 주장)</p> <p>일본의 竹島에 관한 영유권은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확립해 있었다. 그 후 1905년 1월 각의결정에 따라 竹島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1905년 이전에 한국이 竹島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여하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중략) (188쪽)</p> <p>북방영토 문제와 竹島 문제에 대해서는 지회를 같은 세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중략)</p> <p>Discuss 이야기해 봅시다</p> <p>1. 북방영토와 竹島에 관한 일본의 '고유영토'란 주장에 대하여 러시아나 한국의 주장과 각각 비교하고, 어떻게 해서 해결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189쪽)</p>

<세계사탐구>

<일본사탐구>

기타: <지리부도>

## <세계사탐구>의 독도 기술

- 7종 중 2종(야마카와 출판사 A, B)에서 '1905년 편입' 기술
- <세계사 탐구>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관련 기술 없음

## <세계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山川出版社  
詳說世界史

1905년에는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 주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竹島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272쪽)

山川出版社  
高校世界史

竹島는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 주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1905(메이지38)년에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211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 7종 중 7종 전부 '1905년 시마네 현 독도 편입' 기술
- 그 중 2종은 아래와 같이 기술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 주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야마카와)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을 논거로” (짓쿄)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연표> 메이지 시대의 외교와 국경 확정

...

1879 오키나와 현을 설치 ⑧

1895 尖閣諸島를 편입 ⑨

1905 竹島를 편입 ⑩ (212쪽)

東京書籍  
日本史探究

또 그 때, 일본 열도 주변의 섬들도 영토로 편입되었다. ④ (212쪽)

주④ 동중국해의 尖閣諸島는 1895년에 오키나와 현으로, 일본해의 竹島는 1905년에 시마네 현으로, 각각 편입하는 것으로 각의 결정되었다 (212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東京書籍  
日本史探究



메이지 시대의 외교와 국경의 확정 (212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実教出版  
日本史探究



동중국해의 尖閣諸島는 1895년 1월 일본의 영토(오키나와현)로 편입이 각의결정되었다. 일본해의 竹島는 1905년에 일본령으로 하는 각의결정이 이루어졌다. (157쪽)

메이지초기의 국경획정(157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実教出版  
日本史探究

제1차 일한협약을 체결하고 일본정부 추천의 외교·재정 고문을 한국 정부에 채용토록 했다.⑤

주⑤ 가쓰라(桂) 내각은 러일전쟁 중인 1905년 1월,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을 논거로 竹島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는 취지의 각의결정을 시행하였다. (263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実教出版  
日本史探究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後の日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후의 일본(330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清水書院  
日本史探究



국경 획정과 千島·樺太의 교환(165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소속이 없었던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근대적으로 배타적인 영토를 획정했다.⑦

清水書院  
日本史探究

주⑦ 이후 1895년에는 尖閣諸島, 1905년에는 竹島를 각각 각의 결정에 의해 일본령으로 편입하였다. (165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清水書院  
日本史探究



▲4 平和条約の規定による日本の領土 戦前から鹿児島県に属していた奄美諸島も北緯30度以南の諸島の一部としてアメリカ軍政下におかれたが、1953年12月25日、沖縄に先立ち日本に返還された。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후의 일본 (247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山川出版社  
日本史探究  
詳説日本史

이리하여 남북 양 방면에 걸쳐 일본의 영토가 국제적으로  
확정되었다.①

주①尖閣諸島는 1895(메이지28)년 1월, 竹島는 1905  
(메이지38)년 1월에 각각 타국이 점령한 형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246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山川出版社  
日本史探究  
詳説日本史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規定による日本の領土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336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山川出版社  
日本史探究  
高校日本史

각주⑧ 尖閣諸島는 1895(메이지28)년 1월,  
竹島는 1905(메이지38)년 1월에 각각  
타국이 점령한 형적이 없는 것을 확인  
한 다음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 (185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山川出版社  
日本史探究  
高校日本史



⑧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規定による日本の領土 領土はほぼ日清戦争以前の段階までもどされた。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  
영토는 거의 청일전쟁 단계까지 되돌아왔다(257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第一学習社  
高等学校  
日本史探究

1870년대 남북 양 방면에 걸쳐서 일본의 영토가 국제적으로 확정되었다. 1905년 일본정부는 竹島の 시마네 현으로 편입을 각의 결정했다. 尖閣諸島는 1895년에 일본령(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되었다. 전후 미국의 시정 하에 놓였지만 오키나와 반환(→268쪽)에 따라 일본으로 복귀했다. (183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第一学習社  
高等学校  
日本史探究



▲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よる日本の領域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역(259쪽)

## <지리부도>의 독도 기술

- <역사지리부도>(니노미야서점)는 독도 전경 사진을 게재하고 竹島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함
- 2021년도에는 사진과 설명이 없었음. 올해 추가된 사항임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二宮書院  
コンパクト地理  
総合地図



일본 열도 북부(93쪽)

# <일본사탐구>의 독도 기술

출판사

2022년 검정본

二宮書院  
コンパクト地理  
総合地図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것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 尖閣諸島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고유의 영토로 유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수상관저 홈페이지 외) (94쪽)

센카쿠 제도·竹島

## 2016년도 2022년도 비교

### 1.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세계사 탐구』> 독도 등 영토문제

□ 분량 및 내용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분량변화	내용 변화 및 특징
	103-110 야마카와출판사 (山川出版社) 상설세계사	비교대상 없음	○ 竹島는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 주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1905년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기술
-	103-111 야마카와출판사 (山川出版社) 고교세계사	비교대상 없음	○ 竹島는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 주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1905년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기술
총 평	○ 세계사 과목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관련 기술이 없음에도 야마카와 출판사 2종에서 독도 기술		

# 2016년도 2022년도 비교

## 2.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일본사 탐구』> 독도 등 영토문제

2016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분량변화	내용 변화 및 특징
도쿄서적 신선일본사B	도쿄서적 일본사탐구	변화없음	◦ 내용 동일
짓교출판 고교일본사B	짓교출판 일본사탐구	변화없음	◦ 내용 동일
시미즈서원 고등학교 일본사B	시미즈서원 고등학교 일본사탐구	변화없음	◦ 내용 동일
아마카와 출판사 상설일본사 개정판(2016)	아마카와 출판사 상설일본사	변화없음	◦ 내용 동일
아마카와 출판사 고교일본사B	아마카와 출판사 상설일본사	변화없음	◦ 내용 동일
아마카와 출판사 현대일본사	아마카와 출판사 고교일본사	큰 변화없음	◦ 영토는 거의 일정. 전쟁 이전의 단계까지 되 돌아왔다는 기술 추가.
-	다이이치출판 일본사탐구	비교대상 없음	◦ 竹島 시마네현 편입에 관한 내용 기술
총 평	◦ 2016 검정본과 비교하여 대부분 내용은 동일하며 큰 변화가 없음. ◦ 지도 및 관련한 설명은 제외하거나 축소된 것 없이 동일함		

# 2021년도 2022년도 비교

## 3.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지도』> 독도 등 영토문제

2021년도 검정본	2022년 검정본	분량변화	내용 변화 및 특징
신 콤팩트 지도장	103-114 니노미야서원 (二宮書院) 콤팩트지리 종합지도	사진 및 설명 추가	◦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것에 일본 정부는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 추가 ◦ 출처로 수상관저 기술 추가
총 평	◦ 2021년도 검정본과 비교하여 독도 사진과 설명 추가 ◦ 설명 아래 출처로 수상관저 홈페이지를 표기한 것은 주의 깊게 보아야 함.		

[ 발표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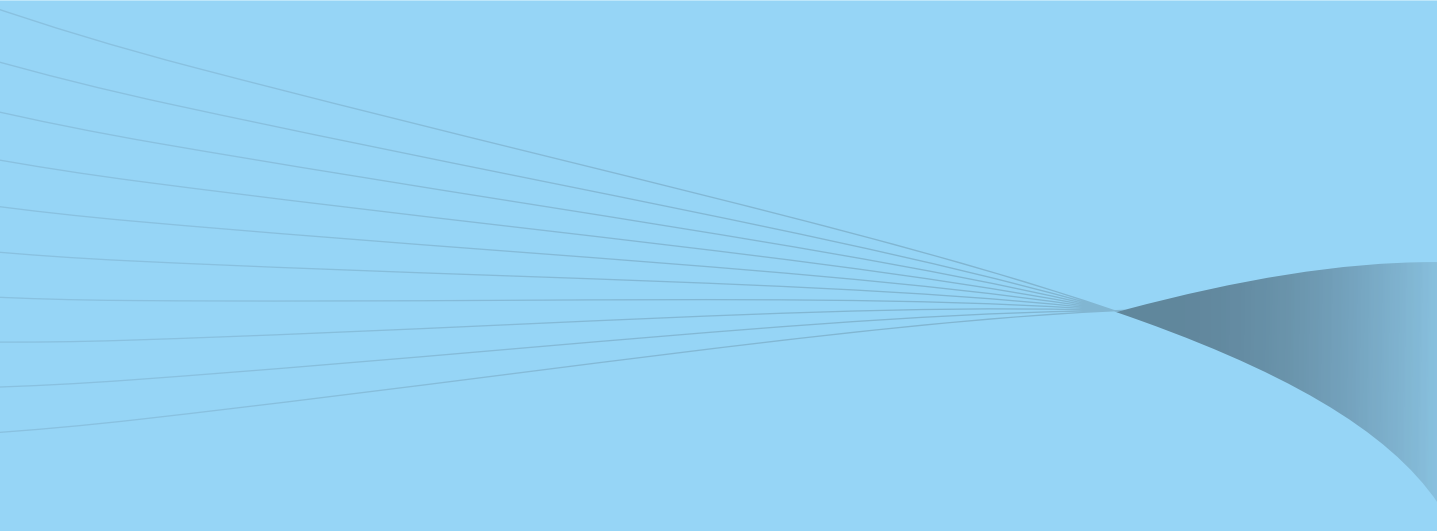
---

#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

---

와타나베 미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

와타나베 미나(渡辺美奈,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

### 머리말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의한 가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는 언제나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유달리 일본군 '위안부' 제도 관련 기술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1997년에 발간된 중학교 역사 분야의 7사 교과서 모두에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실리자 역사수정주의자와 그에 동참하는 국회의원이 삭제·수정해야 한다며 공격을 펼쳐왔다.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은 2005년 개관 초기부터 의무교육의 최종 과정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위안부' 기술의 변천을 상설전에 가까운 형태로 전시해왔다. 이를 통해 역사수정주의자의 공격에 검정 때마다 '위안부' 기술이 실린 교과서가 갈수록 감소하는 현실을 전해왔다. 다른 한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일정 기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중군위안부' 또는 '이른바 중군위안부'가 아닌 짧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결정(이하 “2021년 각의결정”)을 내렸다. 더 나아가 5월에는 문부과학성이 중학교교 사회계열 교과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정정 신청 방법에 관한 '임시설명회'를 여는 등, 고교 교과서에도 압박을 가한 것이 판명되었다. 그에 고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조사해 이듬해인 2022년 1월부터 시작된 제 18회 특별전에서 고교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1. 조사 대상 기간과 방법

조사 대상 기간은 1991년 김학순의 공개 증언 후인 1993년의 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근 30년에 걸친다. 우선 사회과 계열 교과인 '일본사 A' '일본사 B' '세계사 A' '세계사 B' '지리 A' '지리 B'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를 조사했고, 이에 더해 2018년의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2022년 이후의 신 과정 과목인 '역사종합'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지리종합' '지리탐구' '공공' '윤리' '정치경제'도 조사했다.

조사에는 '교과서도서관'(도쿄도 고토구)에 소장된 교과서를 주로 이용했다. 우선 한 명의 조사자가 대상 기간에 발간된 교과서에 '위안부' '중군위안부' '위안소' '위안시설'과 같은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2021년에 3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그 후 첫 번째 조사에서 기재가 확인되지 않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조사자가 재확인하는 작업을 2021~2022년에 거쳤다. 여러 곳의 교과서 발행 회사가 교과서 검정 사이클에 맞춰 발간해온 교과서의 총수는 비록 도중에 교과서 발행을 중단한 회사도 꽤 있었으나 총 500권 이상에 달했다.

### 2. 본 보고의 내용과 목적

본 발표문에서는 wam 이 실시한 고등학교 사회과 계열 교과서에서 나타난 ‘위안부’ 관련 기술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역사 교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과 계열 교과서 전체를 조사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역사뿐만 아니라 지리나 공민 과목에서도 ‘위안부’ 관련 기술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오늘날의 과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 년에 걸친 고교 사회과 계열 교과서의 기술 양상은 시기, 출판사나 각 교과서의 집필자에 따라 달랐고, 책 제목이 같은 교과서에서도 검정 때마다 변화가 발견되었다. 그 밖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채택하는 탓에 전국적인 채택율도 통계를 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광범위한 분석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더욱이 추측이나 예단을 배제하는 의미에서도 본 발표에서는 기술 유무와 약간의 고찰에 그치겠다. 2021 년 각의결정의 영향으로 정정 신청 후 기재가 후퇴한 곳도 있는 한편 아이디어를 구사한 곳도 있었다. 그래서 변경 전·변경 후를 덧붙였다.

이 조사 결과는 wam 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학생을 비롯한 교원, 연구자, 연구기관 분들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 3. 구 과정에 나타난 ‘위안부’ 기술

구 과정(1989 년의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고시 이후)에서 사회과 계열 교과는 ‘지리역사’였고 그 안에 세계사 A, 세계사 B, 일본사 A, 일본사 B, 지리 A, 지리 B 라는 과목이 있었다. 이 중 세계사는 필수였고 일본사 A, 일본사 B, 지리 A, 지리 B 에서 필수로 1 과목을 선택해야 했다. 교과 ‘공민’은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라는 과목으로 구성되었고 필수로 현대사회를 이수하거나 다른 2 과목을 이수해야 했다. 이하에서는 그들 교과서가 ‘위안부’ 기술을 어느 정도 실었는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겠다. 아울러 2021 년 각의결정의 영향으로 사용하던 교과서 중 정정 신청을 한 것은 해당 내용을 게재했다. 또 교과서 발행 출판사의 경우 중간에 교과서 출판을 중단한 곳까지 포함해 조사 기간 중 해당 과목을 한 번이라도 발행한 적 있는 출판사를 기재했다.

#### 【일본사】

조사 대상 기간 중 ‘일본사 A’는 기리하라서점(桐原書店), 산세이도(三省堂), 짓쿄출판(実教出版), 시미즈서원(清水書院), 다이이치학습사(第一學習社), 도쿄서적(東京書籍),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 총 7 곳의 출판사가 발행했고 모든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존재했다. ‘일본사 B’는 상기 7 사에 더해 고쿠쇼간행회(国書刊行会), 자유서방(自由書房), 데이코쿠서원(帝國書院), 메이세이샤(明成社)가 발행했으며 거의 모든 교과서가 관련 기술을 실었다. 그러나 역사수정주의적 교과서로 알려진 고쿠쇼간행회, 후의 메이세이샤의 교과서에서는 기술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야마카와출판사는 1993 년 검정 당시부터 ‘위안시설’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고 나아가 야마카와출판사의 일본사 B 인 『고교 일본사』에서는 2003 년 이후로는 기술이 사라졌다.<sup>1</sup>

<sup>1</sup> 덧붙이면 산세이도의 교과서 『상해(詳解) 일본사』(‘일본사 B’)에는 1989 년 시점에 “약 20 만 명의 여성이 정신대로 모집되었고 또 많은 여성이 중군위안부로 동원되었다”라는 기술이 존재했다.

‘위안부’ 관련 기술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틀 속에서 기술된 것, 전후 보상문제의 일환으로 기술된 것, 그 양쪽에서 기술된 것 등이 있었다. 본문에는 몇 줄로 기술하고 칼럼에서 분량을 늘려 사례 등을 소개하거나 사진을 싣고 그 캡션에 넣는 등 여러 기재 방법을 고안하고 있었다. 약 30 년 동안 글자수도 많고 칼럼 등으로 내실 있는 보충 설명을 덧붙인 곳은 짓교출판이었다. 한편 고교에서는 일본사 B에서 60%을 넘는 채택률을 보인 야마카와출판사의 교과서는 수 줄 정도의 기술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2021 년 각의결정 후 정정 신청이 있는 교과서는 아래와 같다.

<정정 전>	→	<정정 후>	2021.9.8 승인
『일본사 A 개정판』(야마카와출판사) p166 측주①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이른바 <u>중군위안부</u> ).	→	전지에 설치된 <u>일본군용 ‘위안시설’</u> 에는 <u>일본·조선·중국·필리핀</u>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어 <u>위안부로서 일하게 되었다</u> .	
『신 일본사 개정판』(야마카와출판사) p325 본문			
<u>조선인 여성 등</u> 중에는 <u>중군위안부</u> 가 되기를 강요된 자도 있었다.	→	<u>일본·조선·중국 등의 여성</u> 중에는 위안부가 되기를 강요된 자도 있었다.	
『상설(詳説) 일본사 개정판』(야마카와출판사) p365 측주②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이른바 <u>중군위안부</u> ).	→	전지에 설치된 <u>일본군용 ‘위안시설’</u> 에는 <u>일본·조선·중국·필리핀</u>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어 <u>위안부로서 일하게 되었다</u> .	
『고교 일본사 B 신정판』(짓교출판) p247 도판 캡션			
도쿄지방재판소 입구에서 목도하는 전 ‘ <u>중군위안부</u> ’ 1991 년	→	도쿄지방재판소 입구에서 목도하는 전 ‘위안부’ 1991 년	

**【세계사】**

조사 대상 기간 중 ‘세계사 A’는 기리하라서점, 산세이도, 짓교출판, 시미즈서원, 다이이치 학습사, 데이코쿠서원, 도쿄서적, 히토쓰바시출판(一橋出版), 야마카와출판사 총 9 곳이, ‘세계사 B’는 상기 기리하라서점을 제외한 8 곳이 발행했다. 이 중 시미즈서원과 야마카와출판사는 세계사 AB 모두 ‘위안부’ 관련 기술이 단 한 줄도 없었다. 한편 나머지 출판사는 20 년에 걸쳐 거의 대부분이 일정한 기술을 실었고 전쟁 중 일어난 사실로 기술한 것, 전후 보상문제의 일환으로 기술한 것 등 다양했다.

**【지리】**

조사 대상 기간 중 ‘지리 A’는 교이쿠출판(教育出版), 시미즈서원, 다이이치 학습사, 데이코쿠서원, 도쿄서적, 니노미야서점(二宮書店), 야마카와출판사 총 7 곳이 발행했고, ‘지리 B’는 위 출판사들에 더해 산세이도, 짓교출판 총 9 사가 퍼냈다. 이 중 교이쿠출판이 ‘지리 A’에서 1993 년 검정부터 2006 년 검정까지 꾸준히 ‘위안부’ 관련 기술을 게재(‘지리 B’에서는 2006 년에 삭제)했다. 나머지 출판사 중에는 데이코쿠서원이 1993 년과 1997 년 검정 ‘지리 B’에, 야마카와출판사가 1998 년 검정 ‘지리 A’에, 시미즈서원이 2003 년 검정 ‘지리 A’에 본문이나 주를 이용해 기술했다.

**【현대사회】**

조사 대상 기간 중 ‘현대사회’는 가쿠슈연구사(学習研究社), 교이쿠출판, 기리하라서점, 산세이도, 짓쿄출판, 시미즈서원, 스켄출판(数研出版), 다이이치학습사, 데이코쿠서원, 도쿄학습사(東京学習社), 도쿄서적, 히토쓰바시출판, 야마카와출판사 총 13 곳이 발행했다. 이 중 ‘위안부’ 관련 기술을 단 한 번도 게재하지 않은 곳은 야마카와출판사와 도쿄서적이다. 산세이도나 짓쿄출판은 전 세계적인 시야 속에 ‘위안부’ 문제를 포섭하고 있으며 또 다이이치학습사도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윤리】**

조사 대상 기간 중 ‘윤리’ 교과서는 기리하라서점, 교이쿠출판, 산세이도, 짓쿄출판, 시미즈서원, 스켄출판, 다이이치학습사, 주쿄출판(中教出版), 도쿄학습사, 도쿄서적, 니혼서적(日本書籍), 히토쓰바시출판, 야마카와출판사 총 13 사가 출판했다. 그 중 ‘위안부’ 관련 기술이 발견되는 곳은 기리하라서점, 교이쿠출판, 짓쿄출판, 시미즈서원, 히토쓰바시출판, 야마카와출판사 총 6 사다. 비록 야마카와출판사의 기술이 짧기는 하나 발간된 교과서 6 권 모두에서 ‘위안부’에 대해 꾸준히 기술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 히토쓰바시출판은 본문, 칼럼이나 주를 이용해 풍부한 내용을 담았으며 일본군 ‘위안부’를 지금의 문제, 전 세계적인 과제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아울러 2021년 각의결정 후에 정정 신청이 있는 교과서는 아래와 같다.

<정정 전>	→	<정정 후>	2021.9.8 승인
『현대의 윤리 개정판』(야마카와출판사) p114 본문		2016년 검정	
또 <u>주로</u>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의 <u>젊은</u> 여성을 <u>중군위안부</u> 로서 전장의 위안소로 보냈다.	→	또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 여성을 위안부로서 전장의 위안소로 보냈다.	

**【정치·경제】**

조사 대상 기간 중 ‘정치·경제’는 가쿠슈연구사, 교이쿠출판, 기리하라서점, 산세이도, 짓쿄출판, 시미즈서원, 지유서방, 스켄출판, 다이이치학습사, 도쿄학습사, 도쿄서적, 히토쓰바시출판, 야마카와출판사 총 13 곳이 발간했다. 이 기간 발간된 교과서의 70% 이상에서 일정 기술이 발견된다. 일본이 안고 있는 전후보상 문제로 기재한 곳이 많았고 다이이치학습사와 스켄출판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기술이 없는 곳은 가쿠슈연구사(1993년 검정만 발행), 지유서방(1994년 검정만 발행, 후에 기리하라서점에 판권을 양도), 산세이도였다.

아울러 2021년 각의결정 후에 정정 신청이 있는 교과서는 아래와 같다.

<정정 전>	→	<정정 후>	2021.10.11 승인
『고등학교 개정판 정치·경제』(다이이치학습사) p110 측주 1		2016년 검정	
또 <u>이른바</u>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1993년 공식 사죄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 지원과 ‘쓰구나이킨(償い金)’의 지급과 의료복지	→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1993년 공식 사죄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 지원과 ‘쓰구나이킨(償い金)’의 지급이나 의료복지지원사업에 협력	

지원사업에 협력했다. 2015년에는 일한 양 정부가 전 위안부 지원을 위한 사업에 협력해 시행한다고 표명했다.	했다. 2015년에는 일한 양 정부가 전 위안부 지원을 위한 사업에 협력해 시행한다고 표명했다.
『고등학교 현대 정치·경제 신정판』(시미즈서원) p114 측주 1 2017년 검정	
일본군에 징용되어 전범이 된 사람들과 <u>중군위안부</u> . 강제 연행으로 일본으로 와 피해를 입은 피폭자 등이 정부에 공식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군에 징용되어 전범이 된 사람들과 <u>위안부였던 사람들</u> , 노동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징용되어 일본으로 와 피해를 입은 피폭자 등이 정부에 공식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4. 신 과정에 나타난 ‘위안부’ 기술

2022년 4월 입학하는 1학년부터는 ‘지리역사’의 필수 과목으로 ‘역사종합’ ‘지리종합’을, 선택 과목으로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지리탐구’ 중 1 과목을 학습하게 되었다. 역사종합은 근현대 이후라고는 하나 일본사와 세계사를 합쳐 2 단위로 학습하는 것이다. ‘공민’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공공’이 신설되었고, ‘윤리’ ‘정치·경제’는 선택과목이 되었다.

##### 【역사종합】

‘역사종합’은 종래와 달리 ‘역사의 문’, ‘근대와 우리들’, ‘국제질서의 변화나 대중화와 우리들’, ‘글로벌화와 우리들’과 같은 4 개의 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주제’와 ‘물음’을 중심으로 한 학습이 중학교 시절에 배운 역사 교육의 기초 위에 어디까지 전개 가능한가를 묻는 과목이기도 하다.

2021년 3월 검정을 통과한 ‘역사종합’ 교과서는 7사 12 권이다. 이 중 ‘위안부’ 관련 기술이 담긴 것은 9 권이다(표 5-1). 2021년 각의결정에 따라 10월에 정정 신청을 했다고 보도된 교과서는 4 권이었으나 그 후 도교서적과 짓교출판이 발행 전에 정정하고 있다(표 5-2). ‘위안부’ 문제에서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다이이치학습사의 2 권(표 5-3)이다.

표 5-1 역사종합(2022년 4월부터 사용)

출판사	서명	‘위안부’	채택률
야마카와출판사	역사종합 근대에서 현대로(歴史総合 近代から現代へ)	있음	21.2%
데이코쿠서원	명해(明解) 역사종합	없음	14.8%
야마카와출판사	현대의 역사종합 보기·해석하기·생각하기(現代の歴史総合みる・読みとく・考える)	있음	13.9%
도교서적	신선(新選) 역사종합	있음	11.9%
짓교출판	상술(詳述) 역사종합	있음	11.7%
야마카와출판사	우리들의 역사 일본에서 세계로(わたしたちの歴史 日本から世界へ)	없음	6.6%
짓교출판	역사종합	있음	6.5%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역사종합	있음	5%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신 역사종합 과거와의 대화, 이어지는 미래(過去との対話, つなぐ未来)	있음	3.6%
도쿄서적	상해(詳解) 역사종합	있음	2.7%
시미즈서원	우리들의 역사종합(私たちの歴史総合)	있음	1.6%
메이세이샤	우리들의 역사종합(私たちの歴史総合)	없음	0.5%

표 5-2 역사종합에 나타난 ‘위안부’ 관련 기술(‘위안부’ 부분에 정정 있음)

\* 밑줄 부분이 정정 또는 추가 부분

<정정 전> → <정정 후> 2021.10.11 승인	
『역사종합 근대에서 현대로』 야마카와출판사 p149 측주⑦	
각지의 전장에서는 위안소가 설치되어 일본이나 조선, 타이완, 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 모집되었다. 강요 또는 속아 끌려온 예도 있다.	→ 각지의 전장에서는 일본군용 ‘위안시설’이 설치되어 일본이나 조선, 타이완, 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 모집되었다. 강요 또는 속아 끌려온 예도 있다.
『현대의 역사종합 보기·해석하기·생각하기』 야마카와출판사 p134 본문	
일본군은 전지에 병사의 위안시설을 설치하고 조선·타이완이나 중국·동남아시아의 점령지에서도 여성을 모집해 일을 시켰다.	→ 일본군은 전지에 병사의 위안시설을 설치하고 <u>일본 본토나</u> 조선·타이완, 중국·동남아시아의 점령지에서도 여성을 모집해 일을 시켰다.
『우리들의 역사종합』 시미즈서원 p110, p111	
<p>【자료 6】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 전 위안부 분들에게 국민적인 쓰구나이(償い)의 심정을 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5 년 7 월에 발족했습니다. ……</p> <p>네덜란드에서는 위안소 또는 동등한 장소에서 성적 봉사를 강요당한 분들에게 의료·복지 분야의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p> <p>인도네시아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고령자사회복지추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2001 년)</p>	<p>【자료 6】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 전 위안부 분들에게 국민적인 쓰구나이(償い)의 심정을 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5 년 7 월에 발족했습니다. ……</p> <p>네덜란드에서는 위안소 또는 동등한 장소에서 성적 봉사를 강요당한 분들에게 의료·복지 분야의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p> <p>인도네시아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고령자사회복지추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2001 년)</p> <p>※종래는 정부의 담화 등도 포함해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용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p>
<p>【자료 7】 정부간 이외의 주요 전후보상 1992 년 부산종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 사죄 청구 사건 1 심 일부 인용, 2003 년 최고재판소 기각</p>	→ <p>【자료 7】 정부간 이외의 주요 전후보상 1992 년 부산종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사건</p> <p>※소송·사건의 명칭은 당시의 호칭이나 통칭에 따른다.</p>
『상술 역사종합』 깃코출판 p185 본문	
일본인으로서 전쟁을 수행한 한반도·타이완 출신자에 대한 보상이나 미불 임금의 청구, 이른바 ‘종군위안부’ 등, 정부는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문제는 많다.	→ 일본인으로서 전쟁을 수행한 한반도·타이완 출신자에 대한 보상이나 미불 임금의 청구, ‘위안부’ 등, 정부는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문제는 많다.
<정정 전> → <정정 후> 정정일 미확인	
『상해 역사종합』 도쿄서적 p132, p181, 색인	

<p>전시 하에서는 위안소가 각지에 설치되어 많은 여성의 인권이 짓밟혔다.</p> <p>【주 3】 일본인이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 일본의 점령 하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위안부로서 <u>강제로 종군했다.</u></p> <p>【칼럼 전후보상】 …… 또 위안부에게도 아시아 여성기금이 민간기관으로서 부분적으로 보상했고 2015 년에도 일한 간에 이 문제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으나 수년 후에 좌절되었다.</p>	→	<p>전시 하에서는 위안소가 각지에 설치되어 많은 여성의 인권이 짓밟혔다.</p> <p>【주 3】 일본인이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 일본의 점령 하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위안부로 <u>군과 함께 행동하게 되었다.</u></p> <p>【칼럼 전후보상】 …… 또 위안부에게도 아시아여성기금이 민간기관으로서 부분적으로 보상했고 2015 년에도 일한 간에 이 문제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으나 수년 후에 좌절되었다.</p>
『신선 역사종합』 도쿄서적 p121, p161, 색인		
<p>각지에 <u>위안소가 설치되어</u> 일본인이나 식민지 및 점령 하의 사람들이 위안부로서 <u>강제로 종군해</u> 많은 여성의 인권이 짓밟혔다.</p> <p>【칼럼 전후보상】 위안부에게도 민간기관인 아시아여성기금이 부분적으로 보상을 시행했다.</p>	→	<p>각지의 위안소에서는 <u>일본인이나 식민지 및 점령 하의 사람들이 위안부로서 군과 함께 행동하게 되어</u> 많은 여성의 인권이 짓밟혔다.</p> <p>【칼럼 전후보상】 위안부에게도 민간기관인 아시아여성기금이 부분적으로 보상을 시행했다.</p>
『역사종합』 짓료출판 p137, 색인 없음		
<p>【오키나와와 전쟁】 또 오키나와전에는 <u>약 1~2 만</u> 명의 조선인 군부가 동원되었고 <u>130</u> 곳의 군 위안소에서는 <u>최소 160</u> 명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알려진다.</p>		<p>또 오키나와전에는 <u>수천</u> 명의 조선인 군부가 동원되었고 <u>약 140</u> 곳의 군 위안소에서는 <u>최소 150</u> 명이 넘는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알려진다.</p>

표 5-3 역사종합에 나타난 '위안부' 관련 기술('위안부' 부분에 정정 없음)

출판사	서명	'위안부' 기술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역사종합	p152, 색인 없음 또 조선에서 많은 사람이 일본의 탄광·광산이나 군수공장으로 강제 연행되거나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로 보내지기도 했다.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신 역사종합 역사와의 대화, 이어지는 미래	p146, 색인 없음 그리고 조선에서 많은 사람이 일본의 탄광·광산이나 군수공장으로 강제 연행되거나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로 보내지기도 했다.

\* 위 다이이치학습사의 교과서는 '강제연행'에 대해 정정 신청을 했다.

【일본사탐구】

'일본사탐구'를 발간한 이하의 5 사의 7 권 중 6 권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실려 있었다. 특히 짓료출판은 여러 부분에서 다루는 동시에 자료도 함께 게재해 기술하고 있다.

이하의 표에서는 검정 신청 당시의 백표지본(白表紙本)에서 기술이 바뀐 부분은 [ ] 안에 백표지본의 기술을 넣었다.

출판사	서명	'위안부' 기술
도쿄서적	일본사탐구	p266 주 색인 있음 ⑩점령지나 식민지의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 전지로 보내진 자도 적지 않았다.
짓료출판	일본사탐구	p317 본문 <문화 통제>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국 전선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집필한 이 시카와 다쓰조의 「살아 있는 병대」는 위안소(주 8) 안의 병대 묘사

		<p>등을 복자(覆字) 처리했으나, 군에 비판적이라며 발행금지처분을 받았다.</p> <p>주 8 일본군의 관여 아래 설치·통제되어 전역의 확대와 함께 확산했다. 일본인 외에 식민지·점령지 여성이 위안부로 장병의 성 상대를 강요당했다.</p> <p>p329 &lt;역사자료로 생각하기&gt; ② 황민화정책과 전시하 동원 해설 또 일중전쟁 발발 이후 <u>일본군의 관여 아래 설치·통제된 위안소에서</u> [백표지본: 일본군이 관리하는 위안소가 전지에 설치되어] 다수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를 강요당했다.</p> <p>p361 &lt;냉전 종결과 민주화의 진전&gt; 냉전 종식 후에는 지금까지의 정치 체제·국제 관계 속에서 억압되어 온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u>더한층 높아져 1991(헤이세이 3)년에는 전 위안부인</u>[백표지본: 더한층 퍼져 나갔다. 1991(헤이세이 3)년 3 월에는 전시 중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희생된] 한국인 여성이 직접 피해를 공개 증언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를 실시해 <u>1993 년에 정부는 위안소의 설치·관리, 위안부의 이송에 대한 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여를 인정하고</u>[백표지본: 1993 년에는 정부로서 위안부 제도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생존 중인 각국의 전 위안부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는 동시에 역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 계속 기억해 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노관방장관담화). 이후 민간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어 피해자에 대한 쓰구나이(償い)가 시도되었다.</p> <p>p361 주 ③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쓰구나이킨(償い金)의 수취를 둘러싸고 각국 또는 일본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일본과 한국 간에는 2015 년에 정부 간에 최종 해결로 하는 대응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p> <p>p373 테마별 색인 여성사-근대-전시 체제 하의 여성(대일본부인회, 여자정신대, 창씨개명, 위안부)</p>
<p>깃교출판</p>	<p>정선(精選) 일본사탐구 현재로 잇다 미래를 그린다 (今につながる 未来をえがく)</p>	<p>p195 본문 <u>또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어 군도 관여한 위안소에서 일하게 되었다</u>[백표지본: 또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p> <p>p197 주 ③…… 오키나와전에서는 군 노동자와 ‘위안부’로 동원된 많은 조선인도 목숨을 잃었다.</p> <p>p219 칼럼 역사인식문제 ……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가 진전되어 냉전체제가 붕괴한 1990 년대에 들어 ‘위안부’가 된 여성이나 강제로 동원되어 <u>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사람들</u>[백표지본: 전 ‘일본군위안부’나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전후보상문제).</p>
<p>시미즈서원</p>	<p>고등학교 일본사탐구</p>	<p>p235 더 알아 보자 일본사⑩ …… 또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는 병사를 보충하기 위해 지원병제도가 징병제도로 전환되었고 노동자의 강제동원과 위안부 조달도 이루어졌다.</p>
<p>야마카와출판사</p>	<p>상설 일본사</p>	<p>p322 주</p>

		①…… 또 전지에 설치된 일본군용 '위안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 등지에서 여성이 모집되어 '위안부'로 일하게 되었다. 강요 또는 속아 끌려온 예도 있다.
야마카와출판사	고교 일본사	없음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일본사탐구	p241 본문 또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로 보내졌다.

**【세계사탐구】**

'세계사탐구' 교과서를 발간한 이하의 5 사의 7 권 중 '위안부' 관련 기술을 실은 곳은 2 사뿐이었다. 야마카와출판사는 '세계사 A' '세계사 B' 모두에 기술을 실지 않았다. 또 도쿄서적과 다이이치학습사는 구 과정에서는 기술을 실었으나 이번에는 기술이 사라졌다.

출판사	서명	'위안부' 기술
도쿄서적	세계사탐구	없음
짓쿄출판	세계사탐구	338 쪽, 본문, 색인 없음 또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 전지로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
데이코쿠서원	신상(新詳) 세계사탐구	300 쪽 주 3 【일본에 대한 보상 요구】 일본 정부는 전후 배상·보상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 등으로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병사·노동력 징발 등의 피해에 대한 개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일련의 재판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위안부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야마카와출판사	상설 세계사	없음
야마카와출판사	고교 세계사	없음
야마카와출판사	신(新) 세계사	없음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세계사탐구	없음

**【지리종합】 【지리탐구】**

필수과목인 '지리종합' 교과서는 2021 년, 2022 년 검정에서 도쿄서적, 짓쿄출판, 데이코쿠서원, 니노미야서점, 다이이치학습사 총 5 사가 7 권을 발간했으나 모두 '위안부' 관련 기술을 실지 않았다. 또 선택과목인 '지리탐구'는 도쿄서적, 데이코쿠서원, 니노미야서점 총 3 사가 3 권을 출판했으나 여기에도 기재는 없었다.

**【공공】**

필수과목인 '공공' 교과서는 2021 년, 2022 년 검정에서 도쿄서적, 교이쿠도서(教育圖書), 짓쿄출판, 시미즈서원, 데이코쿠서원, 스켄출판, 다이이치학습사, 도쿄법령(東京法令) 8 곳이 13 권을 출판했다. 그러나 '위안부' 관련 기술을 실은 곳은 시미즈서원뿐이었다. 이전 '현대사회'에서 대체로 많은 교과서가 일정한 기술을 실은 것과 비교해 큰 퇴보이다.

출판사	서명	'위안부' 기술
시미즈서원	우리들의 공공	p87, 본문, 주, 색인 없음

(私たちの公共)	<p>……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 환경의 개선도 일본 외교의 중요 과제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위안부 문제·징용공 문제 등의 역사인식문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강화라는 경제 문제,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협력 체제 하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파기 등을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하고 있습니다.</p> <p>p87 주</p> <p>④일한 간의 전후보상문제 2015년 12월 일본과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	---

**【윤리】**

선택과목이 된 ‘윤리’ ‘정치·경제’에서는 ‘윤리’를 출판하는 도교서적, 짓교출판, 시미즈서원, 스킨출판, 다이이치학습사 5사 5권 어디서도 기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리’에서는 야마카와출판사가 꾸준히 기술을 실었으나 이번에는 출판하지 않았다.

**【정치경제】**

‘정치경제’ 교과서를 출간한 이하의 5사 6권 중 4권에 관련 기술이 실렸다. 전체적으로 2015년의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로 해결된 듯한 인상을 주는 기술이 많은 가운데 도교서적의 기재 분량이 두드러진다.

출판사	서명	‘위안부’ 기술
도교서적	정치·경제	<p>p200-201 본문</p> <p>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확히 해 왔으나, 이 문제는 수습되지 않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처럼 여전히 근린국들의 국민들이 사죄가 미흡하다며 비난하거나 전 ‘징용공’ 문제처럼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보상을 요구하고도 있다.</p> <p>p200 주</p> <p>① ‘위안부 문제’</p> <p>1995년에 민간에서 자금을 모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 위안부에 대한 쓰구나이(償い) 사업이 실시되었다(2007년 해산). 또 2015년의 일한외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데에 합의했으나, 한국의 정권 교체 후 그 재단은 정식 해산했다.</p> <p>p200 박스</p> <p>②고노담화(1993년, 발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p> <p>본건(위안부 문제)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p> <p>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갈 것이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러</p>

		한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담화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되고 있다. 2021 년에 '중군위안부'가 아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내려졌다.
깃코출판	상술(詳述) 정치·경제	p198 본문 그리고 1990 년대에 들어서는 전 위안부와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자에 대한 전후 보상이 주목을 모으면서 전쟁 책임·전후 책임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p199 주 ②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 년의 일한외상회담에서 전 위안부의 지원 사업을 위한 재단에 자금을 거출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 확인되었다.
깃코출판	최신 정치·경제	없음
시미즈서원	고등학교 정치·경제	p202, 주 ③일한청구권협정 일본 정부는 이 협정으로 개인이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권도 포괄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전 위안부가 인도적 견지에서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문제에 대해서는 2015 년의 일한외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함으로써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다.
스켄출판	정치·경제	없음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정치·경제	p191 박스 전후보상문제 이른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는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1993 년에 공식 사죄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을 지원하고 '쓰구나이킨(償い金)' 지급과 의료복지지원사업에 협력했다. 2015 년에는 일한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향해 합의하고 양국 정부가 전 위안부 지원을 위한 사업에 협력할 것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 후 한국 측에서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협력 관계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 도교서적의 밑줄 부분은 백표지본과 비교해 추가된 부분.

### 맺음말

본 조사에서는 구 과정의 고교 사회과 계열 교과서에서는 역사계열과 상관없이 다수의 교과서 발행 회사가 아이디어를 구사해 '위안부' 관련 기술을 게재해온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다. 이에 더해 신 과정에서는 지리, 공공, 윤리 등에서 기술이 사라진 상황도 확인했다.

구 과정에서도 출판사와 교과서에 따라 기재 내용이나 분량에 차이가 있었으나 신 과정에서는 '액티브 러닝(능동적 학습)'이 지향되는 상황에서 주제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는 지 여부로 큰 차이가 생기리라 본다. 현재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는 교원 부족과 초과 노동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세계와 일본의 근현대사를 다루는 '역사종합'의 활용 여부는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여건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

wam 의 제 18 회 전시에서는 출판사별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변천을 시각화하는 등

시에 교과서가 어떻게 정치적 의도 속에서 제도화되어 왔는지를 연표로 제시했다. 한편 wam의 관람객의 감상문에서는 교과서에 고작 몇 줄 밖에 기술되지 않은 일본군 성노예제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관심이 탐지된다. 한국, 북한, 재일,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일본 여성들의 구체적인 피해 실상과 전후의 고통, 가해 병사의 증언과 역사학이 규명해낸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악을 엿볼 수 있다. 전시 성폭력 특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와 가해에 초점을 맞춘 뮤지엄으로서 의구심을 품은 학생이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시를 통해 사회적 실천을 수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 연구 소재를 제공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색인에 ‘위안부’와 같은 용어를 게재하지 않은 곳도 많고 대체로 아시아태평양전쟁기와 그 전후를 범위로 잡아 조사한 탓에 조사 결과가 불완전하고 놓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웹사이트 공개 후 미비점이 있다면 모쪼록 지적해 주시기를 바란다.

## 高等学校教科書に見られる日本軍「慰安婦」関連記述について

渡辺美奈（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 はじめに

歴史教科書で日本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での加害をどのように記述するかについては、常に論争となってきた。なかでも、日本軍「慰安婦」制度にかかわる記述は関心が高く、とりわけ、中学校の歴史分野の教科書で、1997年に発行された7社すべてに「慰安婦」の記述があったことから、それを削除・書き換えをさせるべく、歴史修正主義者とそれらに連なる国会議員は攻撃を展開してきた。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は、2005年の開館当初から、義務教育の最終課程である中学校の歴史教科書における「慰安婦」記述の変遷について、常設展に近い形で展示してきた。展示では、歴史修正主義者の攻撃によって、検定ごとに「慰安婦」記述のある教科書が減っていく現状を伝えてきたが、その一方で、高校の歴史教科書には一定の記述がされ続けている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た。しかし2021年4月、日本政府は、「『従軍慰安婦』又は『いわゆる従軍慰安婦』ではなく、単に「慰安婦」という用語が用いることが適切である」と閣議決定し（以下、2021年閣議決定）、5月には文科省が中学高校の社会系教科書を発行する出版社に訂正申請の方法について「臨時説明会」を開くなど、高校の教科書にも圧力をかけ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そこで、高校の教科書での日本軍「慰安婦」関連記述について調査し、翌2022年1月からスタートした第18回特別展で高校の教科書での「慰安婦」関連記述に焦点を当てることにした。

### 1. 調査対象期間と方法

調査対象期間は、1991年の金学順さんの名乗り出以降の1993年検定以降現在までの30年近くにわたる。社会科系の教科である「日本史A」「日本史B」「世界史A」「世界史B」「地理A」「地理B」「現代社会」「倫理」「政治・経済」、そして、2018年の学習指導要領の改訂を受けて、2022年以降の新課程の科目となる「歴史総合」「日本史探究」「世界史探究」「地理総合」「地理探究」「公共」「倫理」「政治経済」についても調査した。

調査は「教科書研究センター附属教科書図書館」（東京都江東区）に所蔵されている教科書を主に用いた。対象期間に発行された教科書に「慰安婦」「従軍慰安婦」「慰安所」「慰安施設」といった「慰安婦」関連記述があ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作業を、まずは一人の調査者が2021年に3カ月わたって行った。その後、1回目の調査で記載が確認できなかった教科書を中心に、複数の調査者で再度確認する作業を2021～2022年にかけて実施した。複数の教科書発行会社が、教科書検定サイクルに合わせて発行してきた教科書点数は、途中で教科書発行を取りやめた社も多数あるものの、のべ500冊以上となる。

## 2. 本報告の内容と目的

本報告は、wam が実施した高等学校の社会科学系教科書における「慰安婦」関連記述の調査結果を報告するものである。歴史の教科に限ることなく、社会科学系の教科書をすべて調査することにしたため、結果として、歴史のみならず、地理や公民の科目にも「慰安婦」に関する記述が多数確認され、それらは現在の課題として日本軍「慰安婦」問題を理解するために大事な役割を担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30年にわたる高校の社会科学系教科書における記述は、時期、出版社や各教科書の執筆者によって違いがあり、同じ書名の教科書でも検定ごとに変化がみられるほか、高校は学校ごとの採択のため、全国的な採択率の統計については調べられていない。網羅的に分析するにはさらなる調査が必要であり、推測や予断を避けるためにも、ここでは記述の有無と若干の考察にとどめたい。2021年閣議決定を受けた訂正申請後の記載については、後退しているものもあるが、工夫を凝らしたものもあるので、変更前・変更後を付記した。

この調査の結果は、wamのウェブサイトで公開する予定であり、生徒、学生をはじめ、教員、研究者に活用していただくことを期待している。

## 3. 旧課程における「慰安婦」記述

旧課程（1989年の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告示以降）では、社会科学系の科目は「地理歴史」として、世界史A、世界史B、日本史A、日本史B、地理A、地理Bが存在し、世界史は必修で、日本史A、日本史B、地理A、地理Bから1科目が必修とされた。「公民」については、現代社会、倫理、政治・経済から、現代社会あるいは他の2科目が必修であった。以下は、これらの教科書で「慰安婦」記述がどのくらいあったかを概略的に示すものである。なお、2021年閣議決定を受けて、教科書に訂正申請があったものについては、その内容を示した。なお、教科書を発行してきた出版社については、途中で取りやめた社も含め、調査期間中にその科目を一度でも発行したことがある出版社を記載している。

### 【日本史】

調査対象期間中、「日本史A」は、桐原書店、三省堂、実教出版、清水書院、第一学習社、東京書籍、山川出版社の7社が発行しており、すべての教科書に「慰安婦」関連記述が存在した。

「日本史B」は上記7社に加え、国書刊行会、自由書房、帝国書院、明成社が発行しており、ほとんどの教科書に関連記述があるものの、歴史修正主義的な教科書として知られる国書刊行会および後の明成社には記述がなく、また、山川出版社は、1993年検定当時から「慰安施設」というあいまいな表現を用い、さらに同社の日本史B「高校日本史」では2003年以降は記述が

なくなっている。<sup>1</sup>

「慰安婦」関連記述は、アジア太平洋戦争の枠組みで記述されるもの、戦後の補償問題の一環として記述されるもの、その双方で記述される場合などがある。本文中には数行で記載しつつ、コラムで分量を増やして事例等を紹介する、写真を掲載してそのキャプションに入れるものなど記載方法には工夫がみられる。30年あまりにわたって、字数も多く、コラムなどでの補足説明も充実しているのは実教出版である。一方、高校では日本史 B で採択率が 60% を超えるという採択率の山川出版社の教科書は数行程度の記述である。

なお、2021 年閣議決定後に訂正申請があった教科書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訂正前>	→	<訂正後>	2021.9.8 承認
『日本史 A 改訂版』(山川出版社) p166 側注①			
戦地に設置された「慰安施設」には、朝鮮・中国・フィリピンなどから女性が集められた (いわゆる従軍慰安婦)。	→	戦地に設置された日本軍向け「慰安施設」には、日本・朝鮮・中国・フィリピンなどから女性が集められ、慰安婦として働かされた。	
『新日本史 改訂版』(山川出版社) p325 本文			
朝鮮人女性などの中には従軍慰安婦になることを強要されたものもあった。	→	日本・朝鮮・中国などの女性の中には慰安婦になることを強要されたものもあった。	
『詳説日本史 改訂版』(山川出版社) p365 側注②			
戦地に設置された「慰安施設」には、朝鮮・中国・フィリピンなどから女性が集められた (いわゆる従軍慰安婦)。	→	戦地に設置された日本軍向け「慰安施設」には、日本・朝鮮・中国・フィリピンなどから女性が集められ、慰安婦として働かされた。	
『高校日本史 B 新訂版』(実教出版) p247 図版キャプション			
東京地方裁判所の入口で黙禱する元「従軍慰安婦」1991 年	→	東京地方裁判所の入口で黙禱する元「慰安婦」1991 年	

### 【世界史】

調査対象期間中、「世界史 A」は、桐原書店、三省堂、実教出版、清水書院、第一学習社、帝国書院、東京書籍、一橋出版、山川出版社の 9 社が、「世界史 B」は上記桐原書店以外の 8 社が発行している。このうち、清水書院と山川出版社は、世界史 AB とも、一度も「慰安婦」について記述がなかった。その一方で、それ以外の出版社は 20 年にわたり、多くがなんらかの記述がなされており、戦争中の事実として書かれるもの、戦後の補償問題の一環として書かれているものなど、多様である。

### 【地理】

調査対象期間中、「地理 A」は教育出版、清水書院、第一学習社、帝国書院、東京書籍、二宮書店、山川出版社の 7 社が発行し、「地理 B」は上記に加え、三省堂、実教出版の 9 社が発行した。そのうち、教育出版が「地理 A」では 1993 年検定から 2006 年検定まで、「慰安婦」に関する記述を継続して掲載(「地理 B」では、2006 年に削除)。他には、帝国書院が 1993 年と 1997

<sup>1</sup> なお、三省堂の『詳説日本史』(「日本史 B」)の教科書では、1989年の時点で「約 20 万人の女性が挺身隊に集められ、また多くの女性が従軍慰安婦にかりだされた」との記述があった。

年検定の「地理 B」で、山川出版社が1998年検定の「地理 A」で、清水書院が2003年検定の「地理 A」で、本文や注で記述している。

【現代社会】

調査対象期間中、「現代社会」は学習研究社、教育出版、桐原書店、三省堂、実教出版、清水書院、数研出版、第一学習社、帝国書院、東京学習社、東京書籍、一橋出版、山川出版社の13社が発行してきた。このなかで、一度も「慰安婦」関連の記述がなかったのは、山川出版社と東京書籍である。三省堂や実教出版は、世界的な視野で「慰安婦」問題を位置づけており、また第一学習社も多くの分量を割いて記載している。

【倫理】

調査対象期間中、「倫理」の教科書は、桐原書店、教育出版、三省堂、実教出版、清水書院、数研出版、第一学習社、中教出版、東京学習社、東京書籍、日本書籍、一橋出版、山川出版社の13社が発行してきた。そのなかで「慰安婦」関連の記述があるのは、桐原書店、教育出版、実教出版、清水書院、一橋出版、山川出版社、の6社である。山川出版社は短い記述ではあるものの、発行した6冊すべての教科書で、「慰安婦」について継続して記述してきたことは特筆に値する。また、一橋出版は、本文とコラムや注によって豊富な内容となっており、日本軍「慰安婦」を現在の問題、世界的な課題として学べる記述となっている。

なお、2021年閣議決定後に訂正申請があった教科書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訂正前>	→	<訂正後>	2021.9.8 承認
『現代の倫理 改訂版』(山川出版社) p114 本文			2016年検定
また、おもに当時植民地であった朝鮮や台湾の若い女性を従軍慰安婦として、戦場の慰安所に送り込んだ。	→	また、当時植民地であった朝鮮や台湾の女性を慰安婦として、戦場の慰安所に送り込んだ。	

【政治・経済】

調査対象期間中、「政治・経済」は学習研究社、教育出版、桐原書店、三省堂、実教出版、清水書院、自由書房、数研出版、第一学習社、東京学習社、東京書籍、一橋出版、山川出版社の13社が発行してきた。この間発行された教科書の7割以上になんらかの記述がある。位置づけとしては日本がかかえる戦後補償の問題として記載しているものが多く、第一学習社や数研出版はかなり分量を割いて継続して記載していた。記述がないのは、学習研究社(1993年検定のみ発行)、自由書房(1994年検定のみ発行、後に桐原書店)、三省堂である。

なお、2021年閣議決定後に訂正申請があった教科書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訂正前>	→	<訂正後>	2021.10.11 承認
『高等学校 改訂版 政治・経済』(第一学習社) p110 側注1			2016年検定
また、いわゆる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日本政府は1993年公式に謝罪し、アジア女性基金の設立の支援と、「償い金」の支給や医療福祉支援事業	→	また、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日本政府は1993年公式に謝罪し、アジア女性基金の設立の支援と、「償い金」の支給や医療福祉支援事業に協力した。2015	

<p>に協力した。2015年には、日韓両政府が元慰安婦支援のための事業を協力して行うことが表明された。</p>	<p>年には、日韓両政府が元慰安婦支援のための事業を協力して行うことが表明された。</p>
<p>『高等学校 現代政治・経済 新訂版』(清水書院) p114 側注1 2017年検定</p>	
<p>日本軍に徴用され戦犯となった人々や、<u>従軍慰安婦</u>、強制連行で日本にきて被害にあった被爆者などから、政府は公式謝罪と補償を求められている。</p>	<p>日本軍に徴用され戦犯となった人々や、<u>慰安婦</u>であった人々、労働不足を補うために徴用されて日本にきて被害にあった被爆者などから、政府は公式謝罪と補償を求められている。</p>

#### 4. 新課程における「慰安婦」記述

2022年4月に入学する1年生から、「地理歴史」の必修科目が「歴史総合」「地理総合」、選択科目が「日本史探究」「世界史探究」「地理探究」から1科目となる。歴史総合は、近現代以降とはいえ日本史と世界史を合わせて2単位で学ぶものである。「公民」は必修科目が「公共」となり、「倫理」「政治・経済」が選択科目となる。

##### 【歴史総合】

「歴史総合」は従来と異なり、「歴史の扉」、「近代化と私たち」、「国際秩序の変化や大衆化と私たち」、「グローバル化と私たち」といった4つ大きな項目で構成されており、「主題」や「問い」を中心に構成する学習の展開が、中学での歴史教育をふまえてどこまで可能なかわ問われている科目でもある。

2021年3月検定の「歴史総合」の教科書は8社が12冊を発行しているが、そのうち「慰安婦」関連記述があるのは9冊である(表5-1)。2021年閣議決定を受けて、10月に訂正申請がなされたと報道された教科書は4冊だったが、その後、東京書籍も実教出版も発行までに訂正がなされていた(表5-2)。「慰安婦」問題で訂正申請がなかったのは第一学習社の2冊(表5-3)である。

表5-1 歴史総合(2022年4月から使用)

出版社	書名	「慰安婦」記述	採択率
山川出版社	歴史総合 近代から現代へ	有	21.2%
帝国書院	明解 歴史総合	なし	14.8%
山川出版社	現代の歴史総合 みる・読みとく・考える	有	13.9%
東京書籍	新選歴史総合	有	11.9%
実教出版	詳述歴史総合	有	11.7%
山川出版社	わたしたちの歴史 日本から世界へ	なし	6.6%
実教出版	歴史総合	有	6.5%
第一学習社	高等学校 歴史総合	有	5%
第一学習社	高等学校 新歴史総合 過去との対話、つなぐ未来	有	3.6%
東京書籍	詳解歴史総合	有	2.7%
清水書院	私たちの歴史総合	有	1.6%
明成社	私たちの歴史総合	なし	0.5%

表5-2 歴史総合における「慰安婦」関連記述(「慰安婦」部分に訂正あり)

\*下線部は訂正または追加箇所

<訂正前>	→	<訂正後>	2021.10.11 承認
-------	---	-------	---------------

『歴史総合 近代から現代へ』 山川出版社 p149 側注⑦	
各地の戦場では、慰安所が設けられ、日本や朝鮮、台湾、占領地の女性が慰安婦として集められた。強制されたり、だまされて連行されたりした例もある。	→ 各地の戦場では、日本軍向け「慰安施設」が設けられ、日本や朝鮮、台湾、占領地の女性が慰安婦として集められた。強制されたり、だまされて連行されたりした例もある。
『現代の歴史総合 みる・読みとく・考える』 山川出版社 p134 本文	
日本軍は戦地に兵士の慰安施設を設け、朝鮮・台湾や中国・東南アジアの占領地からも女性を集めて働かせた。	→ 日本軍は戦地に兵士の慰安施設を設け、日本本土や朝鮮・台湾、中国・東南アジアの占領地からも女性を集めて働かせた。
『私たちの歴史総合』 清水書院 p110、p111	
<p>【資料6】 アジア女性基金は、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関して、道義的な責任を痛感した政府の決定に基づき、政府と国民が協力して元慰安婦の方々に国民的な償いの気持ちを表すための事業を推進することを目的に、1995年7月に発足しました。・・・・・・・・</p> <p>オランダにおいては、慰安所又は同等の場所で性的奉仕を強いられた方々に対し、医療・福祉分野の財・サービスの提供を行う事業を実施しました。インドネシアにおいては、高齢者のための施設の建設を行う高齢者社会福祉推進事業を実施してきています。(外務省 2001年)</p>	<p>→ 【資料6】 アジア女性基金は、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関して、道義的な責任を痛感した政府の決定に基づき、政府と国民が協力して元慰安婦の方々に国民的な償いの気持ちを表すための事業を推進することを目的に、1995年7月に発足しました。・・・・・・・・</p> <p>オランダにおいては、慰安所又は同等の場所で性的奉仕を強いられた方々に対し、医療・福祉分野の財・サービスの提供を行う事業を実施しました。インドネシアにおいては、高齢者のための施設の建設を行う高齢者社会福祉推進事業を実施してきています。(外務省 2001年)</p> <p>※従来は、政府の談話なども含めてこのように表現されることも多かったが、実態を反映していない用語であるとの意見もある。現在、日本政府は、「慰安婦」という語を用いることが適切であるとされている。</p>
<p>【資料7】 政府間以外の主な戦後補償 1992年 釜山従軍慰安婦・女子挺身隊公式謝罪請求事件 一審一部認容、2003年最高裁棄却</p>	<p>→ 【資料7】 政府間以外の主な戦後補償 1992年 釜山従軍慰安婦・女子挺身隊公式謝罪等請求事件 ※訴訟・事件の名称は当時の呼称や通称にもとづく。</p>
『詳述歴史総合』 実教出版 p185 本文	
日本人として戦争を担った朝鮮半島・台湾出身者への補償や未払い賃金の請求、いわゆる「 <u>従軍慰安婦</u> 」など、政府は解決済みとしているが、問題は多い。	→ 日本人として戦争を担った朝鮮半島・台湾出身者への補償や未払い賃金の請求、「 <u>慰安婦</u> 」など、政府は解決済みとしているが、問題は多い。
<訂正前>	→ <訂正後> 訂正日未確認
『詳解歴史総合』 東京書籍 p132、p181、索引	
<p>戦時下では、慰安所が各地に置かれ、多くの女性の人権がふみにじられた。</p> <p>【注3】 日本人や日本の植民地支配下、日本の占領下に置かれた人々が慰安婦として<u>従軍させられた</u>。</p> <p>【コラム 戦後補償】 ・・・また、慰安婦についてもアジア女性基金が民間機関として部分的に補償を行い、2015年にも日韓間でこの問題の合意がなされたが、数年後に頓挫した。</p>	<p>→ 戦時下では、慰安所が各地に置かれ、多くの女性の人権がふみにじられた。</p> <p>【注3】 日本人や日本の植民地支配下、日本の占領下に置かれた人々が慰安婦として<u>軍とともに行動させられた</u>。</p> <p>【コラム 戦後補償】 ・・・また、慰安婦についてもアジア女性基金が民間機関として部分的に補償を行い、2015年にも日韓間でこの問題の合意がなされたが、数年後に頓挫した。</p>

『新選歴史総合』 東京書籍 p 121、p161、索引	
各地に慰安所が置かれ、日本人や植民地および占領下の人々が慰安婦として従軍させられ、多くの女性の人権がふみにじられた。 【コラム 戦後補償】 慰安婦についても民間機関のアジア女性基金が部分的に補償を行った。	→ 各地の慰安所では、日本人や植民地・占領下の人々が慰安婦として軍とともに行動させられ、多くの女性の人権がふみにじられた。 【コラム 戦後補償】 慰安婦についても民間機関のアジア女性基金が部分的に補償を行った。
『歴史総合』 実教出版 p137、索引なし	
【沖縄と戦争】 なお、沖縄戦には約1～2万の朝鮮人軍夫が動員され、130か所の軍慰安所では、少なくとも160人の朝鮮人「慰安婦」がいたとされる。	なお、沖縄戦には数千人の朝鮮人軍夫が動員され、140か所あまりの軍慰安所では、少なくとも150人をこえる朝鮮人「慰安婦」がいたとされる。

表 5-3 歴史総合における「慰安婦」関連記述（「慰安婦」部分に訂正なし）

出版社	書名	「慰安婦」記述
第一学習社	高等学校 歴史総合	p152、索引なし また、朝鮮から多くの人々が日本の炭鉱・鉱山や軍需工場へ強制連行されたり、多くの女性が慰安婦として戦地に送られたりした。
第一学習社	高等学校 新歴史総合 過去との対話、つなく未来	p146、索引なし さらに、朝鮮から多くの人々が日本の炭鉱・鉱山や軍需工場へ強制連行されたり、女性が慰安婦として戦地に送られたりした。

\* 上記第一学習社の教科書は、「強制連行」については訂正申請している。

### 【日本史探求】

「日本史探求」を発行する以下の5社7冊のうち、6冊に「慰安婦」関連記述があった。なかでも、複数の箇所を取り上げ、資料とともに記述があるのは実教出版である。

なお、以下の表では、検定申請の際の白表紙本から記述が変わっ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内に白表紙本の記述を示した。

出版社	書名	「慰安婦」記述
東京書籍	日本史探求	p266 注 索引あり ①占領地や植民地の女性のなかには、慰安婦として戦地に送られた者も少なくなかった。
実教出版	日本史探求	p317 本文 〈文化の統制〉 しかし、同様に中国戦線での見聞をもとにした石川達三の「生きてゐる兵隊」は、慰安所（注8）での兵隊の描写などを伏せ字としていたが、反軍的であるとして発禁処分を受けた。 注8 日本軍の関与のもとで設置・統制され、戦域の拡大とともに広がった。日本人のほか植民地・占領地の女性が慰安婦として将兵の性の相手を強いられた。 p329 〈歴史資料から考える〉 ②皇民化政策と戦時下の動員解説 また、日中戦争開始以降、日本軍の関与のもとで設置・統制された慰安所で〔白表紙本：日本軍が管理する慰安所が戦地に設置され〕、多数の女性が「慰安婦」として日本軍兵士の性の相手をさせられた。 p361 〈冷戦の終結と民主化の進展〉 冷戦終結後には、これまでの政治体制・国際関係のなかで抑圧されてきた人権を求める声は、さらに強まり、1991年（平成3年）には元慰

		<p>安婦の [白表紙本：さらに広がった。1991年(平成3年)3月には、戦時中に日本軍慰安婦制度の犠牲となった]韓国人女性が名のりをあげた。日本政府は調査を実施し、<u>1993年に政府は慰安所の設置・管理、慰安婦の移送への軍の直接的あるいは間接的な関与を認め</u> [白表紙本：1993年には政府として慰安婦制度への軍の関与を認め]、各国に生存する元慰安婦の人々へ「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とともに、歴史研究と教育を通じて記憶にとどめる意思が表明された(河野官房長官談話)。このあと、民間の基金(アジア女性基金)が設立され被害者への償いが試みられた。</p> <p>p 361 注</p> <p>③アジア女性基金による償い金の受け取りをめぐる、各国あるいは国の内部でも評価が分かれた。日本と韓国の間では、2015年に両政府間で最終解決とする対応に向けた合意が結ばれた。</p> <p>p 373 テーマ別索引</p> <p>女性史—近代—戦時体制下の女性(大日本婦人会、女子挺身隊、創氏改名、慰安婦)</p>
実教出版	精選日本史探究 今につながる 未来をえがく	<p>p 195 本文</p> <p><u>また多くの女性が「慰安婦」とされ軍も関与した慰安所で働かされた</u> [白表紙本：また多くの女性たちが日本軍慰安婦とされた]。</p> <p>p 197 注</p> <p>③・・・沖縄戦では軍の労働者や「慰安婦」として動員された多くの朝鮮人もなくなっている。</p> <p>p 219 コラム</p> <p>歴史認識問題・・・アジア諸国の民主化がすすみ、冷戦体制が崩壊した1990年代になると、「<u>慰安婦</u>」とされた女性や、<u>強制的に動員され、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た人々が</u> [白表紙本：元「日本軍慰安婦」や、強制労働の被害者たちが]声をあげはじめ、謝罪と補償を求める動きがおきる(戦後補償問題)。</p>
清水書院	高等学校 日本史探究	<p>p 235 もっと知りたい日本史⑩</p> <p>・・・また、アジア太平洋戦争では、兵員を補充するため志願兵制度が徴兵制度に切りかえられ、労働者の強制動員や慰安婦の調達も行われた。</p>
山川出版社	詳説日本史	<p>p 322 注</p> <p>①・・・また、戦地に設置された日本軍向けの「慰安施設」には、<u>日本・朝鮮・中国などから女性が集められ、「慰安婦」として働かされた。強制されたり、だまされて連行されたりした例もある。</u></p>
山川出版社	高校日本史	なし
第一学習社	高等学校 日本史探究	<p>p 241 本文</p> <p>また、朝鮮人を中心とした多くの女性が慰安婦として戦地に送られた。</p>

【世界史探求】

「世界史探究」の教科書を発行する以下の5社が7冊のうち、「慰安婦」関連記述があるのは2社のみとなった。山川出版社は「世界史A」「世界史B」ともになかったが、東京書籍、第一学習社ともに、前課程では記載していたが、今回はなくなった。

出版社	書名	「慰安婦」記述
東京書籍	世界史探究	なし

実教出版	世界史探究	338頁、本文 また、日本の植民地・占領地の女性のなかには「慰安婦」として戦場に送られた人もいた。
帝国書院	新詳世界史探究	300頁 注3 【日本への補償要求】 日本政府は、戦後の賠償・補償については国家間の条約等により法的に解決済みとしてきた。しかし1990年代以降に、兵士・労働力の徴発などの被害に対する個人への補償を求めて、一連の裁判が起こされた。いわゆる慰安婦問題もその一つである。
山川出版社	詳説世界史	なし
山川出版社	高校世界史	なし
山川出版社	新世界史	なし
第一学習社	高等学校 世界史探究	なし

【地理総合】【地理探究】

必修科目である「地理総合」の教科書は、2021年、2022年検定で東京書籍、実教出版、帝国書院、二宮書店、第一学習社の5社が7冊発行しているが、いずれも「慰安婦」関連記述がなかった。また、選択科目の「地理探求」は東京書籍、帝国書院、二宮書店の3社が3冊発行しているが、これにも記載はなかった。

【公共】

必修科目である「公共」の教科書は、2021年、2022年検定で東京書籍、教育図書、実教出版、清水書院、帝国書院、数研出版、第一学習社、東京法令の8社が13冊発行しているが、「慰安婦」関連記述があったのは、清水書院のみだった。従来の「現代社会」では、多くの教科書でなんらかの記述があったことを考えると大きな後退であろう。

出版社	書名	「慰安婦」記述
清水書院	私たちの公共	p87、本文、注、索引なし ・・・日本をとりまく東アジアの国際環境の改善も日本外交の重要課題です。日本と韓国は、慰安婦問題・徴用工問題などの歴史認識問題、日本から韓国への輸出規制強化という経済問題、さらにアメリカが主導する軍事協力体制における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破棄などをめぐって、関係を悪化させています。 p87 注 ④日韓間の戦後補償問題 2015年12月、日本と韓国の両政府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合意を成立させました。しかし2017年5月に大統領に就任した文在寅はこの合意を受け入れていません。

【倫理】

選択科目となる「倫理」「政治・経済」では、「倫理」を発行する東京書籍、実教出版、清水書院、数研出版、第一学習社の5社5冊にはいずれも記載がなかった。「倫理」では山川出版社

が継続して記載していたが、今回は発行していない。

【政治経済】

「政治経済」の教科書を発行する以下の5社6冊のうち4冊に関連記述がある。全般的に、2015年の日韓外相会談による合意で解決しているような印象を与える記載が多いなか、東京書籍の分量と資料の量は特筆に値する。

出版社	書名	「慰安婦」記述
東京書籍	政治・経済	<p>p 2 0 0-201 本文                      これまで日本政府は植民地支配と侵略に対する「反省」と「お詫び」を明確にしてきたが、この問題は収束していない。また、「慰安婦問題」のように、今なお近隣国の国民から謝罪が十分でないと非難されたり、元「徴用工」問題のように、日本の植民地支配や侵略の被害を受けた人々から日本政府や日本企業が保証を要求されたりすることがある。</p> <p>p 2 0 0 注                      ①「慰安婦問題」                      1995年に民間から資金を募った「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が発足し、韓国やインドネシアなどで元慰安婦に対する償い事業が実施された（2007年解散）。また、2015年の日韓外相会談で、韓国政府が設立する財団へ日本政府が資金を拠出することなどによってこの問題を「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することで合意したが、韓国での政権交代後、その財団は正式に解散した。</p> <p>p 2 0 0 囲み                      ②河野談話（1993年、抜粋）「慰安婦問題」に関する調査結果を受け、当時の河野洋平官房長官が発表した談話。                      本件（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る。政府は、この機会に、改めて、その出身地のいかに問わず、いわゆる従軍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申し上げる。                      ……                      われわれはこのような歴史の真実を回避することなく、むしろこれを歴史の教訓として直視していきたい。われわれは、歴史研究、歴史教育を通じて、このような問題を永く記憶にとどめ、同じ過ち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という固い決意を改めて表明する。                      ……                      「慰安婦問題」への日本軍関与を認めた談話で、日本政府の公式見解となっている。2021年に「従軍慰安婦」ではなく「慰安婦」の用語を用いることが適切との閣議決定が行われた。</p>
実教出版	詳述政治・経済	<p>p 1 9 8 本文                      さらに、1990年代になると、元慰安婦や強制的に動員され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た者への戦後補償が目され、改めて、戦争責任・戦後責任が問われるようになった。</p> <p>p 1 9 9 注</p>

		②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2015年の日韓外相会談で、元慰安婦の支援事業に向けた財団への資金拠出を通じて、この問題の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が確認されている。
実教出版	最新政治・経済	なし
清水書院	高等学校 政治・経済	p202、注 ③日韓請求権協定 日本政府はこの協定によって、個人が補償を求める請求権も包括的に解決済みであるとしている。元慰安婦が人道的見地から日本政府に謝罪や賠償を求めた問題については、2015年の日韓外相会談において、韓国政府が設立する財団に日本政府が資金を拠出することで、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
数研出版	政治・経済	なし
第一学習社	高等学校 政治・経済	p 191 囲み 戦後補償問題 いわゆる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日本政府は法的には解決済みとした上で、1993年に公式に謝罪し、アジア女性基金の設立の支援と「償い金」の支給や医療福祉支援事業に協力した。2015年には、日韓両政府が慰安婦問題の「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に向けて合意し、両政府が元慰安婦支援のための事業に協力することが表明された。しかし、その後、韓国側による合意の見直しがなされたことで、協力関係は進展していない。

\*東京書籍の下線部は、白表紙本と比較して追記されていた箇所。

## おわりに

本調査では、旧課程の高校の社会科系の教科書では、歴史にかかわらず、多数の教科書発行会社が工夫をしながら「慰安婦」関連記述を掲載してきたことを概略的に伝えるとともに、新課程においては、地理、公共、倫理などで記述がなくなっている状況を確認した。

旧課程でも記載内容や分量には出版社および教科書によって差があったが、新課程では「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が推進される状況で、テーマに「慰安婦」問題が入ってくるかどうかで、大きな差ができると思われる。現在の日本の学校教育では、教員不足と超過労働も大きな課題となっており、世界と日本の近現代史を扱う「歴史総合」が活かされるかどうかは、教育現場の全体的な状況にも影響を受けるだろう。

wamの第18回展示では、出版社ごとに高校の日本史教科書の変遷を可視化するとともに、教科書がどのように政治的な思惑中で制度設計がなされてきたかを年表で伝えた。一方、wamの来館者の感想文からわかるのは、教科書には数行しか記述がなかった日本軍性奴隷制の具体的な実態への関心である。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在日、中国、台湾、フィリピン、マレーシア、インドネシア、オランダ、東ティモール、日本の女性たちの具体的な被害と戦後の苦しみ、加害兵士の証言や歴史学が明らかにしてきた日本軍による慰安所管理・運営の実態に強い関心や驚きがあったことがうかがわれる。戦時性暴力、とりわけ日本軍「慰安婦」制度における被害と加害に焦点をあてるミュージアムとしては、疑問をもった生徒や学生が、さらなる学びを深められるよう、教育施設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ために、展示実践とウェブサイトをつうじた調査研究の素材提供を進めていきたい。

なお、索引に「慰安婦」といった語が掲載されていないものも多く、アジア太平洋戦争期や戦後におおよその予測をつけて調べているため、調査結果は完全なものではなく見落としがある可能性がある。ウェブサイトを公開の際には、不備があればご指摘いただきたい。

MEMO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and extending down the page.

# 토론

**이신철**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토론문>

조운수(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한일 모두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한국은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시 동원체제와 민중의 삶’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일본군‘위안부’를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역사 교과서는 한일 모두 서로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체 가운데 하나다. 한국에서는 역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요시위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토론자가 추운 겨울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에게 언제부터인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은 대체로 교과서나 교사로부터 지식을 획득한다. 정서적으로 한창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교육할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역사적 사실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다루되, 이것이 반일 감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젠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나 남성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기술은 양국의 사회적·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의 사회적·정치적 인식은 교과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는 일본의 전후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전에는 미해결의 전후 보상 문제로 기술했으나, 2022년 교과서에서는 아시아 여성기금과 함께 2015년 한일합의를 기술하여 문제가 해결됐음을 강조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은 【역사총합】과 【일본사탐구】 교과서에서 다룬다. 그런데 짓고 출판사나 디자이너 학습사를 제외하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측주 등으로 한정되며 관련 기술이 매우 적다. 2022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 중 6종, 【정치경제】 6종 중 4종, 【세계사탐구】 7종 중 2종, 총 20종 중 12종에서 기술되어 있다. 짓고 출판사를 제외하면 ‘위안부’ 기술은 한두 줄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것은 2종으로 야마카와 출판사와 짓고 출판(A)다. 교과서 대부분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위안소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및 폭력성을 모호하게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에서 군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2022년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위안부’는 존재하나 일본군‘위안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군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기술 만으로는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피해자가 겪은 인권 침해 및 고통의 심각성도 알 수 없다.

한국 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은 일본 교과서와 비교하면 분량이 훨씬 많고, 피해자 증언을 비롯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내외 움직임 등도 서술하고 있다. 활동 과제를 제시하는 교과서도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근거로 작성되나, 집필자의 인식도 중요하다. 정부의 각의 결정 반영 요구에 맞서서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시키려고 한 노력도 교과서 기술에 드러나 있다. 교과서 기술 개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나, 교과서 기술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 위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질문>

1. 한일 학생들을 위한 1시간 분량의 수업 자료를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한일공동계기 수업자료를 만든다면 한일 양국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 제2부 ]

- 
- [발표 1] **2022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사탐구』의  
고대 한일관계 서술 분석**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 [발표 2] **일본 고등학교 ‘탐구’ 교과의 한국근대사 서술 분석**  
조 건 (동북아역사재단)
- [발표 3]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드러난 조선 식민지 지배 기술과 그 특징**  
—— ‘역사종합’을 중심으로 ——  
가토 게이키 (히토쓰바시대)
- [토론] 신가영 (연세대)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홍종욱 (서울대)
-



[ 발표 1 ]

---

# 2022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사탐구』의 고대 한일관계 서술 분석

---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 2022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사탐구』의 고대 한일관계 서술 분석

위가야(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 I. 머리말

2022년 3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3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201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을 반영한 것이며, 2021년에는 역사총합 12종, 지리총합 6종, 공공 12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2022년에는 총 31종의 사회과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관련 기술이 있는 것은 일본사탐구 7종, 세계사탐구 7종, 지리총합 1종, 지리탐구 3종, 정치·경제 6종, 공공 1종의 총 25종이다.<sup>1)</sup> 이 글에서는 2022년 검정 통과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고대 한일관계 관련 서술이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본사탐구』 교과서 7종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2018 개정 학습지도요령은 기술 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교육 내용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sup>2)</sup> 학습지도요령에서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竹島와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다루도록 한다”고 한 것에<sup>3)</sup> 따라 2021년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된 것,<sup>4)</sup> 학습지도요령해설에서 러일전쟁 서술에 대해 “러일전쟁에서의 승리가 아시아 민족들의 독립이나 근대화 운동에 자극을 준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고 집필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2021년 검정 통과 『역사총합』 교과서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sup>5)</sup> 통해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고대사와 관련해서 근현대 및 독도 관련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 제시는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비교적 자유로운 교과서 집필이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독도·위안부·강제동원과 같이 정부의 입장이 교과서 서술에 반영되는 역사 왜곡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추정 또한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일본사탐구』의 고대 한일관계 서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려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성적 이해에 기초한 일본 우위의 고대 한일관계사관이 드러나는 내용도 여전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필요하다.

검정을 통과한 7종의 『일본사탐구』 교과서의 발간 출판사와 교과서명 등은 다음 <표-1>과 같다. 짓쿄출판(實教出版)과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의 경우 한 출판사에서 2종의 교과서를 발행하는데, 이후의 서술에서는 편의상 ‘도쿄’, ‘짓쿄A’, ‘짓쿄B’, ‘시미즈’, ‘야마카와A’, ‘야마카와B’, ‘다이이치’로 약칭하겠다.

1) 이상의 검정 결과는 조운수의 글을 참조하여 기술[조운수, 2022, 「2022년 검정 통과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동북아역사리포트』 제14호(2022.04.15)].

2) 서종진, 2019, 「일본의 개정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본 교육정책의 변화」, 『歴史教育』 152.

3) 조운수, 2022, 앞의 글, 3쪽.

4) 홍성근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2022년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55종 중 『세계사탐구』 5종을 제외한 50종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다(홍성근, 2022, 「2021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분석」, 『韓日關係史研究』 76, 108쪽).

5) 조건, 2022, 「2021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한국 근대사(1890~1910) 서술과 특징」, 『韓日關係史研究』 76, 10~11쪽.

〈표-1〉 2022년 검정 통과 『일본사탐구』 교과서 출판사별 교과서명 및 집필자

출판사	서명	쪽수	저자
도쿄서적 (東京書籍)	日本史探究	342 (B5)	山本博文, 渡辺晃宏 외 17명
짓쿄출판 (実教出版)	A 日本史探究	406 (B5)	平雅行, 横田冬彦 외 15명
짓쿄출판 (実教出版)	B 精選日本史探究 今につなが 未来をえがく	246 (AB)	大串潤児, 石居人也 외 17명
시미즈서원 (清水書院)	高等学校 日本史探究	302 (B5)	伊藤純郎 외 12명
야마가와출판사 (山川出版社)	A 詳説日本史	398 (B5)	佐藤信, 五味文彦, 高埜利彦, 鈴木淳 외 21명
야마가와출판사 (山川出版社)	B 高校日本史	302 (B5)	佐藤信, 五味文彦, 高埜利彦, 鈴木淳 외 21명
다이이치학습사 (第一学習社)	高等学校 日本史探究	312 (B5)	大橋幸泰 외 11명



II. 고대 한일관계 서술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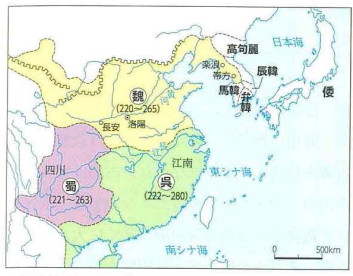
1. 한군현의 위치 문제

기존의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한 비판 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한군현의 위치를 그린 지도가 역사적 실상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서술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사탐구』 교과서 7종의 한군현(대방군) 관련 영역 표시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대방군의 영역 표시


출판사	교과서 내용	출판사	교과서 내용
도쿄	 <p>18 3世紀の東アジア 〈지도〉3세기의 동아시아 (p.17)</p>	짓쿄A	 <p>3世紀の東アジア 〈지도〉3세기의 동아시아 (p.27)</p>

출판사	교과서 내용	출판사	교과서 내용
시미즈	 <p>3世紀の東アジア</p> <p>〈지도〉3세기의 동아시아(p.11)</p>	야마카와 B	 <p>3世紀の東アジア 中国は三国時代で、魏の</p> <p>〈지도〉3세기의 동아시아(p.14)</p>
다이치	 <p>3世紀の東アジア</p> <p>〈지도〉3세기의 동아시아(p.33)</p>		

\* зитB, 야마카와A에는 관련 지도 없음

‘3세기의 동아시아’ 지도를 그린 모든 교과서에서 대방군의 영역을 경기도까지 내려서 그리고 있다. 참고로 『세계사탐구』에서는 대방군 이전에 낙랑군 남부에 존재했던 진번군의 영역을 한반도 중남부까지 내려서 표시하고 있는데(〈표-3〉 참조), 이는 진번군의 위치를 충청도,<sup>6)</sup> 충청도·전라북도,<sup>7)</sup>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에도<sup>8)</sup> 비정한 일본인 역사학자들의 과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표-3〉 진번군의 위치

출판사	교과서 내용
『세계사탐구』 (야마카와)	 <p>3世紀の東アジア</p> <p>〈지도〉진·전한시대의 아시아(p.42)</p>

6) 稻葉岩吉, 1914, 「眞番郡の位置」, 『歴史地理』 24-6.

7) 今西龍, 1916, 「眞番郡考」, 『史林』 1-1.

8) 池内宏, 1951,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 『滿鮮史研究』 上世編, 吉川弘文館.

한국학계에서는 대방군의 위치를 통해서 그 전신인 진번군의 위치를 비정해 왔으며, ‘대방 태수’를 새긴 벽돌이 발견되고 중국계 고분과 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황해도 봉산 지역을 그 소재지로 비정한 견해가<sup>9)</sup> 통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학계에서는 대방군의 치소(治所)를 서울 부근으로 보기도 한다.<sup>10)</sup> ‘백제의 시조가 대방군의 옛 땅에서 건국했다’는 중국 사료의 기록과 서울의 풍납토성 등에서 출토된 중국계 유물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사탐구』 교과서의 지도는 이 견해에 기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학계에서도 반론이 제기된 바 있으며,<sup>11)</sup> 서울·경기 지역의 중국계 유물은 한성백제기 중국과의 문물 교류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sup>12)</sup> 및 일부 사서에서 백제와 대방군을 연관 지은 것이 백제에 대한 연고권을 강조하려는 중국측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sup>13)</sup> 생각하면 해당 지도의 영역 표시는 한일 양국 학계의 공감을 얻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해당 지도의 시기인 3세기에는 이미 백제가 서울 지역에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나가고 있었으므로, 백제의 초기 중심지를 충청도 일대에서 찾지 않는 이상에는 역사적 실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 영역 표시임이 분명하다.

2. 왜국과 고구려·백제·신라·가야제국(諸國)의 관계

4세기 이후를 시간적 대상으로 하는 대목에서 일본열도의 왜국[야마토 정권(왕권)]과 고구려·백제·신라·가야제국(諸國)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왜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한 『일본사탐구』의 서술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4>이다.

<표-4> 왜국과 한반도의 관계

출판사	교과서 내용	분류
도쿄	[야마토 왕권과 조선·중국] 한반도에서는 4세기 중엽 무렵 고구려·백제·신라가 세력을 다두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국이 분립했던 변한 각국은 백제나 신라와 대항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과 가야지역(가라라고도 불렀다. 이전의 변한 지역)의 철을 구해 한반도에 진출한 왜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p.25)	왜국의 對한반도 관계 목적
	4세기 후반 고구려는 백제를 침공했고 또 신라의 세력도 강해졌다. 그 결과 백제는 야마토 왕권과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항하려 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호태왕)비의 비문에 따르면 야마토 왕권은 병사를 한반도로 보내 고구려와 교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가야의 임나와 손을 잡고 한반도 남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p.25)	광개토왕 남정과 한일관계
	또 5세기 초엽부터 거의 1세기 동안 야마토 왕권의 5대 왕(왜의 오왕)은 중국의 남조(송 등)에 조공해 군사적 지배권을 증명하는 높은 칭호를 얻으려 했다. 이는 중국 황제의 권위를 배경으로 한반도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야마토 왕권은 한반도에 진출함으로써 대륙의 선진 문화를 수용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p.25)	왜의 오왕

9) 이병도, 1976, 「眞番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24~126쪽.  
 10) 西本昌弘, 1989, 「帶方郡治の所在地と辰韓廉斯邑」, 『朝鮮學報』30.  
 11) 礪波護·武田幸男, 1997, 『隋唐帝國と古代朝鮮』(世界の歴史 6), 中央公論社, 282쪽.  
 12) 朴淳發, 1999, 「漢城百濟의 對外關係-國家 成立期」 對外交渉의 實狀과 意義」, 『百濟研究』 30.  
 13) 윤용구, 2009, 「일본에서의 ‘고조선사’ 연구」, 『고조선사 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206쪽.

출판사	교과서 내용	분류
	<p>[야마토 정권과 중국·조선] 한반도 남부는 다수의 소국으로 구성된 마한·변한·진한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마한에서는 백제가, 진한에서는 신라가 국가를 형성했고 변한에서도 소국마다 유력자가 대두했다. 야마토 정권은 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변한 지역의 가야(가라라고도 말한다)국들과 교섭해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 고분에 부장된 주요 대륙계 물품이 4세기 후반에 중국계 동경(銅鏡)에서 가야계 철제 무기·무구(武具)류로 이행하는 것은 동아시아 정세 변동이 야마토 정권의 대외 교섭의 변화나 정권의 군사적 성격 증대에도 반영된 것을 보여준다. (p.30)</p>	<p>왜국의 對한반도 관계 목적</p>
<p>자료A</p>	<p>4세기 말에는 고구려가 더 남하해 백제·신라를 압박했다. 414년에 건립된 고구려의 호태왕(광개토왕)비에는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엽 무렵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대립하는 가운데 왜가 백제를 지원해 고구려와 교전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 나라현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에 전해지는 칠지도의 명문에서는 4세기 후반에 왜와 백제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p.30)</p>	<p>광개토왕 남정과 한일관계</p>
	<p>5세기에 들어서면 중국 사서에 다시 왜의 존재가 등장한다. 『송서』 왜국전 등에 따르면 5세기에 왜의 오왕이 책봉을 원하며 남조에 공경했고 왜 국왕의 지위 승인과 한반도 남부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칭호를 원했다고 한다. 이는 황제의 권위를 빌려 국내 통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p.30)</p>	<p>왜의 오왕</p>
	<p>[4세기의 동아시아 정세와 광개토왕비] 중국에서는 삼국시대 후 진이 통일했으나 4세기 초엽에 북방민족이 침입하면서 북조와 남조로 나뉘었고 각각 왕조 교체를 되풀이했다. 중국 왕조의 분열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자 중국 동북부에서 성립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배하에 있던 낙랑군·대방군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로 세력을 확대했다. 한편 한반도 남부에서는 백제·신라·가야국들이 성립했다. 이 중 가야국들은 백제나 신라와 대항하기 위해 왜국(야마토 정권)이 요구한 철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왜국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다. (p.22)</p>	<p>왜국의 對한반도 관계 목적</p>
<p>자료B</p>	<p>4세기 후반에 들어 고구려가 세력을 반도 남부까지 확대하면서 신라와 백제, 가야국들을 압박했다. 반도 남부의 철 자원을 안정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왜국은 백제, 가야국들과 손을 잡고 고구려와 교전했다. (p.22)</p>	<p>광개토왕 남정과 한일관계</p>
	<p>[왜의 오왕] 5세기에 들어 백제·신라의 국력이 튼튼해지자 한반도에 대한 왜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해졌다. 그에 왜국은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해 높은 칭호를 확보하려 했다. 『송서』 왜국전에는 당시 사신을 보낸 왕으로 찬(讚), 진(珍), 제(濟), 흥(興), 무(武) 다섯 왕(왜의 오왕)의 이름이 기술되어 있다. 이 중 왜왕 무는 송의 황제에게 문서를 제출해 칭호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교를 전개했다.(p.22-23)</p>	<p>왜의 오왕</p>
<p>시미즈</p>	<p>[4~5세기의 동아시아와 일본열도] 한반도 북부에서는 중국 동북부에서 건국한 고구려가 313년에 낙랑군을 멸망시켰다. 남부에서도 백제·신라가 국가 형성으로 향했다. 일본열도에서도 늦어도 3세기 후반에는 지금의 나라현을 중심으로 하는 긴키의 유력 호족이 연합해 정권을 형성했고(야마토 정권) 4세기 전반 무렵에는 도호쿠 남부에서 규슈 북부까지 그 지역을 확대했다. (p.22)</p>	<p>왜국의 對한반도 관계 목적 (他교과서와 다른 서술)</p>
	<p>4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걸쳐 한반도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 3국이 대립 항쟁을 되풀이했다. 고구려는 신라를 자국의 지배에 편입하는 한편</p>	<p>광개토왕 남정과</p>

출판사	교과서 내용	분류
	백제는 왜국과 동맹을 맺고 이에 대항했다. 나라현 이소노카미신공에 소장된 칠지도의 명문이나 고구려 호태왕 비문에서 알 수 있듯이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엽에 걸쳐 왜국은 백제의 요청에 응해 바다를 건너가 고구려와 교전했다. (p.22)	한일관계
	※ 왜 오왕의 조공 관련 서술은 왜왕 무(武)의 상표문으로 대체 다만, 상표문에서 평정했다고 한 해복이 조선일 가능성을 제시 (p.23)	왜의 오왕
야마카와 A	[동아시아국들과의 교섭] 중국 동북부에 성립한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로 영토를 넓히고 313년에는 낙랑군을 멸망시켰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마한·변한·진한이라는 각 소국의 연합이 형성되었으나 4세기에 마한에서 백제가, 진한에서 신라가 건국되어 국가를 형성했다. 한반도 남부의 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옛 변한의 땅 가야(가라)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왜(야마토 정권)는 (p.26~27)	왜국의 對한반도 교섭 목적
	4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펼치자 백제, 가야와 함께 고구려와 싸우게 되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호태왕)비의 비문에는 왜가 고구려와 교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승마 풍습을 배워 5세기에 들어서면 일본열도의 고분에서도 마구가 부장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이 왜는 백제와 가야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습득했고 또 많은 도래인이 바다를 건너와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일본열도에 전했다. (p.26~27)	광개토왕 남정과 한일관계
	그리고 한반도 남부를 둘러싸고 외교·군사상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5세기 초엽부터 약 1세기 동안 『송서』 왜인전에 찬(讚), 진(珍), 제(濟), 흥(興), 무(武)로 기술된 왜의 오왕이 잇따라 중국의 남조에 조공하고 있다.(p.26~27)	왜의 오왕
야마카와 B	[야마토 정권과 동아시아] 왜(일본)에서는 4세기 중엽 무렵까지는 야마토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야마토 정권이 세력을 확대해 야마토 지방의 기미(王)는 각지의 호족을 통합해 오키미(大王)라 불리었다. 야마토 정권은 신문화나 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한반도 남부의 가야국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p.22)	왜국의 對한반도 관계 목적
	4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백제 등과 함께 고구려와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호태왕)비에는 왜의 병사가 신묘년(391년) 이후 한반도로 건너와 고구려군과 교전했다고 적혀 있다. (p.22)	광개토왕 남정과 한일관계
	중국의 역사서에 따르면 5세기를 통해서 왜의 5인의 왕이 중국 남조인 송에 조공의 사자를 보냈다(왜의 오왕). 오왕의 목적은 중국황제의 권위를 빌려 한반도의 여러 나라와의 외교·군사상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고 국내 지배를 안정시키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p.22)	왜의 오왕
다이이치	[신문화의 유입] 당시의 왜국은 철의 자급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 획득을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는 가야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p.34)	왜국의 對한반도 교섭 목적
	그런데 4세기 중엽에 한반도 북방의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남하를 기도하게 되면서 철의 입수가 위태로워졌다. 왜국은 백제와 동맹을 맺고 저지하려 했다. (p.34)	광개토왕 남정과 한일관계
	[왜의 오왕] 이 무렵의 중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대립했다. 5세기에 오키미는 백제·신라·가야국들과 연계해 고구려와 대결하려 했으며, 동아시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중국의 남의 왕조(남조)에 외교 사절을 파견했다. 50년에 걸쳐 찬(讚), 진(珍), 제(濟), 흥(興), 무(武)라는 5명의 왜국 왕이 대대로	왜의 오왕

출판사	교과서 내용	분류
	조공했다(왜의 오왕). 오왕은 남조의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그 권위를 이용해 국내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우세했고 그 압박으로 인해 5세기 후반에도 도래인의 유입이 활발했다. (p.35)	

먼저 ‘시미즈’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왜국의 對한반도 교섭 목적을 철자원의 확보로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서술은 곧 왜국이 철자원 확보의 대상이었던 가야 지역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연결되는데, 실제로 ‘짓쿄A’의 “야마토 정권은 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변한 지역의 가야(가라라고도 말한다)국들과 교섭해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서술은 이러한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짓쿄B’의 “가야국들은 백제나 신라와 대항하기 위해 왜국(야마토 정권)이 요구한 철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왜국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다”는 서술 또한 왜국을 우위에 두고 있다. 반면에 ‘시미즈’의 경우는 철자원 확보 관련 서술이 없고 이 때문인지 왜국의 對한반도 교섭의 시작을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항쟁 과정에서 백제와의 동맹이 체결된 것으로 서술하여, 해당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한반도와 일본열도 정치세력의 관계를 상호 대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광개토태왕 남정과 한일관계 관련 부분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광개토태왕비의 내용을 근거로 왜국이 백제와 연계하여 한반도로 건너와 고구려군과 교전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광개토태왕비 연구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점을 형성한 신묘년(391)조 관련해서는 해당 문구를 곧 역사적 사실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야마카와B’와 같이 본문에서 “고구려의 광개토태왕(호태왕)비에는 왜의 병사가 신묘년(391년) 이후 한반도로 건너와 고구려군과 교전했다고 적혀 있다”고 서술하여 읽는 이에 따라서는 신묘년 기사를 곧 역사적 사실의 반영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경우도 확인된다. 또한 본문에서 신묘년조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참고자료에서 신묘년조의 판독문과 해석문을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제시함으로써 신묘년 기사를 본문의 내용에 투영하여 이해하게 만든 ‘도쿄’와 ‘짓쿄B’<sup>14)</sup>의 경우도 문제가 있는 서술로 지적할 수 있다. ‘짓쿄A’와 ‘야마카와A’에서 신묘년 기사를 제시하면서도 해석에 여러 설이 있다고 첨언한 방식을 다른 교과서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왜 오왕의 對남조 교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왜 오왕이 임나·가라·신라 등 한반도 여러 나라가 포함된 제군사호를 요청한 것이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술한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과거 坂元義種은 왜 오왕의 對남조 교섭에 대해 “4세기 후반에 이미 왜가 변한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보고, 왜왕들이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의 7국에 대한 군사호 제수를 요구한 것은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려던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또 “왜는 지역적·부분적으로 한반도 남부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그 지배를 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매우 불충분·불안정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에 전통적 권위를 갖는 중국 왕조의 권위를 빌려 지배의 정통성을 얻고 안정성을 도모하려 했고 더구나 정복이 미치지 않은 여러 지역에 대해서 잠재적 지배권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sup>15)</sup> 설명하여 왜 오왕의 제군사호 제수를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배권을 인정과 등치시켰다. 그러나 江畑武가 坂元義種의 단정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sup>16)</sup> 그 결과 최근 일본 학계에서는 왜왕이 한반도 남

14) ‘짓쿄B’의 경우는 신묘년 기사를 제시하기 전에 과거 비문 개찬설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부정되고 있다고 함으로써 현재의 판독문에 신뢰성을 더하는 서술 방식을 취했다.

15)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369~372쪽, 513~514쪽.

16) 江畑武, 1974,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中國との冊封をめぐって」, 『古代の日本と朝鮮』, 學生

부 지역의 군사호를 칭한 것이 군사적인 지배 의도와는 관련이 있지만 실제 지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가<sup>17)</sup>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사탐구』 교과서의 해당 부분 서술은 이러한 일본 학계의 통설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지만, ‘짚코B’의 “5세기에 들어 백제·신라의 국력이 튼튼해지자 한반도에 대한 왜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해졌다. 그에 왜국은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해 높은 칭호를 확보하려 했다”와 같은 서술은 한반도에 대한 왜의 영향력을 기정사실화 한 뒤에 군사적 지배권에 대한 ‘인정’ 의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인정’은 이미 확보한 것에 대한 ‘추인’의 성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여러 교과서에서 <표-5>와 같이 『송서』 왜국전의 해당 기사를 별다른 설명 없이 제시하고 있는데, 본문 서술과 함께 이 사료를 읽었을 때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해당 기사를 사실의 반영으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sup>18)</sup>

반면에 ‘시미즈’는 왜국의 對남조 교섭이 가지는 한반도와의 관계를 본문에서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서술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교과서는 본문의 “야마토 정권 가운데서 특히 큰 힘을 가진 지배자(大王)이 출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역사서 『송서』 왜국전에 보이는 왜의 오왕이나,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 고분 출토 철검명,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 고분 출토 철도명 등에 적힌 ‘大王’의 문자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서술에서 왜의 오왕을 언급할 뿐 제군사호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및 우위에 대한 의도와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왜왕 무(武)의 상표문을 제시하면서 평정의 대상인 해북(海北)을 조선반도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왜의 오왕과 한반도 문제를 분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전향적인 서술 태도임은 분명하다.

<표-5> 『송서』 왜국전 기사와 왜왕 무(武)의 상표문

출판사	교과서 내용
-----	--------

社, 125쪽.

17) 熊谷公男, 2001, 「列島と半島と大陸」, 『大王から天皇へ-日本の歴史3』, 講談社, 71~79쪽.

18) 이근우는 최근 가야사 학술토론회에서 일본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이 교육되는지에 여부에 대해 “우리의 수많은 노력을 통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임나일본부설이나 한반도 진출이라든지 군사적으로 지배를 했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본문 외 참고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본 일본 모두의 교과서에 정말 자세한 한반도 지도가 여러장 들어 있습니다. 그 지도들이 시대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일본 교과서에 한반도 지도를 왜 많이 보여줍니까? 그럴 정도로 대단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지도뿐 아니라 세 가지 참고자료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광개토태왕릉 비문, 다른 하나는 일본서기 신공기에 한반도를 정벌했다는 이야기, 마지막 하나는 중국 송서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가 사실은 일본 사학계에서 임나일본부를 구성하는 기본자료입니다. 그것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고학 자료에 끼워 맞추는 싸움인데, 그 기본적인 자료를 교과서에 다 실어 놔줍니다. 본문에는 없으므로 우리가 항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강의하는 교사는 그 자료들을 읽어주면 자연적으로 과거에 일본이 주장했던 임나일본부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고등학생 때 이미 다 배우게 됩니다”라고 발언하여 본문 서술이 없더라도 자료를 통해 역사적 실상을 호도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2021년 4월 23일 개최된 학술회의 <가야사의 인식변화>의 『종합토론』 당시 이근우의 발언(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2021, 『가야사의 인식변화』, 주류성, 411~4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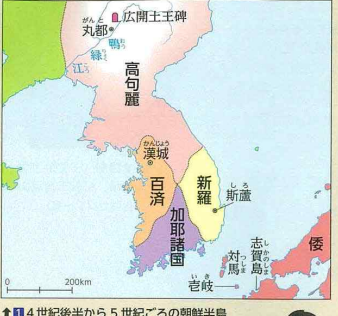


출판사	교과서 내용
<p>짓코A</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倭王武の上表文</b></p> <p>興死して弟武立つ。自ら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と稱す。順帝の昇明二年、使を遣して表を上りて曰く、「封國は偏遠にして藩を外に作す。昔より祖禰躬ら甲冑を撰き、山川を跋渉して、寧処に違あらず。東は毛人を征すること五十五國、西は衆夷を服すること六十六國、渡りて海北を平ぐるること九十五國……」と。 (宋書「倭國伝、原文は漢文</p> <p>①中国の軍事行政官。②③辰韓と馬韓をさす。④五世紀には存在しない。⑤四七八年。⑥王として封ぜられた領地。⑦僻地で遠い。⑧父祖という説と武の祖父の珍をさす説とがある。⑨落ちつく暇がない。⑩⑪毛人は東國の人々、衆夷は九州の人々か。⑫朝鮮か。</p> </div>
<p>야마카와A</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倭王武の上表文</b></p> <p>興死して弟武立つ。自ら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と稱す。</p> <p>順帝の昇明二年、使を遣して上表して曰く、「封國は偏遠にして、藩を外に作す。昔より祖禰躬ら甲冑を撰き、山川を跋渉して寧処に違あらず。東は毛人を征すること五十五國、西は衆夷を服すること六十六國、渡りて海北を平ぐること九十五國……」と。詔して武を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に除す。 (宋書倭國伝、原漢文</p> <p>①四七八年。②領域、自分の國のこと。③父祖という説と、武の祖父の珍(下圖参照)を指すという説とがある。④落ちついてゐる暇もない。⑤蝦夷だけでなく東國の人々を呼んだのであろう。⑥西國の人々のことか。⑦朝鮮半島のことか。</p> </div>
<p>시미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史料</b> <b>倭王武の上表文</b> (「宋書」倭國伝)</p> <p>昔より祖禰躬ら甲冑を撰き、山川を跋渉し、寧処に違あらず。東のかた毛人を征すること五十五國、西のかた衆夷を服すること六十六國、渡りて海北を平ぐること九十五國。 (原漢文)</p> <p><b>口語訳</b> 私の父祖は昔から自ら甲冑を身にまとい、山川を歩き回り、休む暇もありません。東は毛人(蝦夷か)を征服すること五十五國、西は衆夷(熊襲か)を服従させること六十六國、海を渡って北の方(朝鮮か)を平定すること九十五國になります。</p> </div>





### 3. 가야의 영역과 임나 문제

한일 양국 역사학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인식의 차이를 보여 온 것은 가야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교과서 서술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가야의 영역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6>은 『일본사탐구』 교과서 7종의 가야 관련 영역 표시를 정리한 것이다.

<표-6> 가야 관련 영역 표시

출판사	교과서 내용	출판사	교과서 내용
도쿄	 <p>4 5世紀の東アジア</p>	도쿄	 <p>6世紀前半に伽耶諸国から百濟の支配下にはいった地域</p> <p>1 6世紀の朝鮮半島</p>
짓쿄A	 <p>5 5世紀の東アジア 5世紀のはじめに東言が減んだあと、中国</p>	짓쿄B	 <p>4 4世紀後半から5世紀ごろの朝鮮半島</p>
시미즈	 <p>4 4世紀ごろの朝鮮</p>	시미즈	 <p>5世紀の東アジア</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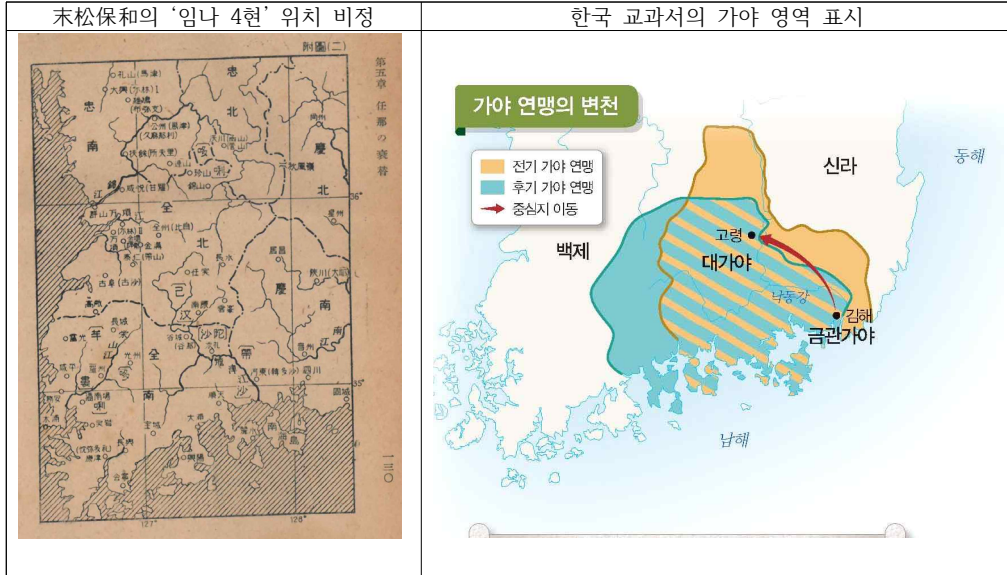
출판사	교과서 내용	출판사	교과서 내용
야마카와 A	 <p><b>6 世紀の朝鮮半島</b></p>	야마카와 B	 <p><b>1 6 世紀前半の朝鮮半島</b> 高句麗の南下と新羅の西進をうけて、百濟は南に勢力を広げ、加耶西部を支配下におさめた。</p>
다이이치	 <p><b>1 6 世紀中頃の朝鮮半島</b> 高句麗の圧迫を受けた百濟が南方の加耶に進出し、512年に加耶の4県をその支配下におさめた。</p>	금성 출판사 고등학교 한국사 (2020)	 <p><b>4세기백제의 영역 확장과 대외 교류</b></p>

‘시미즈’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가야제국의 영역을 전라남도 남부까지 확장해서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미즈’의 경우에도 한국 학계의 통설적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그린 4세기와는 달리 5세기의 경우는 가야제국의 영역을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일대까지 확장해서 표시했다.

가야제국의 영역을 전라남도 일대까지 확장해서 표시하는 것은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한 末松保和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여겨졌다.<sup>19)</sup> 末松保和는 『일본서기』에

512년 왜가 백제에 할양했다고 기록된 이른바 ‘임나 4현’의 위치를 전남 일대로 비정했고(〈표-7〉 참조), 이를 토대로 가야(그의 논지에서는 임나)의 영역을 전라남도 일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려냈다.

〈표-7〉 末松保和의 ‘임나 4현’ 위치 비정과 한국 교과서의 가야 영역 표시



일본 학계에서는 최근까지도 전남 일대의 전반후원분과 『송서』 왜국전에 기록된 慕韓의 해석을 통해 ‘임나 4현’의 위치를 전라남도 일대에서 찾고 있다.<sup>20)</sup> 결과적으로 末松保和의 위치 비정을 수용한 것인데 이러한 일본 학계의 이해가 교과서의 지도에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임나 4현’의 위치를 전남 동부 지역인 여수반도·돌산도·순천·광양에 비정한 견해가<sup>21)</sup> 제기된 이후, 이 견해가 고고 자료로 보완되면서<sup>22)</sup> 통설로 자리 잡았으며 교과서에서도 가야의 후기 영역을 해당 견해에 입각하여 표시하고 있다(〈표-7〉 참조).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일본사탐구』의 가야 영역 표시를 보면 일본학계의 통설을 따른 것이므로 일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술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末松保和의 위치 비정과 결과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임나일본부설’의 논리 전개를 추종한 결과 내려진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탐구』의 고대 한일관계 관련 서술은 여전히 과거의 ‘임나일본부설’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이해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여겨진다. 다음 〈표-8〉은 가야의 멸망 이후 국제관계 변화

19) 연민수,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韓國史研究』 129, 177쪽.  
 20) 八木充, 1964, 「大伴金村の失脚-「官家支配」から「日本府支配」へ-」, 『日本書紀研究』 1;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の再検討」, 『東北學院大學論集』 39; 東潮, 2006, 「倭と百濟·加耶-「任那四縣割讓」と「任那復興」」, 『倭と加耶の國際環境』, 吉川弘文館; 田中俊明, 2009,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記事の新解釋」,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대적 접근』, 주류성.  
 21)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22) 李東熙, 2005, 「全南東部地域 複合社會 形成過程의 考古學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3~234쪽; 朴天秀, 2009,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大伽耶와 百濟-任那四縣과 己汶, 帶沙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65, 112~113쪽.

에 대한 『일본사탐구』의 서술을 정리한 것이다.

〈표-8〉 가야의 멸망 이후 국제관계 변화 관련 서술

출판사	교과서 내용	비고
도쿄	[동아시아의 변화와 야마토 왕권] 한반도에서는 5세기 후반 무렵부터 고구려에 압박을 받은 백제와 국가의 조직을 정비해온 신라가 반도 남부의 가야국들에 세력을 확장했다. 야마토 왕권은 오오무라지인(大連)인 오오토모 가나무라 등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로 병사를 보내 가야국과의 연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562년까지 가야국들은 백제·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 한반도에 대한 야마토 왕권의 영향력은 크게 후퇴했다. (p.30)	영향력이 크게 후퇴
짓쿄A	[6세기의 한반도와 왜] 5세기 전반에 도성을 환도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고구려는 그 후로도 남하를 계속했다. 6세기에는 고구려에 압박당한 백제와 신라가 가야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6세기 중엽까지 가야국들을 병합했다. 이 정세 속에서 가야에 대한 왜의 영향력도 약화했다. (p.36)	영향력이 약화 (대상을 가야로 한정)
짓쿄B	[수의 성립과 동아시아] 중국에서는 북조에서 성립한 수가 남조의 진을 멸망시키고 589년에 국내를 통일했다. 수는 강력한 지배 체제 아래 고구려에 대군을 파견하는 등, 주변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한반도에서는 남부의 가야국들이 6세기 후반에 백제와 신라의 지배하에 편입되어 한반도에 대한 왜국의 영향력은 크게 후퇴했다. (p.26)	영향력이 크게 후퇴
시미즈	[불교 전래와 소가씨의 대두] 6세기의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백제와 신라는 남쪽에서 활로를 모색해 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가야국들을 562년까지 병합했다. 특히 신라의 대두가 두드러져 조선 두 나라의 대립은 첨예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국은 왜왕 무(武)의 478년 사절 파견 이래 120년 가까이 중국 왕조와의 국교를 단절한 상태였다. 그 결과 주로 백제를 매개로 대륙 문화를 섭취했다. 왜국은 백제에 군사를 원조했고 백제는 그 대가로 유교·의학·역(易)·역(曆) 등의 박사를 일본에 파견하고 불교도 전했다. (p.26)	영향력 관련 서술 없음
야마카와A	[동아시아의 동향과 야마토 정권의 발전] 6세기의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의 압박을 받은 백제와 신라가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해 가야국들이 562년까지 잇따라 백제와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 결과 가야와 연대하던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후퇴했다. 6세기 초엽의 정치를 주도한 오토모씨는 한반도 정책으로 인해 세력을 잃었고 6세기 중엽에는 모모노베씨와 신흥 세력인 소가씨가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p.33) <주석③> 6세기 초엽에 가야 서부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권 확립이 실정(失政)으로 이어져 오토모 가나무라는 실각했다고 한다. (p.33)	영향력이 후퇴
야마카와B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야마토 정권] 6세기에 들어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더한층 세력을 강화해 남하했다. 이에 밀린 백제·신라는 국내의 지배 체제를 굳히는 동시에 야마토 정권(왜)과도 관계가 깊던 가야국에 진출했다. 562년 신라가 가야국을 지배하에 편입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야마토 정권의 영향력은 쇠퇴했다. (p.25)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야마토 정권]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야마토 정권의 국내 정치도 동요했다. 6세기 초엽 오무라지인 오오토모노 가나무라(大伴金村)가 한반도에 대한 정책 실패로 세력을 잃었고 (p.26)	영향력이 쇠퇴
다이이치	[불교 공전] 야마토 정권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철 자원의 공급지, 신문화의 발신지	영향력 관련 서술 없음

출판사	교과서 내용	비고
	로서 중요했다. 한반도에서는 6세기 전반에 신라가 국정 개혁에 성공하면서 가야국에도 세력을 확장해 백제와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가야는 야마토 정권과의 중요한 교류 상대이기도 했다. 그 결과 백제와 야마토 정권은 외교 관계를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백제의 성명왕이 긴메이천황 때에 불교를 전했다. (p.36) <도판1> 6세기 중엽의 한반도 고구려의 압박을 받은 백제가 남쪽의 가야에 진출해 512년에 가야의 4현을 지배하에 편입했다. (p.36) 가야(가라)로부터 백제로 할양 (p.36)	

‘시미즈’와 ‘다이이치’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가야의 멸망으로 인해 왜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후퇴하거나 쇠퇴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짓쿄A’의 경우는 영향력의 대상을 가야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한국 학계의 통설적 입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으며, 역사적 실상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가야의 멸망과 왜국의 한반도 방면 영향력 문제를 연결하는 서술은 2011년 검정 통과본 교과서에서 왜국이 가야를 지배했다고 쓰거나 거점 또는 교두보를 두었다고 한 것이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을 통해 ‘영향력’이라는 용어로 수정된 결과라는 점에서<sup>23)</sup> 그나마도 개선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 관련 언급이 『일본서기』에서 왜국의 임나 경영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술된 大伴大連金村의 활동에 사실성(史實性)을 부여하는 “야마토 왕권은 오오무라지인(大連)인 오오토모 가나무라 등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로 병사를 보내 가야국과의 연계를 유지하려 했다”(도쿄) 등의 서술 및 ‘임나 4현’의 할양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6세기 지도와 함께 학습자에게 설명될 때, 이를 통한 학습자의 이해가 ‘임나일본부설’의 일본 우위의 고대 한일관계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이이치’의 경우는 왜국의 영향력 관련 서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6세기 지도에 “가야(가라)에서 백제에 할양”이라는 의미 불명의 설명을 추가하고 있는데, 영향력 관련 서술이 실제 역사상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 우위의 고대 한일관계 인식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서술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과거의 관성적 서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흔적을 노출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본다.

### III. 맺음말

2012년도 고등학교 일본사·세계사 검정본의 고대사 서술을 분석한 논문에서 한일 양국의 고대 한일교류사의 설명에서 보이는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고대한일교류사의 설명은 상호간의 사료해석 및 인식의 차이로 주요 논점에서는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측에서는 한반도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며 후진지역에 대한 시혜적 시각이 존재한다. 문화의 이면에 있는 정치외교적 교섭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반해 일본측에서는 광개토태왕비, 『송서』 왜국전의 왜왕의 작호의 문제, 특히 일본 최초의 正史인 『일본서기』의 서술에 대한 일본측 논리에 경도되어 정치적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문화적으로는 한반도의 영향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일정

23) 나행주, 2011,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 『동국사학』 51, 199쪽의 <표 14> 참조.

한 상하관계를 유지한 국제관계였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7세기 이후에는 중국의 隋唐과의 교류가 시작되면 중국문화의 직수입을 통해 일본문화의 형성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sup>24)</sup>

이상의 지적은 일본 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 서술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실제 역사상에 근접한 교과서 서술을 추동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제까지 『일본사탐구』의 서술에 대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농경문화의 전래, 도래인의 활동을 통한 선진문화의 수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사탐구』의 집필진이 객관적인 서술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역시 일본 학계의 통설적 견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한국측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문제는 한일 양국 학계의 토론을 통해 고대 한일관계의 역사적 실상에 접근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고 이러한 성과들이 양국의 교과서 서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일본 교과서의 근현대 관련 왜곡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 글에서 “일본 교육현장에서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소신 있게 기술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희망적”이라고 평가하고 “학계의 연구 성과를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반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연구자와 집필자들의 학문적 노력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sup>25)</sup> 이러한 지적은 비단 근현대 관련 역사 서술에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며, 고대사의 경우 독도·위안부·강제동원 문제와는 달리 일본정부의 표면적인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 학계의 활발한 소통이 더욱 필요함을 지적하며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24) 연민수, 2012, 「일본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對韓認識-2012년도 고등학교 일본사·세계사 검정본을 중심으로-」, 『일본학』 35, 156쪽.

25) 조운수, 2022, 앞의 글, 7~8쪽.

MEMO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and extending down the page.

[ 발표 2 ]

# 일본 고등학교 '탐구' 교과의 한국근대사 서술 분석

조 건

(동북아역사재단)



# 일본 고등학교 '탐구' 교과의 한국근대사 서술 분석

20220817\_조건(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2. 『일본사탐구』의 한국근대사 서술 실태와 변화
3. 『세계사탐구』의 한국근대사 서술 실태와 변화
4. 고등학교 탐구 교과의 한국근대사 서술 특징
5. 맺음말

##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2022년 3월 검정 발표된 일본 고등학교 지리역사과의 탐구 교과에 수록된 한국 근대사 서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탐구 교과는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그리고 『지리탐구』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했다.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는 5개 출판사에서 7개 교과서 검정을 신청했으며 신청한 교과서 모두가 검정을 통과했다.<sup>1)</sup> 5개 출판사는 東京書籍, 實教出版, 清水書院, 山川出版, 第一學業社 등이다. 이중 실교출판과 산천출판은 각 2종의 『일본사탐구』 교과서를 신청했고, 산천출판의 경우 3종의 『세계사탐구』를 신청했다.<sup>2)</sup>

『일본사탐구』는 201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신설된 교과목으로 함께 검정 발표된 『세계사탐구』·『지리탐구』와 함께 지리역사과의 탐구 교과로 설정되어 있다.<sup>3)</sup> 2021년 검정

- 1) 「2022年3月, 令和3年度教科用図書検定結果の概要」(日本 文部科学省 홈페이지)
- 2)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 출판사 및 집필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출판사, 교과서명, 집필자 등은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検定審査申請書」(2022년5월 令和3年度教科書検定結果公開事業 資料)를 참조해서 작성했다.

### <일본사탐구 출판사 및 집필자 현황>

연번	출판사	교과서명	집필자
1	동경서적	日本史探究	山本博文, 渡邊晃宏
2	실교출판 A	日本史探究	平雅行 外
3	실교출판 B	精選日本史探究 今につなく 未來をえがく	大串潤兒 外
4	청수서원	高等學校 日本史探究	伊藤純郎 外
5	산천출판 A	詳説日本史	佐藤信, 五味文彦, 高埜利彦, 鈴木淳
6	산천출판 B	高校日本史	佐藤信, 五味文彦, 高埜利彦, 鈴木淳
7	제일학습사	高等學校 日本史探究	大橋幸泰 外

### <세계사탐구 출판사 및 집필자 현황>

연번	출판사	교과서명	집필자
1	동경서적	世界史探究	福井憲彦 外
2	실교출판	世界史探究	木畑洋一 外
3	제국서원	新詳世界史探究	桃木至郎 外
4	산천출판 A	詳説世界史	木村靖二, 岸本美緒, 小松久男, 橋場弦
5	산천출판 B	高校世界史	木村靖二, 岸本美緒, 小松久男, 橋場弦
6	산천출판 C	新世界史	羽田正, 岸本美緒, 久保文明, 南川高志
7	제일학습사	高等學校 世界史探究	秋田茂 外

- 3)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교과목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서종진,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과 역사교육의 변화: 고등학교 역사과 개정 학습지도요령을 중심으로」, 서종진 편, 『

발표된 종합교과인 『역사총합』과 『지리총합』이 필수인 반면 탐구 교과는 선택 교과로 설정되었는데, 내용과 형식상 기존의 『일본사 B』를 대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sup>

1989년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성립한 지리역사과는 세계사와 일본사, 그리고 지리 교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세계사 A』·『일본사 A』·『지리 A』는 표준단위 2단위, 『세계사 B』·『일본사 B』·『지리 B』 등은 4단위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중 세계사는 필수, 일본사와 지리는 선택 교과였다. 2018년 세계사와 일본사 체제를 개편하면서 신설된 종합 교과는 필수 2단위, 탐구는 3단위 선택과목이었다.<sup>5)</sup> 교과 성격이나 분량 면에서 보면, A는 종합, B는 탐구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sup>6)</sup> 종합 교과가 세계사와 한국사를 통합하여 필수로 설정한 만큼 차이점도 분명하다.

주목할 점은 필수인 종합과 선택인 탐구 교과가 서로 ‘계열성’의 측면에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탐구 교과는 종합을 필수로 이수한 이후 좀 더 능동적인 심화 학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국근대사 서술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우선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의 한국근대사 서술 실태, 그리고 변화상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특히 2017년도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 B』와 비교하고자 한다. 탐구 교과의 한국근대사 서술 중에서는 조일수호조규와 청일·러일전쟁, 의병전쟁과 한국병탄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sup>7)</sup> 마지막으로 탐구 교과가 가진 한국근대사 서술의 특징을 탐구 교과가 가지고 있는 ‘규정성’과 ‘계열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일본 고등학교 탐구 교과의 한국근대사 서술 실태와 변화상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둘째 탐구 교과의 특징을 통해 이것이 종합 교과, 또는 이전의 교과와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다만, 발표자의 역량 상 두 번째 과제는 목적했던 만큼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토록 하겠다.

## 2. 『일본사탐구』의 한국근대사 서술 실태와 변화

### 1)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서술 실태와 변화

2022년 검정을 통과한 7종의 『일본사탐구』의 조일수호조규 관련 서술은 전체적으로 2017년도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 B』와 비교할 때, 분량에 큰 변화가 없고 내용도 대동소이한 편이다. 다만 일부 교과서에서 용어 사용이나 표현상 개악된 측면이 눈에 띈다. 예컨대 조일수호조규의 원인이 되었던 강화도 사건의 서술에서 윤요호의 침략성과 그 배후에 담긴 제국주의적

세계의 역사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북아역사재단, 2019.

- 4) 『역사총합』은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본사 A』와 성격상 유사하고, 『일본사탐구』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전시기를 포괄하고 있어 『일본사 B』를 대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역사총합』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일본근현대사를 고찰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사 A』와 차별점을 갖는다. 『역사총합』 교과의 특징 및 검정 발표 현황에 대해서는 조건, 「2021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한국 근대사(1890~1910) 서술과 특징」(『한일관계사연구』 76, 2022)을 참조할 수 있다.
- 5) 권오현, 「2017·2018년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사회과 교육의 주요 변화」, 『사회과교육연구』 26-2, 2019, 9~10쪽.
- 6) 서종진,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과 역사교육의 변화: 고등학교 역사과 개정 학습지도요령을 중심으로」, 105쪽.
- 7) 탐구 교과에는 여기서 언급한 것 외에도 한국근대사와 관련된 주제가 적지 않게 담겨 있다. 이 글에서는 논쟁이 되거나 특징적인 주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의도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

<동경서적>

사이고 등이 정부를 떠난 뒤, 정부의 중심이 된 오쿠보노, 1875년, 조선의 강화도 부근에 침입하여 시위운동을 벌인 일본군함에 대한 포격사건(강화도사건)을 계기로, 조선을 강경한 태도로 다그치며, 다음 해 일조수호조규(강화조약)를 체결시켰다.<sup>8)</sup>

<실교출판 B>

1875년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에서 조선군과 교전하자(강화도사건) 이것을 구실로 정부는 조선 정부에 개국을 강요하고, 일조수호조규를 맺었다.<sup>9)</sup>

<산천출판 B>

1875년 일본이 조선 반도 연안에 군함을 파견하여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강화도사건).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 개국을 강요하여, 다음 해, 일조수호조규가 체결, 조선에서 일본의 영사재판권과 관세면제 등을 인정받았다.<sup>10)</sup>

동경서적 『일본사탐구』에는 운요호의 강화도 침략과 약탈 행위를 '시위(示威)'라고 기술했고, 실교출판의 경우에는 강화도 사건을 일본 군함과 조선군의 '교전'으로 기술하면서 침략성을 희석시켰다. 또한 산천출판 B에는 강화도 사건의 원인을 "군함을 파견하여 압력을 가했기 때문"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서술이 기존 『일본사 B』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 개략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실교출판의 2017년 『일본사 B』에는 운요호가 강화도를 '침입'했다고 기술한 바 있고, 산천출판 역시 2017년에는 강화도 사건에 대해 "조선 측을 도발하고 교전하여 포대를 파괴"한 사건으로 기술한 바 있다.

한편 2022년 처음 검정을 통과한 제일학습사 『일본사탐구』의 경우에는 조일수호조규의 배경과 성격을 비교적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강화도 사건에 대해 "조선의 수도 한성에서 가까운 강화도 부근에서, 조선의 영해를 침범하여 측량을 하고 있던 일본의 군함이 포격 받아 교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운요호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지만 강화도 사건이 일본 측의 '침략'에 의해 촉발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 2) 청일전쟁 서술 실태와 변화

『일본사탐구』는 청일전쟁의 개전 원인과 개전 당시 일본군의 침략 행위 역시 제대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청일전쟁은 명백히 일본의 침략적 의도와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 공격으로 인해 촉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당시 역사적 사실을 오해할 수 있는 서술도 담겨 있다.

<동경서적>

일본은 일정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 개혁을 시행하자고 제안하고, 이것을 구실로 철병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정 양국의 대립은 깊어졌다. 일본군은 조선 왕궁을 점거하고, 일본 함대는 풍도 앞 바다에서 청의 함대와 교전했다. 이로써 1894년 7월, 일정전쟁이 시작되고, 조선 반도는 전장이

8) 山本博文 外, 『日本史探究』, 東京書籍, 211쪽.

9) 大串潤兒 外, 『精選日本史探究』, 實教出版, 156쪽.

10) 佐藤信 外, 『高校日本史』, 山川出版, 184쪽.

되었다.<sup>11)</sup>

<실교출판 B>

1894년, 조선에서 악정에 반대하여 봉기한 농민군과 조선정부 사이에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아 출병한 청군에 대하여 일본군도 출병했다. 양국군의 개입을 보고 농민군과 화해한 조선정부가 철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왕궁을 점령하고 친일정권을 세웠으며, 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선전포고를 했다.(일청전쟁)

개전 후 일본은 조선정부에 전쟁협력을 약속받았다. 일본군은 조선 각지에서 식량과 물자를 징발하면서 전쟁을 지속해 갔다.<sup>12)</sup>

<산천출판 B>

청은 조선정부의 요청을 이유로 출병하고, 일본도 청으로부터 출병 통리를 받아 대항하여 출병했다. 그 후 조선의 내정개혁을 둘러싸고 일청 양국은 대립했고, 같은 해 8월, 결국 일본은 청에 선전 포고를 하여,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sup>13)</sup>

우선 청일전쟁의 침략성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은 교과서로 실교출판 교과서를 들 수 있다. 실교출판의 『精選日本史探究』는 일본군의 경복궁 침공을 ‘점령’으로 표현하면서 개전 직후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얻어낸 ‘전쟁협력’ 강요를 ‘전쟁협력을 약속’받은 것으로 기술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서술이 2017년 같은 출판사의 『일본사 B』와 비교할 때 명백히 개악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교출판은 2017년 검정판에서 일본군의 경복궁 침공을 ‘공격’으로 ‘전쟁협력’은 ‘내정간섭과 종속’으로 각각 기술했었다.

동경서적 역시 청일전쟁 개전 초의 침략적 행위를 “조선 왕궁을 점거”했다고 표현했다. 산천출판 A·B, 청수서원, 제일학습사의 경우 모두 일본군의 경복궁 공격을 아예 기술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청일전쟁의 개전 원인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둘러싼 청일 양국 간의 갈등으로 서술한 교과서도 눈에 띈다. 산천출판은 개전 원인을, “조선의 내정개혁을 둘러싸고 일청 양국”이 대립한 결과로 기술했다. 이러한 서술은 학생들에게 일본과 청이 조선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이것이 폭발하여 전쟁으로 발전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러일전쟁 서술 실태 및 변화

러일전쟁 개전 당시 침략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일본사탐구』 교과서가 기술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선전포고 이전 제물포의 러시아 함대에 대한 선제공격과 인천 무단 상륙, 이어진 경복궁 공격 등에 관해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러일전쟁 직후 한국 정부를 강요해서 맺은 「한일의정서」와 전쟁 당시 한국인 강제 동원에 관해서도 이전과 비교할 때 개악된 측면이 확인된다.

<실교출판 B>

일본은 개전을 틈타 한국에 파병하고, 한국정부의 중립선언을 무시한 채 한성을 제압했으며, 일한의정서와 제1차 일한협약을 체결시켰다.

11) 山本博文 外, 『日本史探究』, 東京書籍,  
 12) 大串潤兒 外, 『精選日本史探究』, 實教出版, 165쪽.  
 13) 佐藤信 外, 『高校日本史』, 山川出版, 194~195쪽.

(사진설명) 일한의정서로 일본군은 한국 내 주류권을 얻은 후, 한국 사람들을 인부로 동원했다.<sup>14)</sup>

#### <산천출판 A>

일본과 러시아의 교섭은 1904년 초에 결렬되었고, 같은 해 2월, 양국은 서로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일로전쟁이 시작되었다. (중략)

1905년 9월 미국 포츠머스에서 일본 전권 고무라 슈타로와 러시아 전권 비테가 강화조약(포츠머스조약)에 조인했다.

(側註 질문) 일로전쟁은 근린 제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sup>15)</sup>

우선, 실교출판은 러일전쟁 관련 부분에서 당시 한국 정부와 「한일의정서」 등 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술과 함께 “일본군은 한국 내 주류권을 얻은 후, 한국 사람들을 인부로 동원했다”고 기술하였다. 일면 사실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7년 실교출판의 검정본과 비교하면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교출판은 2017년 검정판에서 ‘체결’을 ‘강요’로, ‘동원’을 ‘강제동원’으로 기술했던 것이다. 이전 교과서에서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게 전쟁 수행을 강제했던 사실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군의 한국 내 주류권 획득은 당시 한국주차군사령부의 한성 설치와 주둔을 일컫는데 이것은 명백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한일의정서」에 강요된 것은 군용지를 무단으로 점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 일본군의 주둔을 명문화 한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둔했던 한국주차군은 이미 1903년 12월 설치된 한국주차대사령부를 계승한 것으로 한국을 무력 점령하고 전시 병참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무단으로 주둔하고 있던 침략군이었다. 이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주둔인양 기술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울러 산천출판 교과서에는 側註 형태로 “일로전쟁은 근린 제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수록했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의 승리가 아시아 여러 민족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식의 서술 태도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학생들에게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참화와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내용이다.

#### 4) 의병전쟁 · 한국병탄 서술 실태 및 변화

의병전쟁과 한국병탄 등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에 대한 서술 역시 침략성 · 강제성 · 불법성 등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 특히 의병을 무력으로 탄압하여 수많은 살상을 저지른 것과 ‘한일병합조약’을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 <동경서적>

이에 대하여 한국 국민 사이에서 격렬한 저항(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했다.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909년에는 하얼빈에서 전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민족운동의 지도자 안중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조약에 의해, 한국을 병합했다.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고, 초대 총독으로는 육군 대라우치 마사타케가 임명되었다.<sup>16)</sup>

14) 大串潤兒 外, 『精選日本史探究』, 實教出版, 168쪽.

15) 佐藤信 外, 『詳説日本史』, 山川出版, 263쪽.

16) 山本博文 外, 『日本史探究』, 東京書籍, 236쪽.

<실교출판 B>

일본은 미국·영국 등 열강에게 한국 지배를 인정받자 한국에 제2차 일한협약을 강요하여 보호국으로 하고, 통감부를 두었다. 한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의병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중략)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각지의 의병운동을 탄압하고, 1910년, 한국병합조약을 체결시켜,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했다(한국병합).<sup>17)</sup>

<산천출판 B>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저항(의병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09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에게 암살당했다. 다음해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한국에 조인시켜 수도 한성을 경성으로 고치고, 조선총독부를 두어 식민지 지배를 시작했다.<sup>18)</sup>

동경서적은 의병전쟁을 ‘격렬한 저항(의병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본은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했다”고만 기술했다. 한국병탄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조약에 의해”라는 단서를 붙였을 뿐 한국 식민지화 과정의 침략성과 강제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실교출판은 의병전쟁 탄압에 대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각지의 의병운동을 탄압”했다고 기술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 실상을 적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병탄에 대해서는 “한국 병합조약을 체결시켜,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했다”고만 적고 있다.

산천출판 교과서에는 “일본에 대한 저항(의병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일본군이 의병을 무자비하게 살상한 것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한국병탄 관련 서술 역시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한국에 조인시켜 수도 한성을 경성으로 고치고”라고만 기술했다.

한편, 실교출판은 2017년 『일본사 B』 교과서에서 ‘이토 히로부미 대사의 한국보호조약 강요’, ‘한국의 보호국화와 항일운동’ 등의 내용을 수록한 바 있다. 산천출판 역시 2017년 『일본사 B』에서 의병에 대한 탄압과 한국 병탄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한 바 있다. 한국 식민지화와 관련한 서술 태도가 개악되었음을 보여준다.

### 3. 『세계사탐구』의 한국근대사 서술 실태와 변화

#### 1)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서술 실태와 변화

2022년에 검정을 통과한 『세계사탐구』 일부 교과서에는 조일수호조규의 원인이 된 강화도 사건이 조선 측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교과서에서 조일수호조규와 그에 수반한 부록 및 통상장정의 불평등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산천출판 B>

조선은 구미 제국의 개국 요구를 거절하고 있었는데, 1875년 일본이 일으킨 강화도사건을 계기로, 다음해에는 불평등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 부산 등 3개항을 개항했다.

<그림 설명> 강화도사건: 조일 간의 긴장이 높아지던 1875년 조선 해안에서 시위운동 중인 일본 군함이 조선 포대의 공격을 받은 것 때문에, 강화도를 점령했다.<sup>19)</sup>

17) 大串潤兒 外, 『精選日本史探究』, 實教出版, 169쪽.

18) 佐藤信 外, 『高校日本史』, 山川出版, 199~200쪽.

산천출판의 『高校世界史』에는 조일수호조규가 1875년 “일본이 일으킨 강화도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쪽에 그려진 ‘그림 설명’에는 “1875년 조선 해안에서 시위운동 중인 일본 군함이 조선 포대의 공격을 받은 것 때문에, 강화도를 점령했다”라고 하면서, 운요호의 침략적 행위를 ‘시위’로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이 조선 포대의 공격 때문이며, 그 결과로 강화도를 ‘점령’했다고 적고 있다. 실교출판 역시 강화도 사건의 배경을 조선 측의 포격에 의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산천출판은 2017년 『일본사 B』에서 해당 사건을 “일본 군함이 조선 연안에서 일으킨 도발적인 행위에 의해 강화도 부근에서 양국이 충돌한 사건”으로 기술한 바 있다.

반면 동경서적은 강화도 사건이 메이지 정부의 포함외교에 의한 것이라고 기술했고, 제일학습사의 경우에는 강화도 사건의 원인을 ‘군함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2) 청일전쟁 서술 실태와 변화

『세계사탐구』의 청일전쟁 관련 서술 태도 역시 『일본사탐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전 당시 침략성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개전 원인을 조선의 개혁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실교출판>

조선 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하고, 일본도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출병했는데, 농민군이 정부와 화의를 맺자 양국의 개입 구실은 없어졌다. 이후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청에게 제안했으나, 청은 이를 거부했고, 일청 양국은 군대 배비를 강화했다. 그리고 일본은 청의 북양함대를 공격하여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sup>20)</sup>

### <산천출판 A>

1894년 조선에서 동학의 난이 발생하자 일청 양국이 출병하여 일청전쟁이 발발했다. (중략)  
일본은 동시에 조선반도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여 남하하는 러시아와 대립이 깊어졌다.<sup>21)</sup>

실교출판은 청일전쟁 개전 원인을 청이 조선의 내정개혁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기술했다. 물론 “농민군이 정부와 화의를 맺자 양국의 개입 구실”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공동으로 시행할 것으로 청에게 제안했음에도 청이 이를 거부해서 양국군의 병력이 증강되었고 이것이 개전을 촉발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전 초기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 공격 등 침략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산천출판 A는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와 갈등에 대해 “조선반도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여 남하하는 러시아와 대립이 깊어졌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산천출판은 2017년 교과서에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이라는 명목과는 반대로 일청전쟁 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여 대륙침략의 발판을 구축”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침략’이라는 단어는 빼고 ‘진출’을 사용한 부분이 눈에 띈다. 명백히 의도성이 있는 서술로 보인다. 단, 산천출판 C 교과서에는 2017년과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19) 木村靖二 外, 『高校世界史』, 山川出版, 198~199쪽.

20) 木畑洋一 外, 『世界史探究』, 實教出版, 294~295쪽.

21) 木村靖二 外, 『詳説世界史』, 山泉出版, 257쪽.

대부분의 교과서는 청일전쟁 개전 당시 일본군의 침략 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일학습사는 청일전쟁을 ‘책봉 조공 관계’의 해체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조선이 독립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 3) 러일전쟁 서술 실태 및 변화

『세계사탐구』의 러일전쟁 서술 태도 역시 청일전쟁과 유사하다. 개전 당시 일본군의 침략성과 무단성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선전포고 이전 러시아 함대에 대한 공격과 인천 무단 상륙, 경복궁 공격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가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다는 사실이다.

#### <실교출판>

<일러전쟁의 국제적 영향> 당시 일러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아시아 각지에서 백인에 대한 유색인종, 또는 서양에 대한 동양의 승리로 여겨졌다.<sup>22)</sup>

#### <제국서원>

<일러전쟁의 반향> 일러전쟁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결정지었고, 전장이 된 청조 영역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한편으로 식민지 지배에 반발하는 아시아 각지에서는 열강에 승리한 일본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sup>23)</sup>

#### <산천출판 B>

일본의 승리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적 자세를 강화했다. 1906년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07년에는 일러협약, 영리협상을 체결하여 대륙에 대한 진출을 추진했다.<sup>24)</sup>

실교출판은 일본의 승리를 “아시아 각지에서 백인에 대한 유색인종, 또는 서양에 대한 동양의 승리”로 여겼다고 기술했고, 제국서원은 “아시아 각지에서는 열강에 승리한 일본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적었다. 산천출판 B에는 일본의 승리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기술되었다.

이렇듯 러일전쟁을 인종과 문명 간 대결로 치환해서 ‘아시아의 승리’로 기술하는 관점은 당시 전쟁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승리가 아시아 여러 민족국가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주었다는 식의 서술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표피적인 접근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에게 당시 전쟁의 침략적 본질과 피해 실상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게 한다.

러일전쟁의 승리는 당시 일본 정부 입장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수많은 참전 군인들의 피해가 있었고 일본 자국 내 경제 역시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과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아시아 여러 민족국가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식의 서술 역시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본질을 호도하는 서술에 다름 아니다.

한편, 제국서원은 러일전쟁 당시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제2인터내셔널의 반전 여론을 언급했고, 산천출판 B·C 교과서는 전쟁 승리 후 일본이 “제국주의적 자세를 강화했다”, “제국주의

22) 木畑洋一 外, 『世界史探究』, 實教出版, 297쪽.

23) 桃木至郎 外, 『新詳世界史探究』, 帝國書院, 261쪽.

24) 木村靖二 外, 『高校世界史』, 山川出版, 211쪽.

적 진출을 추진했다” 기술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서술이지만, ‘강화’, ‘진출’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침략성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 4) 의병전쟁·한국병탄 서술 실태 및 변화

일부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는 한국병탄 이후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정책을 ‘강권적 지배’, 또는 ‘엄격한 통치’라는 표현을 쓴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렇듯 식민지 지배정책이 강압적이었다는 것을 명시하면서도 그와 함께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함께 기술한 점은 여전히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근대화’는 식민지 지배 정책의 부산물로 이른바 ‘식민지적 근대’의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일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 <산천출판 A>

일본은 조선 지배에 대한 열강의 묵인 아래 1910년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로 했다.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서울(경성)에 두고, 헌병을 이용한 강권적 지배(무단통치) 아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갔다.<sup>25)</sup>

##### <산천출판 B>

일본은 일러전쟁 개시 이후 3차례에 걸친 일한협약으로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을 보호국화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무장항일투쟁(의병투쟁)이 일어났으나 일본군에 진압되었다. 일본은 열강의 묵인 아래 1910년 한국병합조약으로 한국을 병합하고, 조선총독부를 서울(경성)에 두고, 엄격한 통치 아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sup>26)</sup>

산천출판 A의 경우 한국병탄 과정에 대한 강제성과 불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열강의 묵인 아래”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을 병합’하는 행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제법 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인식을 준다. 병탄 이후 1910년대 무단통치에 대해서도 “헌병을 이용한 강권적 지배”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후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갔다는 기술을 통해 강압적 지배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에 근대화가 실현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산천출판 B의 경우는 의병전쟁을 ‘무장항일투쟁(의병투쟁)’이라고 명시했으나 일본군에 ‘진압’되었다고만 기술하여 진압과정의 강압성과 피해의 참상을 알 수 없다. 산천출판 B 역시 “열강의 묵인 아래 1910년 한국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엄격한 통치 아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고 하는 점도 산천출판 A와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통해 조선을 식민지화 하고 이후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는 긍정적 시각을 보여준다.

한국병탄 부분을 이전 검정 교과서와 비교해 보자. 동경서적은 2017년 한국병탄에 대해 “한국병합을 시행”했다고만 기술했으나, 2022년에는 “군사적 압력을 가해 한국병합을 단행”했다고 적었다. 제국서원은 2017년과 2022년 모두 “1910년 일본은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서 마치 한국 측의 희망에 따르는 것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한국병합을 강행하였다”라고 서술하였다. 한국 병탄의 강압성과 기만성을 함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일학습사는 2022년 교과서에서 병탄 이후 “강압적 통치 아래 저항운동을 엄격히 탄압했다”라고 기술하였다.

25) 木村靖二 外, 『詳説世界史』, 山泉出版, 272쪽.

26) 木村靖二 外, 『高校世界史』, 山川出版, 211쪽.

#### 4. 고등학교 ‘탐구’ 교과의 한국근대사 서술 특징

2018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탐구’ 교과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생에 걸쳐 탐구를 깊게 하는 미래의 창조자”가 되도록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정되었다.<sup>27)</sup> 무엇보다 종합 교과를 이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문제를 탐구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두 교과 간 계열성을 염두에 둔 편제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 발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는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명시되어 있는 탐구 교과목의 성격이다.

『역사종합』 학습을 통해 익힌 자질과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지리적 조건이나 세계 역사와 관련지으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동시에, 현상의 의미나 의의, 전통과 문화의 특색 등을 고찰하고, 보다 좋은 사회의 실현을 시야에 두고, 역사적 경위를 바탕으로 현대 일본의 과제를 탐구하는 과목이다.<sup>28)</sup>

종합 교과와 심화·발전된 학습을 염두에 두고 탐구 교과가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탐구 과목 자체에 대한 성격과 더불어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의 성격은 각각 아래와 같이 적시되었다.

<표 3> 『학습지도요령 해설』 중 탐구 과목 성격 관련 내용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일본사탐구』는 『역사종합』을 바탕으로 기존의 『일본사 A』, 『일본사 B』의 목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심화하고, 각 시대의 전개와 관련된 개념 등을 활용해서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여, 역사에 나타나는 과제를 파악하고, 지역이나 일본, 세계 역사의 관계를 토대로 현대 일본의 여러 가지 과제와 전망을 탐구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세계사탐구』는 『역사종합』의 학습을 바탕으로 종전의 『세계사 A』, 『세계사 B』의 목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여러 지역의 역사적 특질의 형성, 여러 지역의 교류와 재편, 여러 지역의 결합과 변용이라는 구성에 따라 세계 역사의 큰 틀과 전개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고, 지구 세계의 과제와 그 전망을 탐구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탐구 교과는 종합 교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역사종합』을 학습한 학습자가 종합의 내용 위에 역사 전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에 따른 과제와 전망까지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설정되었다.

탐구 교과는 계열성 측면에서 볼 때 종합 교과를 발전·심화한 것이었으며, 201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목적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한 교과이기도 했다.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 개념의 강조였는데, 탐구 교과야말로 액티브 러닝이 구현된 교과였던 것이다.<sup>29)</sup>

27) 「第4節 日本史探求」, 『地理歴史編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解説』(日本 文部科学省 홈페이지)

28) 『地理歴史編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解説』(日本 文部科学省 홈페이지)

『일본사탐구』의 「학습지도요령 해설」 중 ‘2. 내용과 그 취급’ 항목에는 탐구 과목이 총합과 어떠한 계열성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 2. 내용과 그 취급 - 『일본사탐구』의 학습 구성 - ① 대항목의 구성

『일본사탐구』는 필수 이수 과목인 「역사총합」의 학습이 전제가 된다. 「역사총합」에서는 자료에서 정보를 읽고 정리하는 능력의 육성과 의미·관심과 의문점을 바탕으로 학습 사항에 전망을 가지고 질문을 표현하는 학습(중략) 등 ‘역사 학습 방법’을 습득하는 학습이 설정되어 있다.

『일본사탐구』는 이러한 “『역사총합』에서 학습한 역사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내용의 취급)을 근거로(중략) 『역사총합』에서 기른 ‘역사 학습 방법’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질문과 가설을 세워 역사를 고찰·표현하고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학습, 나아가 대항목 D의 근현대 학습에서는 『역사총합』에서 습득한 개념과 이 과목의 전근대적 학습의 연결, 전근대 학습에서 성장시킨 역사를 고찰하는 힘을 활용하여 역사에 관련된 여러 사건의 상호 관계와, 지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관계 등에 대해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하고, 나아가 현대 일본의 과제에 대해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구상하는 학습을 설정하고 있다.<sup>30)</sup>

위에 따르면, 총합은 탐구 교과 학습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총합 교과는 “정보를 읽고 정리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등 이른바 역사 학습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탐구 교과는 그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를 심화 학습하고 나아가 전근대와 근대, 세계와 일본 등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능력을 함양토록 하는 교과였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근대사 서술과 관련하여 총합과 탐구 교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특히 청일·러일전쟁과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에 대해서 「학습지도요령」이 명시한 총합과 탐구 교과와 지침을 살펴보자.

## 『역사총합』 - 2. 내용과 취급 - B. 근대화와 우리

청일·러일전쟁에 대해서는 청일전쟁과 대만의 식민지화, 삼국 간섭, 러시아의 중국·조선의 진출, 러일전쟁과 한국 병합 등을 다루고, 열강의 아시아 진출의 움직임이나 중국과 조선의 동향을 관련지어 보면서 일본의 동향을 다룬다. 그 때, 국민의 대외의식 변화와 함께 일본의 근대화나 대외적인 태도를, 아시아 근린제국들이 받아들였던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특히, 러일전쟁에서의 승리가 아시아 민족들의 독립이나 근대화 운동에 자극을 준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열강의 진출과 식민지의 형성, 청일·러일전쟁의 학습에 대해서는 소항목의 주제를 기초로 한 학습상의 과제(소항목 전체에 관련된 질문)를 바탕으로 소항목의 목적에 의거한 학습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추이나 전개를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나아가 현상을 비교하고 관련지어서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는 등 현상 각각을 학습할 때 단계적으로 과제(질문)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나라나 지역의 동향을 비교하거나 서로 관련지어 보는 학습을 통해서 제국주의 정책의 특징, 열강 간의 관계 변용 등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표현함으로써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과 아시아 국가들의 변용을 이해할 수 있다.<sup>31)</sup>

29) 액티브 러닝의 내용에 대해서는 권오현, 「2017·2018년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사회과 교육의 주요 변화」, 14~15쪽 참조.

30)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자료집-고등학교 지리 역사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243~244쪽.

31)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자료집-고등학교 지리 역사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193~194쪽.

『일본사탐구』 - 2. 내용과 취급 - D. 근현대의 지역·일본과 세계

‘현상의 의미나 의의, 관계성 등을 고찰하는 학습’

청일·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전쟁이 끼친 영향 등에 주목해서 이 시기의 전쟁의 양상이나 배경,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의 변화 등에 대해서 추이나 전개를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각각의 강화 조건 등으로 형성되는 국제 질서와 우리나라의 관계, 이웃 국가들, 여러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한다. 나아가 청일·러일전쟁 전후 조약 개정의 완성, 한국 병합이나 만주(현재의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세력의 확장 등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를 진행시킨 것이나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적인 협조 체제에서 일본의 입장과 대외 정책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예를 들면 “당시의 국민이나 주변 여러 지역은 일본의 대외 진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와 같은 의미나 의의, 관계성을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의회의 지지 한편 반전론도 존재했던 것, 또 전쟁의 승리가 강화 후의 항의 행동 등을 포함해서 국민으로서의 자각이나 의식의 고조를 초래한 것을 고찰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다룰 때는 국민들의 대외 의식의 변화를 다루는 동시에, 아시아 이웃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대외 자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도록 지도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러일전쟁의 승리가 아시아 민족들의 독립이나 근대화 운동에 자극을 준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sup>32)</sup>

『세계사탐구』 - 2. 내용과 그 취급 - D. 여러 지역의 결합·변용

(3) 제국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고양

제2차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제국의 경쟁에 대해서는, 최신의 과학 기술과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제2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서구 국가에서는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산업 구조가 변화된 것을 다룬다. 또 열강 제국들의 식민지 획득은 남아프리카 전쟁이나 러일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일련의 대규모 전쟁을 수반해서 전개된 것,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애국주의적 국민의식의 고양이나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변혁에 대해서는, 열강 제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하여 무장 봉기나 반란 등의 저항 운동이 일어난 반면, 서구형의 교육을 받고 새롭게 행정관, 법률가, 교사, 실업가로서 활약하는 사람들도 나타난 것을 다룬다.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공업화 진전과 함께, 제국주의의 시대였으면서 독자적인 아시아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등 경제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sup>33)</sup>

위는 「학습지도요령 해설」 중에서 『역사총합』과 『일본사탐구』 및 『세계사탐구』의 제2장 ‘내용과 취급’ 가운데 동일한 시기의 서술 지침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총합 교과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탐구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이웃 국가를 포함한 국제적 관계성 고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총합 교과와 탐구 교과는 확실한 縱的 系列性的 체계 아래 제작되었던 것이다. 다만, 실제 교과서 내용 중에서 이러한 종적 계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한국근대사의 몇몇 주제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sup>34)</sup>

32)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자료집-고등학교 지리 역사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311쪽.

33)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자료집-고등학교 지리 역사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394-395쪽.

34) 학습지도요령과 총합 및 탐구 교과에 대한 내용 분석 외에도 검정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의견서」, 「검정의견서」 등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과정에서 추가하겠다.

##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2022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탐구 교과 중 한국근대사 부분 서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일수호조규와 청일·러일전쟁, 그리고 한국병탄을 주제로 관련 서술 실태를 제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언급하였다. 대체로 탐구 교과의 한국근대사 부분은 이전과 비교할 때 분량은 조금 줄거나 거의 같았으며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일부 교과서에서 한반도 침략의 강제성과 무단성이 희석되는 등 개악된 측면이 확인되었다.

교과서 내용 분석과 더불어 탐구 교과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했다. 탐구 교과는 총합 교과를 학습한 것을 전제로 하여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역사적 '탐구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실제 교과서 내용 중에 총합과 탐구 교과의 차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 또는 비평은 학문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문적인 분석의 경우에도 가급적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검정 교과서를 분석할 때도 역시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일본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고 침략전쟁에 동원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양국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또한 과거 교과서 용어 및 서술 내용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던 전력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 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역사적 인식차를 좁혀보려는 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 참고문헌

<2022년도 검정 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日本史探究』, 『世界史探究』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

地理歴史編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解説

平成30年改訂の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に関するQnA(지리역사과)

2022年3月 令和3年度教科用図書検定結果の概要

2022年5月 令和3年度教科書検定結果公開事業 資料

권오현, 「2017년·2018년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사회과 교육의 주요 변화」, 『사회과교육 연구』 26-2, 2019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자료집-고등학교 지리 역사 편-』, 2018

서종진,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과 역사교육의 변화: 고등학교 역사과 개정 학습지도요령을 중심으로」, 서종진 편, 『세계의 역사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북아역사재단, 2019.

- 서종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역사총합’의 식민지기 한국 관련 기술 내용 검토」, 『한일관계사학회』 76, 2022
- 서현주, 「일본 고교 역사교과목 개편과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서술」, 『한일관계사학회』 76, 2022
- 양정현, 「교과서 구성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 제도의 규정성」, 『역사교육연구』 2, 2005
- 양정현, 「2007, 201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논리와 계열성」, 『역사교육』 120, 2011
- 양호환, 「‘계열성’ 논의의 쟁점과 변질」, 『서울대 교육연구저널』 28, 2019
- 정선영, 「사회과 역사내용의 계열성 연구」, 『사회과교육』 20, 1987
- 조건, 「2021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한국 근대사(1890~1910) 서술과 특징」, 『한일관계사학회』 76, 2022

[ 발표 3 ]

---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드러난  
조선 식민지 지배 기술과 그 특징**  
—— ‘역사종합’을 중심으로 ——

---

가토 게이키  
(히토쓰바시대)



##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드러난 조선 식민지 지배 기술과 그 특징 —— ‘역사종합’을 중심으로 ——

가토 게이키(加藤圭木)

### 머리말

본 보고의 목적은 2022 년도부터 사용이 시작된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종합’에 드러난 조선 식민지 지배 기술을 검토하는 데 있다.

‘역사종합’은 금년도에 신설된 필수 과목으로 종래의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합한 과목이다(‘역사종합’에 이어 선택 과목인 ‘세계사탐구’ ‘일본사탐구’를 학습하게 된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18 년 고시) 해설」(이하 “학습지도요령해설”이라 한다)에서는 이 과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근현대사의 변화에 관한 제 현상에 대하여 세계와 그 속의 일본을 폭넓게 상호적 시야에서 이해하고 자료를 활용하면서 역사 학습법을 습득하여 현대적 제반 과제의 형성과 관련된 근현대사를 고찰, 구상하는 과목[후략]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세계 속의 일본을 이해하는 이 과목은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고교생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종합’에서는 “현대적 제반 과제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의 큰 변화”로 ‘근대화’,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중화’, ‘글로벌화’에 주목하고 이에 근거해 구성하고 있다(「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18 년고시)」 및 「학습지도요령해설」).

본 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꼽자면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인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중화’가 이에 해당한다. 이 짜임새가 조선 식민지 지배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고찰하겠다.

검토 대상은 현재 발행된 11 종이다(데이코쿠서원(帝国書院) 『명해(明解) 역사종합』, 메이세이샤(明成社) 『우리들의 역사종합(私たちの歴史総合)』, 다이이치학습사(第一学習社) 『고등학교 역사종합』,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신 역사종합: 과거와의 대화, 이어지는 미래(高等学校新歴史総合: 過去との対話、つなぐ未来)』,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 『역사종합: 근대에서 현대로(歴史総合: 近代から現代へ)』, 야마카와출판사 『현대의 역사종합: 보기·해석하기·생각하기(現代の歴史総合: みる・読みとく・考える)』, 야마카와출판사 『우리들의 역사: 일본에서 세계로(わたしたちの歴史: 日本から世界へ)』, 도쿄서적(東京書籍) 『신선(新選) 역사종합』, 도쿄서적 『상해(詳解) 역사종합』, 짓쿄출판(美教出版) 『상술(詳述) 역사종합』, 짓쿄출판 『역사종합』, 시미즈서원(清水書院) 『우리들의 역사종합(私たちの歴史総合)』). 교과서를 전부 골고루 분석하기 어려운 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

아울러 본 보고에서는 다른 보고와의 중복을 고려해 교과서 검정에서 공격 대상이

된 전시체제기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다루지 않는다.

### 1. 조선의 식민지화 관련 기술

‘역사종합’ 교과서 대부분이 조선 식민지화 과정을 의병투쟁이나 ‘헤이그밀사사건’ 등과 같은 조선 측 저항과 그에 대한 일본 측의 탄압을 언급한 다음 ‘한국병합’을 기술하고 있다.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대해 ‘역사종합’ 교과서는 대체로 기존 교과서(이전의 ‘일본사 A’, ‘일본사 B’ 등)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대학생에게 물어본 결과 고교시절 조선 식민지화를 배웠지만 소감이라고 해봤자 ‘영토가 확장되었다’ 정도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 식민지화의 폭력성, 문제성을 학생에게 충분히 전달하고자 한다면 나름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시미즈서원 『우리들의 역사종합』은 맥켄지(Frederick Arthur Mackenzie)의 『의병투쟁에서 3·1 독립운동(Korea's Fight for Freedom)』을 인용해 조선인 학살 상황을 제시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넣어 주목된다(45 쪽). 단순한 ‘통사’ 서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료를 인용해 식민지화의 실태를 생각해 볼 실마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교과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봄직한 방법이다.

또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역사종합』은 러일전쟁 중 체결된 「일한협정서(日韓議定書)」로 일본이 토지 수용을 강제로 인정시켰다고 기술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91 쪽).

식민지화의 폭력성이 학생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채용하고 있는 ‘한국병합’이라는 용어와도 관련 지어 고민해 봐야 한다(아울러 우파 교과서인 메이세이샤 『우리들의 역사종합』은 ‘일한병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근처에는 일본과 한국이 ‘대등’하게 합병되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여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역사학 연구에서는 홑낫표를 붙여 「한국병합」이라 쓰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 기술도 이를 따라 ‘한국병합’이라는 용어를 채용하고 있는 듯하다(단, 교과서에서는 홑낫표를 떼어 쓰고 있다).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폐멸, 강제적인 식민지화라는 실태를 덮기 위해 일본 측이 만들어낸 용어다. 따라서 그대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한국병합’이라는 용어는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이 고교생에게 전달되지 않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비단 교과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며 일본의 역사학 연구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했다고 명확히 기술한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역사종합』과 야마카와출판사 『역사종합: 근대에서 현대로』는 주목된다. 타사의 교과서도 저항을 억누르고 식민지화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기술하고는 있으나 특히 이들 교과서 기술은 강제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무효성이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까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조선 식민지화의 역사가 배치된 장이다. 대부분의 교과서

는 러일전쟁 이후의 동아시아사를 서술하는 절에서 ‘한국병합’을 다루고 있다. 도쿄서적 『신선 역사종합』은 절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의 근대’에 배치하고 영국의 지배와 일본의 지배를 나란히 기술하고 있다. 매일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는 구미의 식민지 지배는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별 특별한 느낌이 없었다. 일본의 ‘한국병합’은 구미만큼 가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영국의 지배와 나란히 기술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한편 ‘일본만이 아니었고 구미도 죄다 똑같았다’라는 식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인식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점과 관련해 조선 식민지화를 다룬 페이지 직후에 「제국주의와 그 영향」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배치한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역사종합』은 효과적이다. 열강의 제국주의 분할 양상과 함께 ‘신침’으로 그 세계에 발을 들인 일본을 그린 비고(Georges Ferdinand Bigot)의 풍자화를 소개하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그 뒤로 일본이 대상은 아니나 「‘문명화 사명’과 식민지 지배」라는 제목의 칼럼이 이어진다.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분석한 칼럼이다(108~109 쪽).

덧붙여 여러 교과서가 경복궁 앞에 세워진 조선총독부 청사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야마카와출판사 『우리들의 역사: 일본에서 세계로』는 “일본은 왜 이곳에 총독부를 세웠을까?”(59 쪽)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효 활용이 가능한 교재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여러 교과서가 인도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네루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코쿠서원 『명해 역사종합』은 네루가 러일전쟁의 ‘일본의 승리’에 기대를 걸었지만 일본이 ‘침략적 제국주의국가’의 일원이 되어 조선이 ‘쓰디쓴 결과’를 맞본 상황을 목격하고는 실망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79 쪽). 이는 「학습지도요령해설」의 “특히 러일전쟁에서의 승리가 아시아 민족들의 독립과 근대화 운동에 자극을 주었다는 점을 일깨울 것”(150~151 쪽)이라는 기술에 대응한 것이라 보인다. 이러한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인식은 러일전쟁의 침략성을 은폐한다. 데이코쿠서원 『명해 역사종합』의 위 기술은 초반에는 일본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그에 배신당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역사인식을 상대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데이코쿠서원 『명해 역사종합』은 베트남의 판보이쩌우가 일본에 실망한 모습을 칼럼 「아시아 국가들의 기대와 실망」에서 소개하고 있다(79 쪽).

안중근에 관해서도 많은 교과서가 언급하고 있다. 특히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역사종합』의 “의병투쟁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안중근”이라는 기술은 두드러진다. 이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해 공격하는 일본의 일부 주장에 대항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 짓코출판 『상술 역사종합』은 측주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소개하고 있다(107 쪽). ‘테러리스트’라는 시선에 맞서 이처럼 안중근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항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우과 교과서인 메이세이사 『우리들의 역사종합』은 측주로 지바 도시치(千葉十七)가 안중근의 “동양평화 사상에 감명을 받아” 안중근을 공양한 에피소드를 적고 있다. 그리고 “안과 지바의 우정의 증표로 지바의 보리사에 현창비가 세워졌다”라고 쓰고 현창비 사진을 실었다(65 쪽). 이 기술의 의도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안중근의 일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어찌면 ‘우정’ 이야기로 수렴하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다.

## 2. 조선 지배의 실태

‘역사종합’ 교과서에는 전반적으로 식민지 지배 방식에 관한 기술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도쿄서적 『상해 역사종합』과 짓교출판 『상설 역사종합』은 조선 식민지 지배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겠다.

일본의 식민지에는 타이완총독부, 조선총독부라는 통치 기관이 설치되었고 각각의 장이 입법권을 포함한 큰 권한을 가지면서 본국의 제국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일부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또 식민지에서는 사람들에게 선거권도 부여되지 않았고 제국의회에 의원을 낼 수 없었다. 총독은 당초 모두 군인으로 특히 조선에서는 헌병이 경찰행정을 담당하는 상태가 제 1 차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지배 지역에서는 복수의 법 체계가 병존했다. 또 식민지에서는 초등교육의 정비가 우선되어 고등교육기관의 설치는 늦어졌다.

경제적으로는 타이완은 쌀·설탕 등, 조선은 쌀 등의 공급지로 규정되어 타이완계 당업에 일본 기업이 진출하는 등 일본 본국과의 경제적 결속은 강화되었다(81 쪽).

식민지 지배의 군사적 지배라는 성질, 법적 구조를 간결하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기술하고 있다. 한편 “초등교육의 정비가 우선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일본은 교육을 정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점은 문제다. 또 동화 교육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과제다. 경제 지배에 대해서는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기술이 없으며 또 식민지주제나 조선 민중의 빈곤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꺼림칙하다.

다음으로 짓교출판 『상설 역사종합』의 1910 년대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겠다.

병합 후 일본은 민족운동을 철저히 탄압했고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 ‘동화’ 교육을 시행했다. 또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권의 확립과 지세 징수의 안정화를 꾀했다. 통치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관습에까지 개변(改變)이 미치자 사람들의 불만은 쌓여 갔다.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깊이 있는 기술이 아쉬운 대목이다. 또 생활관습의 개변도 중요하나 단순히 관습에 개입한 탓에 사람들의 불만이 쌓인 것은 아닐 것이다. 헌병경찰제도 등 군사 지배의 실태를 좀더 파고들 필요가 있다.

이들 교과서 이외는 대체로 간단한 기술에 그치고 있으나 토지조사사업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데이코쿠서원은 토지조사사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토지소유권과 납세액의 확정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조사. 이로 인해 많은 조선인 소작농이 제반 권리와 소작권을 잃으면서 일본인 지주에게 토지가 집중하게 되었다. (79 쪽)

또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역사종합』은 “또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해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많은 조선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았다”(107 쪽)라고 기술하려 했으나 검정을 거치면서 “또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토지를 잃고 소작인이 된 농민도 나왔다”로 고쳐졌다.

아울러 토지조사사업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은 꽤 난도가 높다. 따라서 농민 생활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료를 인용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에 의한 경제 지배, 수탈을 논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 하 민중 생활의 실태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해주며 또 재일 조선인의 형성 경위를 이해할 때도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재일 조선인을 ‘자발적’ 이민으로 간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 배경에 존재하는 식민지 지배가 낳은 빈곤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도쿄서적 『상해 역사종합』의 “한국병합 이후 경제적 풍요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오는 조선인이 증가했다”(115 쪽)라는 기술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을 불가시화하는 듯이 보인다.

이어서 3·1 운동에 대해 검토하겠다. 우선 전체적으로 1910년대 지배 정책에 관한 기술이 드문 데다 3·1 운동이 ‘민족자결’의 국제적 조류에 영향을 받았다는 기술 방식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운동 배경에 존재했던 조선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을 찾아내기 어렵다. 운동의 외재적 요인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3·1 운동의 기술 방식으로는 운동의 전개와 탄압 양상을 간결하게 기술하면서 많은 교과서가 「독립선언」을 인용하고 있다. 사료를 조선인 측의 언어로 읽히는 것은 학습적으로 효과가 크다. 또 유관순을 언급한 교과서도 있는데(짓교출판 『상술 역사종합』,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역사종합』) 이처럼 운동에 참여한 구체적인 인물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덧붙여 다이이치학습사 『고등학교 역사종합』은 “그녀[유관순]도 근대적 여성 교육을 받았다”라고 적고 “유관순 등 3·1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학생들은 근대적 교육을 받는 가운데 어떠한 사명감을 품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요한 질문이나, 3·1 운동에 기생이 참여하는 등 근대적 교육을 받지 않은 대중이 참여한 점을 감추어 버리는 기술 방식이다.

이 점에서는 짓교출판 『상술 역사종합』이 “조선의 종교계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또 학생과 시민이 ‘독립 만세’를 외치며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 활동을 벌

였다”라고 기술하고 이와 함께 “그 후 일본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민중도 다수 참여해 운동은 조선 전토와 만주·연해주까지 퍼져 나갔다”라고 덧붙인 것은 3·1 운동에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논리로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전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140 쪽, 3·1 운동에 참여한 여학생 사진도 실었다).

야마카와출판사 『현대의 역사종합: 보기·해석하기·생각하기』는 3·1 운동의 양상과 그에 대한 탄압에 관한 영국 외무장관의 발언을 사료로 실어 3·1 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101 쪽).

또 ‘문화정치’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교과서가 간결한 기술에 그치고 있으나 짓교출판 『상술 역사종합』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일본은 조선인의 언론·집회·결사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통치 방침을 변경했다. 이후 조선인인에 의한 언론·계몽·문화활동을 통한 민족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도 활발해졌다. 한편 일본은 이들 운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고 특히 사회주의운동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을 조선에도 적용해 엄격하게 통제했다. (140 쪽)

사회주의운동이나 치안유지법까지 언급하는 등 고교 교과서 치고는 내실 있는 기술이라 평가된다.

### 3. 학습지도요령의 ‘식민지의 독립’, ‘대중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18 년 고시)」은 항목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중화와 우리들’의 예로 ‘식민지의 독립’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학습지도요령해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식민지의 독립을 택한 경우는 예를 들어 독립국의 수나 식민지 면적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등의 조직이 식민지 문제에 대응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전세계 국가수의 추이나 식민지 독립의 요인 등 학생들이 국제적인 시각·가치관을 발휘해 자료에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생각할 것. 학생들은 그들 정보를 해석하거나 정리하면서 이 시기에 출현한 식민지 독립의 요인과 조건을 고찰한다. (156 쪽)

우선 우과 교과서인 메이세이샤 『우리들의 역사종합』은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의 1914 년 당시의 식민지 영유 면적을 지도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따르면 있으나 타국과 비교해 일본의 식민지 영유 면적을 좁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덧붙여 짓교출판 『상술 역사종합』도 칼럼 「STEP UP 식민지」를 136~137 쪽에 배치해 세계사 속 식민지 문제를 논하고 1914 년 단계의 식민지 영유 면적 비교표를 실었다. 또 이 안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소항목도 두고 있다).

이어서 위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따라 야마카와출판사 『역사종합: 근대에서 현대로』는 「국제연맹규약」(1919년) 중 ‘위임통치령’ 규정과 국제연합의 「식민지와 인민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1960년)을 제시하고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간에는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이는 중요한 학습 내용인 한편 식민지 지배 자체는 오랜 세월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소위 ‘선진국들’이 식민지 지배를 꾸준히 정당화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선진국들’의 방식 전체를 비판하는 시점이 없으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도 역사 속의 부득이한 사건으로 이해되어 버린다.

도쿄서적 『신선 역사종합』의 「식민지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제국주의정책에 의해 광대한 공간에 걸쳐 식민지 지배가 시행된 이 시기 민주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식민지에서의 모순은 도리어 깊어졌다. [중략] 이윽고 식민지에서는 식민지인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독립해 주권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가 퍼져 나갔다”(109 쪽)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서서히 식민지인들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는 식으로 읽힌다. 즉 일정 단계까지 식민지 지배는 ‘필요악’이었다는 흔히 보이는 인식과 결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을 깨는 교과서 기술을 구상할 때에 실마리가 되는 것이 짓교출판 『역사종합』의 칼럼 「신 부전조약을 제정해 보자」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자(192~193 쪽)이다. ‘평화’를 위해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전쟁을 제한하는 방식이 진전된 것을 알 수 있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령 노예제나 식민지 지배 문제를 추궁한 더반 회의(2001년) 등을 다룰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결국 항목 ‘국제질서의 변화나 대중화 문제’는 열강에 있어서의 ‘국제질서의 변화’이며 ‘대중화’도 제국주의국가 측에서 본 현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한 열강 측에서 바라본 역사를 상대화하는 시점이 필요하다.

‘대중화’라는 문제와 관련해 도쿄서적 『상해 역사종합』은 다음과 같이 ‘생활 개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조선에서도 총독부와 조선의 지식인이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협력해 생활 개선에 힘썼다. (123 쪽의 주)

조선박람회에 전시된 문화 주택[사진을 실음: 필자 주], 관혼상제의 간소화, 일하기 편한 의상의 고찰, 영양을 중시한 식생활 개선, 종래의 생활관습을 고치고 일상생활에 합리성을 도입하는 기운이 생활 전반에 퍼져 나갔다. (123 쪽의 주)

‘긴장관계’가 있었다고 기술하고는 있으나 이 정도의 기술로는 일본의 지배 하에서 ‘생활 개선’이 진전되었다고만 읽혀 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대로 ‘긴장관계’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수업에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다면 유의미할지도 모르나 교

육 현장에서 그러한 수업을 전개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도교서적 『상해 역사종합』은 ‘소비문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비문화가 뉴욕, 파리, 도쿄, 타이페이, 서울(경성), 텐진, 상하이 등에서 연쇄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구미 문화를 모방한 첨단 모던 걸은 대중의 소비 의욕을 자극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했다. 대중사회는 제국주의국가들의 식민지 지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연결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아시아의 농민이나 노동자의 일상생활은 세계공황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아 도시와 농촌 또는 도시 내부에서 격차와 혼란이 발생했다.

서울의 소비문화를 다른 제국주의국가들의 도시와 나란히 기술하여 조선에서도 대대적으로 ‘대중화’가 진전된 듯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시아의 농민이나 노동자”의 생활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도시와 농촌’의 격차라는 문제 속에서 기술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제국주의국가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식민지 수탈과 빈곤의 불가시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상과 같이 ‘대중화’라는 시점에서 식민지를 논하려는 작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 4. 짓교출판 『상술 역사종합』의 특징적 기술

짓교출판 『상술 역사종합』의 조선사 관련 기술이 비교적 충실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으나 좀더 심도 있게 이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해 보겠다.

우선 「식민지의 독립—된 측의 시점」(121 쪽)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습지도요령해설」이 권장한 주제인 ‘식민지의 독립’에 따른 칼럼으로 짐작되나 ‘된 측의 시점’에 초점을 맞춰 「학습지도요령해설」의 구조를 상대화하고 있다. “식민지화의 움직임은 지역인들의 움직임과 관련 지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식민지의 독립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현재의 관점은 중요해”라는 대화문을 제시해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일깨우고 있다. 나아가 “……자료 5 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파고다공원에 있는 3·1 운동을 기념한 릴리프야. 가운데 있는 인물은 16 살에 운동에 참여한 유관순이라는 여성이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물음에 더한층 깊이를 주기 위해 배치된 것이 「20 세기의 여성과 남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여기서는 「근우회 선언문」(1927 년)을 소개하고 있다(151 쪽). 조선 여성의 주체적 운동인 근우회와 조선 여성이 처해 있던 억압적 상황을 교과서가 다룬 것은 귀중한 시도이며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하기에는 교재로서 난도가 높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조선 여성이 처한 억압적 상황 즉 민족·젠더·계급의 중층적 억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 없이는 「근우회 선언문」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자칫하면 여성 차별 일반이나 민족 차별 일반의 문제로 논의가 축소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교사에게는 수업의 폭을 확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사용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런데 짓료출판 『상술 역사종합』에서 눈을 끄는 기술을 꼽으면 다음 문장이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식민지 출신 남성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훗날 조선인 대의사(代議士)도 탄생했다. …… 또 조선·타이완에서는 의회 설립 요구 운동이 전개되었다. (147 쪽)

이는 사실로 잘못된 대목은 없으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우파는 ‘내지’ 거주 조선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점을 들어 식민지 지배는 조선인을 평등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의사가 탄생했어도 극소수였고 대다수의 조선인은 선거권에서 배제되었다. 그러한 차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제한된 지면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본문에 기술한 것은 「학습지도요령」의 ‘대중화’ 항목을 의식해서일까.

다음으로 칼럼 「ACTIVE 전쟁을 떠받친 사회」는 『반도 총후의 적성(半島銃後の赤誠)』의 표지를 싣고 이와 함께 가나가와현의 주민자치조직인 조나이카이(町内會)의 제일 조선인 차별이 드러난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시 체제를 조선인의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칼럼을 배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칼럼 「ACTIVE 전쟁의 기억」(172~173 쪽)은 조선에 관해 쓰고 있지는 않으나 흥미롭다. 이 칼럼은 베를린의 ‘슈톨퍼슈타인(걸림돌)’을 소개하고 과거사 왜곡에 맞서 역사적 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 식민지 지배 문제를 현대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힌트가 여기에 있는 듯 보인다. 또 칼럼 「STEP UP 전후 보상」(185 쪽)도 중요하다. 이 칼럼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검정에서 “미해결 문제가 많다”는 기술은 “정부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문제는 많다”로 고쳐졌다).

## 5. 식민지 지배를 비판한 일본인

많은 교과서가 식민지 지배를 비판한 일본인에 관한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일본의 고교생이 식민지 지배를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해 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도 야나기 무넨요시(柳宗悦)와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등이 수업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교과서의 기술들은 지금까지의 수업 내용을 활용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짓료출판 『역사종합』은 이시바시 단잔, 야나기 무넨요시에 더해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까지 소개해 이 주제에 관한 기술을 내실화하고 있다. 다이이치학습사 『신역사종합』은 이시바시 단잔, 야나기 무넨요시에 각각 1 쪽씩 할애해 큰 칼럼으로 다루

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식민지 지배에 비판적인 인물이 있었다 해도 극소수에 불과했던 만큼 과도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또 근래 연구에서는 야나기 무네요시나 이시바시 단잔 등에게 잠재된 식민지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분명 이러한 인물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나 대다수의 일본인은 식민지 지배에 일말의 의구심도 품지 않았다는 인식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미즈서원 『우리들의 역사종합』이 조선사 연구자인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글을 인용한 점은 주목된다(60 쪽). 가지무라는 3·1 운동에 관해 일본인 중 “‘독립’ 주장의 정당성과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한 자는 실로 소수였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시미즈서원 『우리들의 역사종합』은 야나기 무네요시를 1 쪽에 걸쳐 크게 다루고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라의 문화나 말은 어느 쪽이 뛰어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아사카와의 조선의 미에 대한 솔직한 감동이나 조선인들과의 교류는 국경을 넘어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구도까지 넘어서 조선과 일본의 가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SNS 에 의한 정보 전파 등을 통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기 쉬워졌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우수한 점을 찾아내 서로 인정할 때에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교류가 깊어집니다. 민간 차원의 우호를 굳건히 한다면 국가 간의 관계 악화도 타파할 힘이 되지 않을까요. (63 쪽)

일반론에서 보자면 “서로 인정한다”는 적절한 주장일지도 모르나 그 위에 식민지 지배 문제에 관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사카와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구도까지 넘어섰는” 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식민지 지배는 타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부정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K-POP 이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문제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발이 도리어 거세지고 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한들 과연 일본과 한국 간의 진정한 우호로 이어질까(이 점에 관해 내 세미나의 학생들이 발표한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사회학부가 토 케이키 세미나 편 『‘일한’의 응어리와 대학생 나(「日韓」のモヤモヤと大学生のわたし)』 오쓰키서점(大月書店), 2021 년을 참조하길 바란다. 식민지 지배 책임을 뺀 한일 문화 교류의 한계성을 논하고 있다).

### 맺음말

‘역사종합’ 교과서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나 검정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 식민지 지배에 관한 고교 교과서의 기술은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다. 피해 실태의 사료를 인용하는 등, 여러 아이디어를 구사한 교과서도 보이나 ‘대중화’가 키워드로 포함된 타인지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이 전달되지 않는 기술이 적지 않았다. 이 연장선상에서 전체적으로 식민지 경제 지배 실태, 수탈에 관한 기술은 충분하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이 충분히 기술되지 않으면 조선 민족이 어째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지 학생들은 잘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을 전제로 앞서 언급한 문제도 생각해 보겠다.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을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역시 이 문제의 중요성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식민지 지배가 가혹했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당시로서는 부득이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학생들에게 식민지 지배의 실태를 아무리 전달해도 “당시는 합법이었다”라는 인식에 머물고 만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식민지 지배는 당시로서는 부득이했다는 인식이 교과서를 통해 강화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또 역사 속에는 잔혹한 사건이 태산같이 많으며 그러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조선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왜소화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식민지 지배의 문제성이 학생들에게 전해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해법 중 하나는 식민지 지배를 불법이라고 호소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한국사의 문맥에서 기술을 내실화하고 이와 함께 세계의 반제국주의운동을 정확하게 기술해 이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청년들의 역사 인식을 파악할 때에 힌트가 될 만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겠다. 얼마 전 학생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고교시절 동학농민운동 등의 저항운동을 배울 때 ‘불온한 인간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고 한다. 종교에 대한 편견도 있었을 것이나 현재 일본의 고교생이나 학생 중에는 저항운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이 편견을 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나 저항운동에 참여한 구체적인 인물을 어떻게 역사 교육에서 제시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봐야할 대목이다. 교재로서의 난도는 높았다고 지적했으나 「근우회 선언문」 등을 실은 것은 그러한 방향성에 부합한다. 이처럼 조선인 측의 주체적 영위를 충실하게 기술해 그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日本の高校歴史教科書における朝鮮植民地支配の記述とその特徴  
——「歴史総合」を中心に——

加藤圭木

はじめに

本報告の目的は、2022年度から使用が開始された日本の高等学校「歴史総合」の教科書における朝鮮植民地支配の記述を検討することである。

「歴史総合」は今年度新設された必修科目で、従来の「世界史」と「日本史」を統合したものである（「歴史総合」の後に、選択科目である「世界史探究」「日本史探究」を学習することになる）。「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解説」（以下、「学習指導要領解説」とする）によれば、次のように定義されている。

近現代の歴史の変化に関わる諸事象について、世界とそこにおける日本を広く相互的な視野から捉え、資料を活用しながら歴史の学び方を習得し、現代的な諸課題の形成に関わる近現代の歴史を考察、構想する科目〔後略〕

近現代史を中心に、世界のなかの日本を捉えるこの科目は、日本の侵略戦争や植民地支配に対する高校生の認識形成にあたって、重要な役割を果たすものと考えられる。

「歴史総合」では、「現代的な諸課題の形成に関わる歴史の大きな変化」として、「近代化」、「国際秩序の変化や大衆化」、「グローバル化」に注目し、これに基づいて構成するとしている（「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ならびに「学習指導要領解説」）。

本報告との関わりで言えば、特に第一次世界大戦後の変化である「国際秩序の変化や大衆化」の部分が該当する。この枠組みが朝鮮植民地支配記述にいかなる影響を与えているのかについても考察したい。

検討対象とするのは、現在発行されている11種である（帝国書院『明解歴史総合』、明成社『私たちの歴史総合』、第一学習社『高等学校歴史総合』、第一学習社『高等学校新歴史総合：過去との対話、つなぐ未来』、山川出版社『歴史総合：近代から現代へ』、山川出版社『現代の歴史総合：みる・読みとく・考える』、山川出版社『わたしたちの歴史：日本から世界へ』、東京書籍『新選歴史総合』、東京書籍『詳解歴史総合』、実教出版『詳述歴史総合』、実教出版『歴史総合』、清水書院『私たちの歴史総合』）。すべての教科書を満遍なく分析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ご了承いただきたい。

なお、本報告では、他報告との重複を考慮して、教科書検定において攻撃対象となっている戦時体制期や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についてはとりあげていない。

## 1. 朝鮮の植民地化に関する記述について

朝鮮の植民地化過程については、大部分の「歴史総合」の教科書は、義兵闘争や「ハグ密使事件」などの朝鮮側の抵抗と、それに対する日本側の弾圧に言及し、「韓国併合」を記述している。

朝鮮植民地化過程については、「歴史総合」教科書は概ね従来の教科書（以前の「日本史

A)、「日本史B」など)と同じレベルの情報が記述されているといえる。ただし、私が大学生に話を聞くと、高校の時に朝鮮植民地化については習ったものの、「領土が広がった」程度にしか感じなかったという声が少なくない。したがって、朝鮮植民地化の暴力性、問題性を生徒に十分に伝えようとするのであれば、なんらかの工夫が必要である。

この点で、清水書院『私たちの歴史総合』はマッケンジーの『義兵闘争から三・一独立運動』を引用し、朝鮮人殺害の状況を示すなどの工夫が見られ注目される(45頁)。単なる「通史」叙述ではなく、具体的な史料に触れながら、植民地化の実態を考えさせることが必要である。他の教科書でも積極的に取り入れられるべき手法であると考えられる。

また、第一学習社『高等学校歴史総合』は、日露戦争下の「日韓議定書」で日本が土地収用することを認めさせたことを記すなど、比較的詳しい記述となっている(91頁)。

植民地化の暴力性が生徒に伝わらないという問題に関して、大部分の教科書が採用している「韓国併合」という用語の問題についても考えておきたい(なお、右派教科書の明成社『私たちの歴史総合』は「日韓併合」という用語を採用しているが、これは日本と韓国が「対等」に併合したという認識に基づいていると考えられ、極めて問題である)。日本の歴史学研究ではカギ括弧をつけて「韓国併合」を用いることが多いので、教科書記述ではこれを踏まえて「韓国併合」という用語を採用しているのであろう(ただし、教科書ではカギ括弧はつけられない)。「韓国併合」は大韓帝国の廃滅、強制的な植民地化という実態を覆い隠すために日本側によってつくられた用語であるから、これをそのまま採用することは問題が多い。「韓国併合」という用語によって、植民地支配の暴力性が高校生には伝わらないことが多いようである。これは教科書記述の問題だけでなく、日本の歴史学研究の問題でもあるから、議論を進める必要がある。

この点で注目されるのは、「韓国併合条約を強要」したと明確に述べている第一学習社『高等学校歴史総合』・山川出版社『歴史総合：近代から現代へ』である。他社の教科書も抵抗を抑えて植民地化したことがわかる記述にはなっているものの、これらの教科書記述は強制性を明確にしているといえる。ただし、条約の無効性や植民地支配の不法性までを明確にしているとはいえない。

もう一つ、考えるべきは、朝鮮植民地化の歴史が配置されている章である。多くの教科書は日露戦争以降の東アジア史を叙述する節で「韓国併合」を記述しているが、東京書籍『新選歴史総合』は「植民地支配と植民地の近代」という節に記述し、イギリスの支配と日本の支配を並べて記述している。日々、学生と接していると「高校で学習した際に、欧米の植民地支配には悪いイメージがあったけれど、日本の植民地支配はほとんど印象がない。日本の「韓国併合」は欧米ほどひどいものではなかったと思っていた」という声を聞くことが多い。そのような中で、世界史の流れの中で、イギリスの支配と一緒に記述することは意味がある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他方で、「日本だけではなく、欧米もみんなやっていた」という形で、日本の植民地支配の問題を軽視する認識にもつながりかねないので、注意を要する点ではある。

この点に関連して、朝鮮植民地化を扱ったページの直後に「帝国主義とその影響」というコラムを配置している第一学習社『高等学校歴史総合』は効果的である。列強の帝国主義分割の様相とともに、そこに「新入り」として現れた日本を描いたビゴーの風刺画を紹介したり、レーニンの『帝国主義論』を紹介するなどしている。さらに、その後には日本を対象としたものではないが『『文明化の使命』と植民地支配』というコラムが続く。植民地支配正当化の論理を読み解くものである(108~109頁)。

なお、複数の教科書が、景福宮の前に建てられた朝鮮総督府庁舎の写真を掲載している。山川出版社『わたしたちの歴史：日本から世界へ』では、「なぜ、日本はこの場所に総督府を建てたのだろうか?」(59頁)との問いが示されており、有効活用が可能な教材といえよう。

ところで、複数の教科書が、インド独立運動の指導者ネルーの文章を引用している。たとえば、帝国書院『明解歴史総合』はネルーが日露戦争の「日本の勝利」に期待したものの、日本が「侵略的帝国主義諸国」の一つとなり、朝鮮が「にがい結果」をなめたことから失望した様子が紹介されている(79頁)。これは、「学習指導要領解説」において「特に、日露戦争における勝利がアジア諸民族の独立や近代化の運動に刺激を与えたことに気付くようにする」(150~151頁)とあることに対応し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学習指導要領解説」のこの認識は日露戦争の侵略性を見えなくするものである。帝国書院『明解歴史総合』の上の記述は、当初こそ日本に対する期待が高まったものの、それが裏切られたということを示すことで、「学習指導要領解説」の歴史認識を相対化することを試みている。また、これ以外にも帝国書院『明解歴史総合』はベトナムのファン=ボイ=チャウが日本に対して失望した様子をコラム「アジア諸国の期待と失望」で紹介している(79頁)。

安重根についても多くの教科書で言及されている。特に第一学習社『高等学校歴史総合』が、「義兵闘争の指導者の一人である安重根」と記している点は注目される。これは、安を「テロリスト」と攻撃する日本の一部意見に対抗する意味があるだろう。

また、実教出版『詳説歴史総合』は、「安重根の東洋平和論」を測注で紹介している(107頁)。「テロリスト」という見方に対して、このように安重根の思想を伝えることは有効な対抗方法といえるだろう。

一方、右派教科書である明成社『私たちの歴史総合』は、側注で千葉十七が安重根の「東洋平和の心情に心打たれ」安を供養したエピソードを記している。そして、「安と千葉の友情の証として千葉の菩提寺に顕彰碑が建てられた」として顕彰碑の写真を掲載している(65頁)。この記述の意図は必ずしも明確ではないが、安重根の日本への鋭い批判を「友情」の物語に回収するところにあるのかもしれない。

## 2. 朝鮮支配の実態について

「歴史総合」の教科書全体として植民地支配のあり方については、記述はあまり多くない。そのような中で、朝鮮植民地支配について比較的記述が厚いのは、東京書籍『詳説歴史総合』と実教出版『詳説歴史総合』である。まず、前者を見てみよう。

日本の植民地では、台湾総督府、朝鮮総督府という統治機関が置かれ、それぞれの長が立法権をふくむ大きな権限を持ち、本国の帝国議会で制定された法律は一部しか施行されなかった。また植民地では、人々に選挙権も与えられず、帝国議会上議員を送り出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総督は当初いずれも軍人であり、特に朝鮮では憲兵が警察行政を担う状態が第1次世界大戦後まで続いた。このように、日本の支配地域には、複数の法体系が並立して存在した。また、植民地では初等教育の整備が優先され、高等教育機関の設置は遅れた。

経済的には、台湾は米・砂糖など、朝鮮は米などの供給地として位置づけられ、台湾製糖業に日本企業が進出するなど、日本本国との経済的結びつきが深まった(81頁)

植民地支配の軍事支配としての性質、法的構造について、簡潔ながらも、相対的には多く記されている方である。次に、「初等教育の整備が優先された」といえるほど、日本は教育を整備していないので、この点は問題である。また、同化教育に言及がない点も課題である。経済支配については土地調査事業について記述がなく、また、植民地地主制や朝鮮民衆の貧窮化が進んだことへの言及がない点も気になる。

次に、実教出版『詳説歴史総合』の1910年代に関する記述を見ていこう。

併合後、日本は民族運動を徹底的に弾圧し、日本語教育を中心とした「同化」教育をおこなった。また、総督府は土地調査事業を通して、土地所有権の確立と地稅徴収の安定化をはかった。統治により人々の生活慣習にまで改変が及び、人々の不満は積もっていた。

土地調査事業についてはもう少し踏み込んだ記述がほしいところである。また、生活慣習の改変は重要だが、人々の不満は慣習への介入によるものだけではなかつたろう。憲兵警察制度など軍事支配の実態に踏み込むことも必要である。

これら以外の教科書は概ねシンプルな記述となっているが、土地調査事業については相対的にその歴史的な意味が伝わる記述になっている。帝国書院は土地調査事業について、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朝鮮総督府が、土地所有権と納稅額の確定などを目的に実施した調査。これにより、多くの朝鮮人小作が諸権利と小作権を失い、日本人地主に土地が集中す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79頁)

また、第一学習社『高等学校歴史総合』は、「また、土地調査事業を実施し、所有権が確認できないとして多くの朝鮮の農民から土地をうばった」(107頁)と記述しようとしたが、検定により「また、土地調査事業により、所有権が確認できないとして土地を失い小作人となる農民も出た」と直させられた。

なお、土地調査事業の実態を理解することはかなり難易度が高いと考えられるので、農民生活の実態を示すような史料を引用するなどの工夫が必要ではないだろうか。

日本による経済支配、収奪を論じることは、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民衆生活の実態への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在日朝鮮人の形成を理解するうえでも重要である。在日朝鮮人を「自

発的」な移民だとみなす意見が日本では強まっているが、前提として植民地支配の結果としての貧困の問題をきちんと記述する必要がある。

この点において東京書籍『詳解歴史総合』の「韓国併合以降、経済的な豊かさを求めて日本に渡る朝鮮人は増えた」（115頁）という記述は、朝鮮人が日本に渡らざるをえなかった構造的な要因を不可視化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次に3・1運動について検討する。まず、全体として1910年代の支配政策に対する記述が薄い上に、3・1運動については「民族自決」の国際的潮流に影響されたという記述の仕方が目立つので、朝鮮植民地支配の暴力性が運動の背景にあったことが理解しにくい。運動の外在的な要因ばかりが強調され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3・1運動の記述の仕方としては、運動の展開と弾圧の様相を簡潔に記しつつ、「独立宣言」を引用した教科書が多い。朝鮮人側の言葉を史料として読ませることは学習上の効果が大きいと思われる。また、柳寛順に言及した教科書もあり（実教出版『詳述歴史総合』、第一学習社『高等学校歴史総合』）、運動に参加した具体的な人物をとりあげるのは重要である。なお、第一学習社『高等学校歴史総合』は「彼女〔柳寛順〕も近代的な女子教育を受けていた」と記し、「柳寛順ら三・一独立運動に参加した女子学生は、近代的教育を受けるなかで、どのような使命感を抱いていたのだろうか」との問いを投げかけている。重要な問いだと思うが、3・1運動に女生が参加したことなど、近代的教育を受けたわけではない大衆が参加したことが見えにくくなってしまいう記述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この点では、実教出版『詳述歴史総合』が「朝鮮の宗教界代表らが独立宣言書を発表し、また、学生や市民が「独立万歳」をさげんでソウル市内で大規模な示威活動をおこなった」と記述するとともに、「その後、日本の統治に不満をいだいていた民衆も多数参加し、運動は朝鮮全土および満洲・沿海州にもひろがった」と書いていることは、3・1運動にさまざまな主体がそれぞれの論理で主体的に参加したことが伝わる記述となっているといえる（140頁、3・1運動に参加した女子学生の写真も掲載している）。

山川出版社『現代の歴史総合：みる・読みとく・考える』は、3・1運動の様相とそれに対する弾圧に関するイギリス外相の発言を史料として示すことで、3・1運動について理解が深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101頁）。

なお、「文化政治」への転換については多くの教科書は簡潔な記述にとどまっているが、実教出版『詳述歴史総合』は次のように比較的詳細な記述をしている。

日本は朝鮮人の言論・集会・結社などの制限を緩和するなど統治方針を変更した。以後、朝鮮人による言論・啓蒙・文化活動を通じた、民族運動や、社会主義運動も活発化した。

日本は、一方でこれらの運動に対して監視を強め、とくに社会主義運動に対しては、治安維持法を朝鮮にも適用してきびしく取り締まった。（140頁）

社会主義運動や治安維持法にまで言及するなど、高校教科書としては充実した記述と評価できる。

### 3. 学習指導要領における「植民地の独立」、「大衆化」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 30 年告示）」は、「国際秩序の変化や大衆化と私たち」の項目の例として「植民地の独立」を挙げている。これについて、「学習指導要領解説」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植民地の独立を取り上げた場合には、例えば、教師が、独立国の数や植民地面積の変化を示す資料、国際連盟や国際連合などの組織における植民地問題への対応に関する資料などを提示し、世界の国の数の推移や植民地の独立の要因など、生徒が歴史的な見方・考え方を働かせて資料から情報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指導を工夫する。生徒は、それらの情報を読み取ったりまとめたりしながら、この時期における植民地の独立の要因や条件を考察する。（156 頁）

まず、右派教科書の明成社『私たちの歴史総合』は、イギリス、ロシア、フランス、アメリカ、ドイツ、日本の 1914 年時点での植民地領有面積を図で示している。「学習指導要領解説」に沿ったものであるが、他国と比して、日本の植民地領有面積が狭いことを示す意図があると思われる（なお、実教出版『詳述歴史総合』もコラム「STEP UP 植民地」136～137 頁を設けて、世界史における植民地の問題を論じ、1914 年段階での植民地領有面積の比較表を載せている。また、この中で「日本の植民地支配」という小項目を設けている）。

次に、上の「学習指導要領解説」に基づいて、山川出版社『歴史総合：近代から現代へ』では、「国際連盟規約」（1919 年）の「委任統治領」に関する規定と、国際連合による「植民地と人民に独立を付与する宣言」（1960 年）を示し、国際連盟と国際連合では、植民地支配に対して考え方が異なっていたことを生徒に考えさせようとしている。

これは重要な学習内容であると思う一方で、植民地支配そのものは長らく国際社会において「合法的」におこなわれたという認識を強化する可能性は大きいだろう。もちろん、いわゆる「先進国」が植民地支配を正当化しつづけてきたことは事実であるが、そうした「先進国」のあり方全体を批判するような視点を持たなければ、日本の植民地支配も歴史のなかのやむをえない出来事として理解されてしまうのだろう。

東京書籍『新選歴史総合』の「植民地と民主主義」というコラムでは、「帝国主義政策によって広大な空間で植民地支配があったこの時期、民主主義が拡大するなかで、かえって植民地における矛盾は深まった。〔中略〕やがて、植民地では、植民地人が自由を獲得するためには独立して主権国家を建設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考え方が広まることになった」

（109 頁）と述べている。これは、植民地支配を受ける中で徐々に植民地の人々の自由への意識が高まっていったというふうに読める。つまり、ある段階まで植民地支配は「必要悪」であったというようなありがちな認識と接合しかねない危険性があると思われる。

こうした認識を打ち破る教科書記述を構想しようとする際に、ヒントとなるのが実教出版『歴史総合』のコラム「『不戦条約を新たにつくってみよう』というテーマで考えてみよう」

（192～193 頁）である。「平和」のために人びとの努力がおこなわれたこと、戦争を制限する方式が進歩していったことがわかる記述に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形で、たとえば、奴隷

制や植民地支配の問題を問うたダーバン会議(2001年)などをとりあげることができれば、効果的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結局のところ「国際秩序の変化や大衆化への問い」という項目は、列強にとっての「国際秩序の変化」であるし、「大衆化」も帝国主義諸国家側における現象だった場合が多いだろう。そのような列強側から見た歴史を相対化するような視点が必要である。

「大衆化」という問題に関連して、東京書籍『詳解歴史総合』では、次のように「生活改善」について記述されている。

朝鮮でも総督府と朝鮮の知識人とが緊張関係を持ちながら、協力して生活改善に取り組んだ。(123頁の注)

朝鮮博覧会に展示された文化住宅〔写真が掲載されている：加藤注〕 冠婚葬祭の簡素化、働きやすい衣装の考察、栄養を重視した食生活の見直し、従来の生活慣習を見直し、日常生活に合理性を問い入れる機運は生活すべてにおよんだ。(123頁の注)

「緊張関係」があっ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とはいえ、これだけの記述では日本の支配下で「生活改善」が進んだと読まれてしまうことが憂慮される。逆にいえば「緊張関係」が実際になにを指すのかについて授業で深めることができれば、有意義かもしれないが、そのような授業を現場で展開することは困難であろう。

さらに、東京書籍『詳解歴史総合』では「消費文化」について次のような記述がある。

消費文化がニューヨーク、パリ、東京、台北、ソウル(京城)、天津、上海などで連鎖していくなかで、欧米文化を模倣した先端的なモダンガールは、大衆の消費意欲を刺激するために利用されることもあった。大衆社会は、帝国主義諸国の植民地支配のなかで、グローバルなつながりも持つようになった／しかし、アジアの農民や労働者の日常生活は世界恐慌によって深刻な影響を受け、都市と農村、あるいは都市内部で格差や混乱が生じた。

ソウルの消費文化が他の帝国主義諸国の都市と並列されることによって、朝鮮においても大幅に「大衆化」が進んだというイメージを与える記述である。「アジアの農民や労働者」の生活に関する言及はあるものの、それらは「都市と農村」の「格差」という問題として記されているのであり、これは帝国主義国にもあてはまることである。植民地の収奪と貧困が不可視化されることが憂慮される。

以上のように、「大衆化」という切り口で植民地を論じようとすることには、多くの問題があると思われる。

#### 4. 実教出版『詳述歴史総合』の特徴的な記述について

実教出版『詳述歴史総合』の朝鮮史関連記述が比較的充実しているのは、これまでも見てきたとおりであるが、ここではさらに同教科書の記述を検討してみたい。

まず、「植民地の独立——された側からの視点」(121頁)というコラムがある。先述のとおり「学習指導要領解説」で「植民地の独立」というテーマが推奨されていることを受けて

のコラムであると考えられるが、「された側からの視点」を掲げることで、「学習指導要領解説」の枠組みを相対化している。「植民地化の動きは地域の人々の動きと関連して考えなくちゃいけないのかな」「植民地からの独立はどうして実現したのか、という問いにもいまの観点は大事なかな」という会話を示すことで、支配された人びとの動向に気付かせようとする。さらに、「……資料5は韓国の首都ソウルのパゴダ公園にある、三・一運動を記念したレリーフなんだ。中心にいるのは16歳で運動に参加した柳寛順という女性。女性にとって植民地から解放されるってどういうことだったんだろうね」という問いを発している。

この問いをさらに深めるために設定されているのが、「20世紀の女性と男性」というコラムである。この中で「権友会宣言文」（1927年）が紹介されている（151頁）。朝鮮女性の主体的な運動である権友会、そして朝鮮女性が置かれた抑圧状況を、教科書でとりあげるのは貴重な試みであるし、生徒の思考の幅を広げさせようとする記述といえる。

一方、この記述の重要性を確認した上で、教材としての難易度が高いことも否定できない。朝鮮女性が置かれている抑圧状況、すなわち、民族・ジェンダー・階級による重層的抑圧について、具体的な知識を持たない限り、「権友会宣言文」を読み解くことは難しい。ともすれば、女性差別一般、あるいは、民族差別一般の問題として、議論が矮小化されてしまうことも考えられる。専門的知識を持つ教師にとっては授業の幅を広げるものだろうが、そうでない教師にとっては使いにくいかもしれない。

さて、実教出版『詳述歴史総合』で目を引くのは次の記述である。

日本国内に居住する植民地出身の男性も選挙権をもつこととなり、のちには朝鮮人の代議士も誕生した。……また朝鮮・台湾では、議会設立の要求運動がなされた。（147頁）

これは事実としては誤りではないが、慎重さを要する事項である。日本の右派は、「内地」在住の朝鮮人に選挙権が付与されたことをもって、植民地支配は朝鮮人を平等に扱ったという主張をすることが少なくない。代議士が誕生したといってもごく少数であったし、大多数の朝鮮人は選挙権から除外されていた。そうした差別の構造を丁寧に示しておかないと、危ういように思われる。紙幅が限ら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わざわざ本文中で記述したのは、「学習指導要領」の「大衆化」という枠組みを意識してのことなのだろうか。

次に、「ACTIVE 戦争をささえる社会」というコラムでは、『半島銃後の赤誠』の表紙を示すとともに、神奈川県内の町内会における在日朝鮮人に対する差別を示した史料を提示している。このように戦時体制を朝鮮人の視点で具体的にイメージできるようなコラムを設けたことは重要である。

最後に、コラム「ACTIVE 戦争の記憶」（172～173頁）は朝鮮をとりあげたものではないが、興味深い。ここでは、ベルリンの「躓きの石」が紹介されたり、過去の歴史が歪められていることに対して歴史研究が果たすべき役割が示されていたりする。朝鮮植民地支配の問題を現代の日本に生きる人々が考える際のヒントがここにはあるように思われる。また、コラム「STEP UP 戦後補償」（185頁）も重要である。この中で、日本軍「慰安婦」問題な

ど解決されていない問題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ただし、検定で「未解決の問題は多い」との記述を、「政府は解決済みであるとしているが、問題は多い」と修正させられている）。

#### 5. 植民地支配を批判した日本人

多くの教科書が、植民地支配を批判した日本人に関するコラムを掲載している。日本の高校生に植民地支配を自分事と考えさせるための工夫として、これまでも柳宗悦や浅川巧、石橋湛山などが授業でとりあげられてきた。これらの教科書記述は、これまでの授業実践を活かしたものだといえるだろう。

特に、実教出版『歴史総合』は、石橋湛山、柳宗悦に加えて、金子文子までとりあげており、このテーマに関する記述が充実している。第一学習社『新歴史総合』は、石橋湛山、柳宗悦をそれぞれ1頁ずつの大きなコラムでとりあげている。

ただし、私は、植民地支配に批判的だった人がいたとしても、それはごく少数だったのだから、過度に強調すべき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また、近年の研究では柳宗悦や石橋湛山らに潜む植民地主義が強調さ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こうした人物をとりあげることも必要だろうが、大多数の日本人は植民地支配に対して全く疑問を抱いていなかったことに対する認識を抜きにしてはならない。

この点では、清水書院『私たちの歴史総合』が朝鮮史研究者・梶村秀樹の文章を引用していることは注目される（60頁）。3・1運動に関して日本人の中で「独立」の主張の正当性と意味の重要性を認識した者は、本当に少数だった」と梶村は書いているのである。

その一方で、清水書院『私たちの歴史総合』は柳宗悦を1頁にわたって大きく取り上げ、次のように記述している。

国の文化や言葉には、どれが優れてどれがおとっているなどはありません。浅川の朝鮮の美に対する素直な感動や、朝鮮の人々との交流は、国境をこえ、支配者と被支配者の枠組をもこえて朝鮮と日本の架け橋となったといえます。現代は、SNSでの情報発信などを通して、国境をこえて人と人がつながりやすくなりました。自分の価値観をおしつけるのではなく、相手の優れた点を見だしてたがいに認め合うことで、国や民族の枠にとらわれない交流が深まります。民間レベルでの友好を強固なものにすることは、国家間の関係悪化も打破する力とな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63頁）

「たがいに認め合う」は一般論としては適切な主張かも知れないが、ことに植民地支配の問題に関して、このような展望を示すことが妥当なのかは吟味される必要がある。浅川が真の意味で「支配者と被支配者の枠組をもこえ」たのかについても、検証が必要である。植民地支配は他民族の文化や言葉を否定したのだから、それを乗り越えることはもちろん大切である。だが、現在 K-POP が日本の若者のあいだで圧倒的な人気を獲得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むしろ歴史問題においては韓国に対する反発が強化されている。上記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生徒に伝えたところで、本当の意味での日本と韓国の友好には結びつか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この点に関して、私のゼミの学生がまとめた一橋大学社会学部加藤圭木ゼミ

ミナール編『「日韓」のモヤモヤと大学生のわたし』大月書店、2021年を参照されたい。植民地支配責任を抜きにした日韓文化交流の限界性について論じている)。

おわりに

「歴史総合」教科書からは、「学習指導要領」や検定の制約を受けながらも、朝鮮植民地支配について生徒に伝えようとする著者たちの努力の痕跡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た。

とはいえ、依然として朝鮮植民地支配に関する高校教科書の記述は十分とはいええない。被害実態の史料を引用するなど工夫している教科書もあるとはいえ、「大衆化」がキーワードとなっているせいか、植民地支配の暴力性が伝わらない記述が少なからず見られた。これと関係するが、全体として植民地の経済支配の実態、収奪は十分に叙述されていない。

植民地支配の暴力性が十分に記述されなければ、朝鮮民族がなぜ謝罪と賠償を要求するのか、生徒は理解しにくいように思われる。植民地支配の暴力性に関して、より具体的に伝えるための工夫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以上を前提として、その先の問題についても考えておきたい。それは、植民地支配の暴力性を記述するだけでは、なお生徒に十分にこの問題の重要性が伝わらないという問題である。学生から多く出される意見は、植民地支配がひどいものだったことは理解するけれど、当時としてはやむをえ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認識を持つ学生たちに対しては、どれだけ植民地支配の実態を伝えたとしても、「当時は合法だった」という認識になってしまう。上述したように、植民地支配は当時としてはやむをえな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認識が教科書を通じて強化される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また、歴史のなかには残虐なことは山ほどあるとして、そのようなエピソードの一つとして朝鮮植民地支配の歴史は矮小化されてしまう傾向がある。どのようにすれば植民地支配の問題性が生徒に伝わるのか、そのためにいかなる工夫ができるのだろうか。

これは容易に答えが出る問題ではないが、解決策の一つは植民地支配を不法と訴えた人びとの動向を丁寧に記述することであろう。朝鮮史の文脈で記述を充実させるとともに、世界の反帝国主義運動をしっかりと記述し、これらの正当性が理解できるような記述と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最後に日本の若者の歴史認識を考える際にヒントとなるエピソードを紹介したい。先日、学生たちに話を聞いたところ、高校時代に東学農民運動などの抵抗運動を学んだ際に、「あやしげな人たち」という印象を抱いたということを知ってくれた。宗教への偏見もあるだろうが、現在日本の高校生や学生は抵抗運動そのものに対してマイナスの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と感じることが少なくない。これを打ち破るのは決して容易ではないが、抵抗した具体的な人間の姿をいかに歴史教育のなかで提示していくのが問われているのだと思う。

教材としての難易度は高いと指摘したものの、「権友会宣言文」などをとりあげることは、そうした方向性に沿うものである。朝鮮人側の主体的な営為を分厚く記述し、それに対して生徒が共感できるような工夫が求められているのであろう。



# 토론

**신가영** (연세대)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홍종욱** (서울대)

## “일본 고등학교 ‘탐구’ 교과서의 한국근대사 서술 분석”에 대한 토론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2017년 3월 31일 문부과학성은 독도와 다오위다오(釣魚島)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한 초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확정했다.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실제 사회과 교과서의 적용은 초등학교가 2020년(2019년 검정), 중학교가 2021년(2020년 검정), 고등학교가 2022년으로 계획되었다. 2018년 7월 17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목적을 설명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을 발표했다. 2018년 7월 일본 사회과(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은 2017년 6월 일본 사회과(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과 매우 유사하였는데, 일본은 영토에 대해서 고유영토론을 강화하면서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일본은 2018년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근거하여 고등학교의 새로운 필수과목으로 ‘역사총합(歷史總合)’과 ‘일본사탐구’를 신설했다. 역사총합은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국내외적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배우는 새로운 과목이고, 일본사탐구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전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안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고 추구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가 아시아 등 여러 민족에 희망을 주었다고 가르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본은 국내외 정치적 문제 때문에 독도를 포함한 과거 역사를 사실과 다른 역사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은 ‘통제’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데, 그 근간이 흔들려 국가의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일본은 역사교과서에 한국과 중국의 주장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학생은 일본 정부 견해를 절대시하여 상대국에 대한 적대감을 줄 수 있다. 결국 교과서는 왜 갈등이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생각하도록 돕지 못할 것이다.

1.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총합과 탐구의 교육적 방향성이 무엇인가?
2. 일본사와 세계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3. 2년에 걸쳐서 검정을 하는데 왜 1년에 모든 것이 끝나는가?
4. 교과서 분석 논문을 교과서 분석에서 전환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을 어떻게? 액티브 러닝의 특징?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조선 식민 지배의 기술과 그 특징”에 대한 토론

홍종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 1. 역사 교과서 집필을 둘러싼 고민과 갈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는 한마디로 가려버릴 수 없는 교과서를 둘러싼 여러 주체의 고민과 갈등을 느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먼저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교과서 서술의 긴장 관계를 잘 드러냈습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아시아 민족들의 독립과 근대화 운동에 자극을 준 점을 기술하라고 했지만, 제국서원 교과서는 일본이 침략적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조선을 침략한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식민지의 독립’에 대한 내용을 따르면 식민 지배를 합법적인 것, 부득이한 것, 필요악으로 서술하게 될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의 침략성을 완화하고 전후 보상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검정이 개입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나 검정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과서 집필이 단순히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의 대립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환기해 주었습니다. 비판적 역사학자들이 다수 필자로 참여한 실교출판 교과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민 지배 관련 서술이 충실하지만 그러다 보니 식민 지배 서술의 난점이 드러난 것도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대중의 통념에 맞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보는 일본 사회 일각의 시선을 거슬러 여러 교과서에서 안중근을 의병투쟁의 지도자, 동양평화론의 사상가로 그렸습니다. 한국 역사 교과서는 과연 정부의 지침이나 검정, 나아가 대중의 때로는 옳지 않은 시선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 2. 식민 지배의 보편성과 그에 대한 비판

일본 식민 지배의 잔혹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식민 지배라는 세계사적 보편적 현상 속에 위치 짓고 이를 비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사와 세계사의 결합이라는 역사총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에서는 “한국병합이라는 용어는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이 고교생에게 전달되지 않는 큰 원인”이라고 보고 “조약의 무효성이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까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병합 조약의 무효성이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은 일본 역사학계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런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 통치를 식민 지배라는 세계사적 현상의 일환으로 위치 짓고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도 “‘선진국들’의 방식 전체를 비판하는 시점이 없으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도 역사 속의 부득이한 사건으로 이해되어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정 단계까지 식민지 지배는 ‘필요악’이었다는 흔히 보이는 인식”은 잘못이지만 “식민지 지배 자체는 오랜 세월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는 인식”은 안타깝게도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 국제법으로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종의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로서 예컨대 과거에 존재한 신분제나 여성 차별처럼 과거 식민 지배를 지금의 민주주의와 인권 기준에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발표에서 언급한 2001년 더반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 3. 식민지 근대론 -수탈론에서 차별론으로-

200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의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는 식민지 근대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민지를 부정적으로 근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식민지=근대>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식민 통치에 대한 비판도 ‘수탈’을 고발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을 지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는 “조선에서도 대대적으로 대중화가 진전된 듯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중화’라는 시점에서 식민지를 논하려는 작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식민지 조선에서도 ‘대중화’라고 불릴 만한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대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다루기보다는 식민지에서 대중화의 특징을 예컨대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에서 ‘양식(style, mode)으로서의 근대’의 확산을 부인하기보다 그것의 차별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 식민지, 식민주의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본 본국과 식민지 조선의 차별을 생각할 때 참정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민지에서는 사람들에게 선거권도 부여되지 않았고 제국의회에 의원을 낼 수 없었다.”는 교과서 서술은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식민지 출신 남성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훗날 조선인 대의사(代議士)도 탄생했다.”는 서술은 식민지에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 압도적 다수의 존재를 가려 잘못된 역사상을 제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발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식민지 조선에서 “초등교육이 정비가 우선되었다”는 서술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일본과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1945년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 그러다 보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진학률의 차이가 컸다는 점 등을 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피식민자의 세계사는 가능한가

근대 세계사에서 식민지를 가진 나라는 구미 열강과 일본 등 13개국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식민지, 종속국에 살던 ‘대중’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피식민자는 지배와 수탈의 대상이었지만 당연하게도 자신의 삶의 주체였습니다. 1970년 일본조선연구소에서 활동한 다나가 아키라(田中明)는 “조선을 문화의 총체로서 독립한 역사의 소유자”로 파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sup>1)</sup> 피해자, 저항자로서만 아니라 전통, 근대, 식민지 지배가 얽힌 한국인의 삶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山田明, 「朝鮮文学への日本人のかかわり方」, 『文学』 38-11, 1970.11., 93~94쪽, 장문석,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27, 2022.8., 참조.

피식민자의 삶을 세계사 서술 속에 녹여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발표에서는 역사총합 교과서에서 식민지 관련 서술이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중화’라는 대단원에서 다뤄진 점을 들면서 “이 짜임새가 조선 식민지 지배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유의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대중화’라는 주제와 구성뿐만 아니라 세계사라는 연대기적 서술 자체가 지배자, 제국 중심의 서술을 틀 짓는 측면이 큼니다. 한국을 문화의 총체이자 독립한 역사의 소유자로 파악하고자 한 다나카 아키라는 “조선문학은 그러한 작업의 유일한 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학의 근본적인 고민이 요청됩니다.

